

주민수요에 부응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

저자

고승희 외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 주요연구내용

이 연구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수요를 점검하고 이를 위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치경찰제도 관련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충남도민 치안행정 현황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충남 자치경찰 운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의 통제가 적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지방행정과 연계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과도기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시도하였으며 국가경찰체제와 차별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제도 변화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었다.

충남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4%로 비교적 낮으며 위험성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충남은 대도시, 중소도시, 해안지역 등 행정체계가 집결된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령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이 증가하고 외부인구가 유입하는 등 신종 범죄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충남도 내 전체 범죄발생은 도시권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며 범죄예방과 치안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충청남

도 및 시군의 협조를 통해 2023년 4월에서 5월까지, 충남도민 1,38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충남도민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수준(47.7%)이며 정책적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의 불안감과 경찰활동에 대해 불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다양한 계층에 따른 인식구조와 정책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계층별 맞춤형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도시지역에서 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맞춤형 치안과 안전망 구축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자치경찰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대한 성과와 한계, 향후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일간지 11개와 지역일간지 6개,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치경찰 관련 연구와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자치경찰의 성과는 지역맞춤치안, 주민밀착정책 등의 키워드로 종합해보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한계에 대해서 학술연구와 언론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모두 권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일원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수요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 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치안수요를 반영한 제도운영의 전략방향이다. 현재 국가경찰 중심인 일원적 모델 상황에서 치안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예방관

◀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리를 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이다.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을 확대하고 범죄 취약요인의 발굴 및 대응 지원하며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안전취약계층 치안복지 책임성 강화이다. 인권친화적 보호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신종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실증기반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이다. 과학적 관리를 통한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유발 원인요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사고 발생 공간기반 교통안전 행동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탈권위적 조직운영과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이다.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협력의 실질적 이행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지역분산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융합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자치경찰제의 운영 모델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의 모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그리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로 정리될 수 있다.

충남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구상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제약과 한계로 나타난 부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

제도적 측면의 한계로서 현재의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도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밀접한 연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상서

다양한 정책과 과제들의 제시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경찰과 한 자료와 데이터의 구체적 공개에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이 한계는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발전과 향후 인식도의 변화를 점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방법 | 5 |
| 3. 주요내용과 연구흐름 | 7 |
| 제2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 9 |
|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의의 | 11 |
| 2. 선행연구 검토 | 22 |
| 3. 정책동향 | 32 |
| 제3장 충청남도 치안 현황 및 여건 분석 | 49 |
| 1. 충청남도 치안환경 분석 | 51 |
|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 71 |
| 3. 정책적 시사점 | 74 |
| 제4장 도민 치안행정 수요 분석 | 77 |
| 1.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주민수요 특성 | 79 |
| 2.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 | 141 |
| 3. 자치경찰 관련 연구 및 언론 분석 | 169 |

| | |
|---------------------------------|-----|
| 제5장 충남 자치경찰 운영 전략과 과제 | 179 |
| 1.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 | 181 |
| 2. 예방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 189 |
| 3. 안전취약계층 치안복지 책임성 강화 | 200 |
| 4. 실증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210 |
| 5. 탈권위적 조직운영과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 231 |
| 제6장 결론 | 245 |
| 1. 결론 및 정책제언 | 247 |
| 2. 연구의 한계 | 249 |
| 참고문헌 | 251 |
| 부록 | 257 |
| 1. 도민 치안체감도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 259 |

표 목차

| | |
|--|----|
| 〈표 1-1〉 연구방법 | 6 |
| 〈표 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사무 | 17 |
| 〈표 2-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책 운영성과 | 40 |
| 〈표 3-1〉 일반치안환경 비교(2021년 기준) | 53 |
| 〈표 3-2〉 치안 수요에 따른 비교 (2021년 기준) | 54 |
| 〈표 3-3〉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범죄발생 건수 추이 (2017년~2021년) | 55 |
| 〈표 3-4〉 충남 시(市)부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 56 |
| 〈표 3-5〉 지역별 소년범 검거현황 | 57 |
| 〈표 3-6〉 연도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 58 |
| 〈표 3-7〉 지역별-유형별 성폭력 발생 건수(2022년 기준) | 59 |
| 〈표 3-8〉 충청남도 가정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현황 | 60 |
| 〈표 3-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현황 | 61 |
| 〈표 3-10〉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 62 |
| 〈표 3-11〉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 62 |
| 〈표 3-12〉 충청남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63 |
| 〈표 3-13〉 사고요인행위 단속 현황 | 64 |
| 〈표 3-14〉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 64 |
| 〈표 3-15〉 충남 지역별-분야별 인력현황 | 65 |
| 〈표 3-16〉 충남 지역별-분야별 인력현황 | 66 |
| 〈표 3-17〉 학교전담경찰관 운영현황 | 66 |
| 〈표 3-18〉 연도별 방범용 CCTV설치 현황 | 67 |
| 〈표 3-19〉 지역별 CCTV설치 현황(2021년 기준) | 68 |

| | |
|---|-----|
| 〈표 3-20〉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68 |
| 〈표 3-21〉 자율방범대 현황 | 69 |
| 〈표 3-22〉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운영 현황 | 70 |
| 〈표 3-23〉 사무국 인력 현황 | 72 |
| 〈표 4-1〉 자치경찰 관련기사 빈출어 | 87 |
| 〈표 4-2〉 충청권 주요일간지 사설 제목 | 88 |
| 〈표 4-3〉 사건신고통계-접수코드별 접수 현황 | 90 |
| 〈표 4-4〉 충청남도 경찰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92 |
| 〈표 4-5〉 관서별 신고 접수 현황 | 93 |
| 〈표 4-6〉 관서별 사건신고자 유형 현황 | 94 |
| 〈표 4-7〉 기준 관서별-사건종별 112 신고접수 현황(2022년) | 96 |
| 〈표 4-8〉 중요범죄의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 97 |
| 〈표 4-9〉 기타범죄의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 99 |
| 〈표 4-10〉 질서유지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 100 |
| 〈표 4-11〉 교통관련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 102 |
| 〈표 4-12〉 기타 경찰업무 관련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 103 |
| 〈표 4-13〉 타기관 관련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 104 |
| 〈표 4-14〉 범죄신고 빈발지 | 111 |
| 〈표 4-15〉 관서별 청소년비행 학교폭력 영향요인(2021년) | 112 |
| 〈표 4-16〉 2016~2018년 관서별 관리여건 및 사고발생 건수 | 113 |
| 〈표 4-17〉 112신고 분야 치안 고객만족도 결과 종합만족도, 신고 접수 만족도(2022년) | 115 |
| 〈표 4-18〉 관서별 112신고 분야 치안고객만족도(2022년) | 116 |
| 〈표 4-19〉 시군별 치안이슈 | 117 |
| 〈표 4-20〉 시군경찰서별 체감안전도(2020년) | 118 |
| 〈표 4-21〉 치안 트렌드 | 120 |
| 〈표 4-22〉 거버넌스 유형 및 발전단계 | 122 |
| 〈표 4-23〉 지역안전관련 협의체 | 132 |

| | |
|--|-----|
| 〈표 4-24〉 활동목적에 따른 경찰 협력단체 분류 | 133 |
| 〈표 4-25〉 시군별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구성 | 135 |
| 〈표 4-26〉 2019~2022년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현황 (2023. 2. 현재) | 136 |
| 〈표 4-27〉 설문지표의 구성체계 | 141 |
| 〈표 4-28〉 응답자 특성 | 142 |
| 〈표 4-29〉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 143 |
| 〈표 4-30〉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 치안 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인식 | 144 |
| 〈표 4-31〉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 정도 | 145 |
| 〈표 4-32〉 거주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146 |
| 〈표 4-33〉 거주지역에서 가장 위험을 받는 범죄 종류 | 147 |
| 〈표 4-34〉 거주지역에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 | 148 |
| 〈표 4-35〉 거주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 | 150 |
| 〈표 4-36〉 거주지역 생활안전 관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 152 |
| 〈표 4-37〉 거주지역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의사 | 153 |
| 〈표 4-38〉 거주지역의 교통안전 인식 정도 | 154 |
| 〈표 4-39〉 거주지역 경찰의 교통활동 만족도 | 155 |
| 〈표 4-40〉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 156 |
| 〈표 4-41〉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 | 157 |
| 〈표 4-42〉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 158 |
| 〈표 4-43〉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 159 |
| 〈표 4-44〉 거주지역 사회적약자의 안전수준 인식 정도 | 160 |
| 〈표 4-45〉 거주지역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161 |
| 〈표 4-46〉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 162 |
| 〈표 4-47〉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활동 | 164 |
| 〈표 4-48〉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필요한 지원책 | 165 |
| 〈표 4-49〉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 .. | 166 |
| 〈표 4-50〉 추출된 키워드 빈도(전국일간지) | 171 |
| 〈표 4-51〉 추출된 키워드 빈도(지역일간지) | 171 |

| | |
|---|-----|
| 〈표 5-1〉 충청남도 범죄소년 재범률 현황 | 196 |
| 〈표 5-2〉 2022년 충청남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현황 | 197 |
| 〈표 5-3〉 18세 미만 실종아동 접수 현황 | 200 |
| 〈표 5-4〉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발생 현황 | 205 |
| 〈표 5-5〉 충청남도 지자체별 도로연장 | 210 |
| 〈표 5-6〉 2022년 충남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 211 |
| 〈표 5-7〉 2020년~2022년 충남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215 |
| 〈표 5-8〉 2020년~2022년 충남 노인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216 |
| 〈표 5-9〉 2020년~2022년 충남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현황 | 217 |
| 〈표 5-10〉 최근 3년 충남 음주 교통사고 현황 | 219 |
| 〈표 5-11〉 최근 3년 충남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220 |
| 〈표 5-12〉 2022년 운전자법규위반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222 |
| 〈표 5-13〉 사고요인행위 단속현황 | 223 |
| 〈표 5-14〉 2020년~2022년 충남 노인교통사고 발생 현황 | 224 |
| 〈표 5-15〉 2020년~2022년 충남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 225 |
| 〈표 5-16〉 2022년 충남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226 |
| 〈표 5-17〉 2022년 충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229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흐름도 | 8 |
| [그림 3-1] 지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2021년 기준) | 51 |
| [그림 3-2] 범죄발생 현황(2021년 기준) | 52 |
| [그림 3-3]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도 | 71 |
| [그림 4-1] 자치경찰 관련 언론보도 건수(기간 중 월별) | 86 |
| [그림 4-2] 주제어간 연결망 분석 결과 | 86 |
| [그림 4-3] 시간대별 중요범죄 출동 건수 | 105 |
| [그림 4-4] 시간대별 기타범죄 출동 건수 | 106 |
| [그림 4-5] 시간대별 질서유지 관련 출동 건수 | 107 |
| [그림 4-6] 시간대별 교통사고 관련 출동 건수 | 108 |
| [그림 4-7] 시간대별 기타 경찰업무 관련 출동 건수 | 109 |
| [그림 4-8] 시간대별 타기관 관련 출동 건수 | 110 |
| [그림 4-9] 지역 치안거버넌스 구축 모형 | 126 |
| [그림 4-10] 지역치안협의체 조직 운영체계 | 134 |
| [그림 4-11] 시기별 자치경찰 연구 추이 | 170 |
| [그림 4-12] 자치경찰의 성과_연구 | 172 |
| [그림 4-13] 자치경찰의 한계_연구 | 173 |
| [그림 4-14]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_연구 | 174 |
| [그림 4-15] 자치경찰의 성과_언론 | 175 |
| [그림 4-16] 자치경찰의 한계_언론 | 176 |
| [그림 4-17]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_언론 | 177 |
| [그림 5-1] 지자체장-자치경찰위원회-국가경찰의 관계 | 238 |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3. 주요내용과 연구흐름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현대사회는 경찰 조직이 주민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방면의 방범활동 수요 증가와 치안서비스 민감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각종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소극적인 질서유지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현장대응과 예방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할 범위를 확장하는 기능 전환이 요구된다. 주민은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치안 수요 해결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기대하고 있으며, 섬세하고 친근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력 제고와 자치행정의 집행력 확보를 통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 초기인 만큼 주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는 자치경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점점의 확대와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치안의 확보는 단순히 경찰만의 의무라 하기 어렵고 안전 증진을 위한 경찰과 주민의 치안공동체로서의 역할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변화된 환경에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치안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수요를 점검하고 이를 위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행 2년을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제도 개선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정책의 구상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 분야별 치안 위협요인과 주민의 불안 감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충청남도의 치안수요 현황과 요구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자치경찰의 운영과 치안정책 수립에 관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분야와 제도운영 및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개별과제가 아닌 주민 수요의 측면에서 추진 가능한 실효적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자치경찰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및 정책동향 조사

자치경찰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대상과 개념을 정립한다. 자치경찰제도의 법적·제도적 의의와 제도 도입 과정 및 맥락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치안행정 수요의 측정방법과 종류를 파악하여 주민의 의사반영을 위한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각종 통계자료 및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제도 운영 실태 현황을 분석한다.

2) 민원조사 및 분석

충청남도 및 경찰청에 접수되는 자치경찰 관련 민원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주민 요구도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도, 시·군 민원실, 안전신문고, 경찰청 112 통합신고, 민원봉사실,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범죄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분석하여 문제점과 전략방향을 설정한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자치경찰제 운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사무 관련 즉,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교통 분야 업무 담당자와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을 포괄하며 15개 시군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한다.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과 관련된 주민 수요를 조사한다. 주민 수요 조사의 대상은 전 도민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야 함이 타당하지만 제한된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정책관심도와 요구도가 높은 집단에 특정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세미나·워크숍 및 표적집단면접(FGI)

자치경찰제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원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정량적 결과의 검증과 추가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 수요와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추진한다.

〈표 1-1〉 연구방법

| 부문 | 조사 방법 | 주요 내용 |
|------|---------|---------------------|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선행연구검토, 제도 및 실태조사 |
| | 민원조사 |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분석 |
| |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 인식 및 주민 수요 조사 |
| | 표적집단인터뷰 | 민원·설문조사 결과 검증 |
| | 정책워크숍 | 전략 및 과제 도출, 성과확산 |

3. 주요내용과 연구흐름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 및 연구방법 등 전반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다.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와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제도 시행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충청남도 치안 현황을 제시하고 여건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된 민원 조사를 통해 특성을 분석하고, 관련 종사자의 인식과 주민의 수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대한 성과와 한계, 향후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치경찰 관련 연구 및 언론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자치경찰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 과제의 도출과 전략 방향을 설정한다. 주민의 수요와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과제의 발굴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무구분에 의한 영역별 내용과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및 거버넌스 체계 등 운영기반의 고도화에 초점을 둔다. 또한 국가차원의 자치경찰제도 일원화 논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한다. 제6장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 | |
|----------------------------------|--|
| 서론 (1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
|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2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3. 정책동향 |
| 충청남도 치안 현황 및 여건 분석 (3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남도 치안환경 분석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3. 정책적 시사점 |
| 도민 치안행정 현황 및 수요 분석 (4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주민수요 특성 2.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 3. 자치경찰 관련 연구 및 언론 분석 |
| 충남 자치경찰 운영 전략과 과제 (5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 2. 예방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3. 안전취약계층 치안복지 책임성 강화 4. 실증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5. 탈권위적 조직운영과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
| 결론 (6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 2 장

관련이론 및 정책동향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의의
 - 1)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대효과
 - 2) 자치경찰제도 이론적 고찰
 -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자치단체 치안행정 수요
2.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시사점
3. 정책동향
 - 1)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
 -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성과
 - 3) 향후 과제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의의

1) 자치경찰제 개념과 기대효과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양영철, 2008). 이는 기능적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자치경찰 사무처리 시스템이며, 국가와 지방간 역할배분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책임아래 조직의 구성과 인사, 사무분장 등 경찰의 기능을 재구조화 한다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김상운·성수영, 2019). 조직의 구성·운영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면서 경찰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가경찰제와는 달리, 조직의 구성·운영 및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자치권 또한 지자체에 부여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운영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관점과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라 할 수 있다(하민지, 2019). 특히,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직결되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합동의 치안활동과 지방자치 구현에 필수적이다(이규호, 2022). 자치경찰의 핵심이 되는 개념적 요소는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와 분권화 및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있다. 이는 분권화의 원리에 따른 경찰권의 행사와 운영을 지방자

치단체로 이관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 친화적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라 전문성과 분권성 및 자치성,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기반한 것이라 하겠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논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규율하는 법령의 범위, 경찰사무의 내용과 지휘감독 권한의 귀속자를 결부한 경찰 사무의 유형화, 이를 통해 자치성 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 전속 사무의 지방자치 사무이관 여부 검토 시에도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2) 제도 도입의 목적과 기대효과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의 전부개정이 시행되는 기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나, 그 논의의 시작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는 때부터로 보고 있다(김영식, 2022).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우선 실시되었으나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2020년 21대 국회 권력기관 개편 내용의 하나로서 기존 일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조직형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법에서 규정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설치 및 운영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로서 시·도에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의 일부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형태로 제도화 되었다. 이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필요성이 강조된 일원화 모델이 아닌 일원화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의 통제가 적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점, 지방행정과의 연계 및 결합이 용이하다는 점,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김만수·라광현, 2022).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시스템에서 강조된 통일성의 관점에서는 지역별 치안수요와 주민만족도의 변화 체감에 둔 감한 상태에서 경찰영역을 확대하기 때문에(이상훈, 2022) 주민중심의 자치 영역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 지방분권의 실현,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통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그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지방분권 및 자치 완성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민지·최진화, 2021). 특히,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로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있어 자치경찰제도의 국가경찰제 회귀는 요원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황문규, 2022).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행의 시의성이나 자치경찰제 모델과 관련된 논의에서 벗어나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개선·발전 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치안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긴급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안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협력을 확대하여 주민요구가 반영될 수 있고 행정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2) 자치경찰제도 이론적 고찰

(1) 경찰자치와 자치경찰권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 경찰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조직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경찰활동을 경찰자치라 이해할 수 있다(김영식, 2022). 경찰자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는 자치경찰 활동이 가능한 일정한 지역이 존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 기구가 실재해야 한다.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경찰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독자적 경찰기구에 의한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경찰자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실현되며, 자치경찰에 자치경찰권이 부여될 때 가능해 진다.

자치경찰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을 의미한다(김영식, 2022). 자치경찰 행정사무는 자치경찰 행정권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 가능하며,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경찰 입법권이 있어야 한다. 조직에 대한 자주적 결정 권한인 자치경찰 조직권과 자치경찰이 필요로 하는 재원의 조달과 사용권한인 자치경찰 재정권,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치경찰 인사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일원화와 이원화 논의

종래 연구된 문헌 대부분에서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원화’ 또는 ‘이원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념과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통용되는 기준이 없다. 다만 학자나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립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

될 뿐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일원화와 이원화 용어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통해 논의된다.

첫째는 경찰사무의 배분에서 기준이 되는 일원화-이원화 문제이다. 경찰사무의 귀속주체 측면에서 종래 경찰사무가 국가 단일의 행정주체에만 배분되었으며 또 다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는 귀속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전, 국가경찰제도만 존재하는 시점에서의 경찰제도를 일원화라 칭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사무가 일부 배분되었음을 나타내고, 경찰사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배분 되었다고 설명한다(최우용, 2003).

두 번째 논의는 경찰기관의 구조적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이를 ‘모형’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경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국가경찰기관 자치경찰기관으로 이원화 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무처리 주체의 조직 편제상 구분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가 각기 구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각 사무 수행 경찰기관의 조직체계가 단일한 것인지 분리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종래 국가 경찰 중심의 계서질서에서 각급 경찰 기관이 구성되어 있던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는 기존 체계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별도의 계서질서를 형성하는 경찰 조직 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원화라는 용어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특수하게 사용되는 사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6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제주도자치경찰을 폐기 또는 통폐합하지 않은 상태로 2021년 경찰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한정하여 제주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조직법 적용을 받는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상존하는 경우 자체를 자치경찰제의 이원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논의에서 “일원화”와 “이원화”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확히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찰사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무 구분은 고유업무인 자치사무와 국가가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집행기관에 위임이 이루어진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사무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법 제4조제2항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 업무를 구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가 경찰을 중심으로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관할 하에 두며,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는다.

〈표 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사무

| 구분 | 국가경찰 | 자치경찰 |
|------|--|--|
| 주요사무 | 1.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 상황실 2. 수사 3.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및 지역 순찰대 | 1.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2. 민생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법 제3조에 정한 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를 의미하며,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로 구성된다. 경찰법상 이러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시에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47개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서 생활안전의 경우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긴급구조지원 사무가 포함된다. 교통·경비의 경우도 교통단속 및 교육, 교통안전 시설 관리, 지역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사무를 포함한다.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의 경우에도 그 지휘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으며,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과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교통사고, 가출 및 실종 아동 수색 사무가 포함된다.

(4)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유일한 자치경찰조직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명에 관한 권한은 경찰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위원의 성별, 연령, 인권전문가의 참여 등을 위원구성협의체를 통해 사전에 논의·조정할 근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법 제24조에 정한 소관사무를 결정하며,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경찰법 제27조 제1항). 사무기구 조직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며, 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점¹⁾과 비교되는 측면이라 하겠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사무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 사무 뿐만아니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사무국 기능은 경찰청이 수행하는 생활안전국 등의 기능과 시·도경찰청의 생활안전·교통 등의 기능에 중첩가능성²⁾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1)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대한 통제·감독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이 부재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2) 따라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경찰청의 관련 기능과 조직 및 시도경찰청의 조직 기능을 종합적으로 재편할 필요성도 제기된다(황문규, 2021).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자치단체 치안행정 수요

(1) 치안행정 수요의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수요는 개인의 욕구를 의미하는 주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어떠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된다. 주민이 정치·행정 체제에서 충족을 기대할 것이 충족되지 않은 효용을 의미하며, 정책결정기구 측면에서는 정치체제상 대응이 필요한 수요를 행정요구라 부르기도 한다.

기존 치안수요는 개념의 정확한 규정이 없이 국내·외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범죄 비율 또는 발생 지표를 통해 설명된다. 치안수요는 치안행정 수요 또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윤재풍, 1997), 행정수요의 특정화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요에 대한 기존 논의를 통해 치안수요 개념에 대한 재정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개념에 기반한 치안행정수요의 개념은 ‘국민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치안행정수요 분석 필요성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 조항을 규정한다(류지태, 1995; 주영학, 2009).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산 관리 권한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으며³⁾ 지자체가 지역 내 주민에 대한 자율적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는 현대 민주정치 이념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자치사무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헌법의 구체적 위임을 받는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자치경찰제도 실시의 직접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이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찰 기능은 주민의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사회질서 유지는 전반적으로 국가차원에서만 규정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질서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자치경찰의 사무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 민생 치안활동에 해당하며,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여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수행의 보충성 원리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기존 국가경찰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라는 책무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치안행정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 미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치안행정 수요의 반영이 필요하다. 경찰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배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김봉구, 2014; 안영진, 2014; 조성호 외, 2020).

3) 자치경찰의 제도적 근거로서 헌법은 직접적 근거규정이라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 방치적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을 직접근거규정으로 보고 자치경찰의 효력규정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주영학, 2009).

이처럼 정부의 자치경찰제 운영은 지역의 치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접한 치안행정 연계성 및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지역 치안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맞춤형 경찰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치안행정 수요에 대한 분석과 반영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1) 자치경찰제의 법제도 분석 연구

기존의 연구는 경찰조직법 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제 본격시행 시범을 기준으로 나뉜다. 이는 현행 자치경찰제에서와 같이 이른바 일원화 조직모형 체계를 따르는 경우에 자치경찰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크게 다음의 4가지 분야 연구로 정리된다. 첫째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대다수 연구에서 동의하고 있으며, 원칙적 도입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최승원, 1997; 최우용, 2005; 조성규, 2017; 김순은, 2021).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을 논증하는 주장과 역대 정부에서의 자치경찰 도입 관련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김원중, 2018; 김기갑, 2019; 김원중, 2020).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에 관한 시기 및 방법, 구체적 형태에 관련한 연구가 있다. 정부 구상이나 국회 개정법률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유주성, 2018)와 외국의 자치경찰제 운영 경험을 통해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고문현, 2005; 안영진, 201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운영되는 자치경찰

운영성과 분석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전국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고현환, 2018; 최철호, 2014; 김기갑, 2019)가 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여 정부안 또는 일부 시도의 자체안 분석에 관한 연구(김기갑, 2019; 김남욱, 2018; 김원중, 2020)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현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도입 모형을 구상하거나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가경찰행정기관과 자치경찰행정기관을 구분하여 각 조직과 담당사무, 사무처리 권한 범위와 한계에 관한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박병욱·이상훈, 2019; 김원중, 2009).

네 번째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과 이에 대한 경찰관의 수용태도,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 분석연구와 사무 영향, 각 주체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실시되었다(최종술, 1999; 박현호, 2007; 남재성, 2010; 고인종·강영훈, 2015; 김기갑, 2020; 장민규·류준혁, 2020).

자치경찰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수 연구들이 자치경찰 도입이나 모델에 관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실제적 기대감을 반영하여 해당 시기에 연구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인 재정이나 시도지사 및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자치경찰 운영성과를 실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책적 지향점에 따른 민주적 통제와 주민참여, 치안만족도를 반영한 전략발굴을 통해 자치경찰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성도 제기된다(장재성, 2021).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하고 본다면 조직과 사무, 인사, 인력, 예산,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은 우리나라 지방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주로 기초단위 자치단위 경찰제도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광역 및 기초단위 모두 실시하는 혼합형 자치경찰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도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주민밀착형 행정 및 해당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요시하며 지방행정의 종합적인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기관뿐 아니라 경찰서 간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유상용, 2014). 반면에, 광역단계의 치안수요의 대응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 재정불균형이 치안불균형으로 전이되어 치안공백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토착세력과의 은밀한 부조리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는 소규모 지역 경찰관서들이 독자적인 역량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경찰활동 영역의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다(설계경, 2014). 그러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보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며 면적대비 관할 인구 과대로 현지실정에 적합한 치안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이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도의 장점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을 흡수한 혼합형 자치경찰제도가 제시되었으나, 이 역시 경찰지휘체계의 복잡다원화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간 갈등, 광역-기초자치경찰 간 혼선과 다툼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입단위의 경우에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보다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주장하는 연구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에 따라 기초/광역단

위 혹은 혼합으로 실시하는 자치경찰 모델에서 벗어나 치안수요에 따라 경찰의 치안행정구역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경찰 치안특별구역을 주장하는 제3의 형태인 도입단위를 소개하기도 하였다(이창훈, 2015). 또한, 국가와 지방이 각각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전국통일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경찰이 운영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절충형 자치경찰제도로써 통합형 자치경찰제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을 분리하고 경찰체제를 국가와 자치경찰이 통합형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행정권에 근거한 제도를 말한다(이영남, 2016). 이처럼 각 모형에 대한 장단점으로 인하여 도입단위의 설정의 어려움이 연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나, 다양한 자치경찰 도입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내의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자주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김원중, 2019). 모든 공공의 사무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국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해 현재보다 더 넓은 범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이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기갑, 2019). 그리고 자치경찰의 사무성격과 업무범위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모델을 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특화모델’을 개발하여 해당지역의 치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화사무를 추가하도록 한다. 그간 국가경찰이 소홀했거나 수행하지 않았던 사무나 경찰과 자치단체의 융합이 필요한 사무 등을 중심으로 도출되는 이른바 틈새치안을 발굴하여 자치경찰만의 고유사무를 구축하도록 힘써야 한다(김영식, 2017). 국가경찰과의 상호협력에 대한 노력에 일환으로 국가-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또한, 기동대 창설 등 지역 간 업무협조 및 대응을 위한 상호간의 효율적인 협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필요로 한다(이정철 외, 2018).

인사와 인력, 예산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며 전면적인 실시가 될 때까지는 국가경찰의 전입을 선택하도록 한다.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지방 특정직으로 직급을 조정하고 소속과 신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예산은 지역마다 재정자립도가 모두 다르므로 발생하는 치안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김기갑, 2019; 성수영 외, 2019; 황문규, 2019; 박상민, 2018; 고현환, 2015; 고인중 외, 2015). 영국 경찰의 예산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추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한 김학경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광역 단위 지방자치경찰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영국 경찰의 예산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지방세에서 지원되는 지원보조금액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경찰보조금 배분공식이라는 독특한 공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성과급 형식의 몰수자산 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영국 경찰의 예산분배 및 조달방식은 향후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는데 있어 중요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김학경 외, 2017).

정치적 중립성이란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함을 의미한다. 즉, 경찰의 중립화란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치안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시민위주의 치안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집권자의 의도적인 정치적 목적과 활용이 차단되어야 민생치안 등 본래 취지인 치안목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하였다(최병일, 2010).

위원회와 같이 위로부터의 통제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통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황문규, 2018).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63.8%가 참여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보여 정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에 앞서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이상열 외, 20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해외 국가들의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전직 경찰관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치안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자치경찰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치적 중립의 훼손 가능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자치경찰청장 선발 및 임명하는 과정을 구체화·투명화하고 자의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민경 외, 2018).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통제기구의 설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

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자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2) 치안행정 수요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치안행정 수요 측정은 ‘수요’가 가지는 가치 함축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법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수요조사는 설문조사, 직무분석, 표적집단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측정된다(김광주, 2000). 치안수요의 결정은 그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안수요의 수량화 및 지표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고려한 수요 측정은 객관적·주관적 지표의 활용 외에 각종 민원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오세덕, 1995; 진영호, 2001).

객관적 지표는 적정수준의 범죄율과 체포율, 경찰인력 비율 등 공급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사전에 기준점으로 제시한 이후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치안수요를 파악한다(조성호 외, 2020). 주관적 지표 활용 방식은 공급이 필요한 치안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을 직접 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 포럼, 지역이해도가 높은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 방식을 통하거나 지역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서베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표적집단을 활용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배득중, 1996). 특히 지역의 치안수요 파악을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등 경찰 서비스를 요구하는 특수한 집단이나 전통적 비우호집단이 고루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Thurman & Reisig, 1996).

각종 민원자료를 통한 치안수요 측정은 민원자료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McEwen, et. al., 2003). 이러한 민원자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될 수 있지만 민원자료는

표출된 시민의 기대와 요구라는 점에서 잠재적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될 우려도 상존한다. 또한 민원자료가 가진 취약성으로서 신고내용의 부정확성 문제를 검증하기 어렵고 경찰 민원자료의 경우 경찰의 직접 탐지를 막기 위한 기재로서 상황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여 범죄관련 활동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비판적 연구결과도 있다(Bennett, 2004; Klinger & Bridges, 1997). 그러나 이러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한 경우, 경찰의 자기보고식 연구 결과보다는 높다(Sherman, et. al., 1989)는 주장이 있고, 경찰 활동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해 볼 때, 경찰주도적 활동과 시민주도적 활동 간 업무내용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Bayley, 1985)는 지적도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기초연구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업무에 대한 중요성, 자치경찰의 범위와 사무영역, 조직과 인력의 구성 등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역할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민주적인 통제 도구적 역할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국가경찰제의 한계로 주민을 위한 치안시책의 시행에 대한 의견제한이 발생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 치안문제에 지자체가 종합적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민대응성과 민주성 및 지역 밀착형 치안행정의 필요성과 그 기초로서 제도 도입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후의 치안 수요나 지역 특성 반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1년을 도파하는 시점에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주민 밀착형 과제를 설정을 위한 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시사점

오랫동안 종래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들 성과물들이 현행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까지 많은 참고자료로서 기능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논의들이 현재의 자치경찰제 분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원화 경찰사무를 채택하면서 일원화 조직모형이 결부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이례적이어서 학계가 미리 예상되지 못했고,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치밀한 분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계논의와 실정법(현실 제도)과는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거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종래의 연구성과물을 현재의 자치경찰제에 변형수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된 경찰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자치경찰제는 이원화 경찰사무를 채택하였음에도 자치경찰사무의 귀속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수행주체가 시·도경찰청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 자치경찰사무의 귀속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라고 전제하면 귀속주체와 수행주체가 분리되는 모형에 의해 처리방식과 처리권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사무의 귀속주체를 시·도경찰청으로 보게 되면 귀속주체와 수행주체는 일치하는 반면, 그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위원회에 분리·귀속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두 가지 가정의 경우가 어떠한 각각 주목받게 되는 경찰기관이 존재한다. 바로 경찰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다. 결국 현행 자치경찰제의 중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실질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높아진 시민의식과 통신기술 발달로 인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민원의 수요로서 역할을 시민이 수행하는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다. 민원자료는 주민의 입장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잠재적 의식의 반영(Bayley, 1985)이라는 점에서 치안수요 파악의 훌륭한 자료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행정수요 판단을 위한 측정의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조성호 외, 2020).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방식과 민원자료 활용 모두 가능하며, 지역주민과 경찰의 협력관계 유지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서베이가 적절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고급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을 활용한 인터뷰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책동향

2021년 7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은 건국 이후 지속된 국가경찰제 체제 최초의 변화이며,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행정, 교육, 치안 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세 축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준휘, 2022). 그러나 그 동안의 논의와 무관하게 자치경찰제 도입·실시가 빠르게 진전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이 존치하는 상태에서 갖게되는 제한된 권한범위와 낮은 주민 체감도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온전한 의미의 주민밀착·분권형 자치경찰로 옮겨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태임을 고려할 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은 경찰 개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및 주민간 인식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자치경찰과의 협업사업으로 도입하고자 한 ‘불법 쓰레기 단속’이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등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반발을 받은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인식차이는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분절된 상태로 운영되어 온 업무상의 몰이해와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1991년 경찰청의 경찰중립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황문규, 2021). 이러한 상황과 여건은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발과 내·외부에서 지적된 구조적 문제제기로 인하여 제도의 본질적 목적 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당초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실시의 수준과 권한 배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이론이 있으나, 시행 2년을 맞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경찰행정과 지방행정이 상호 이해를 통해 자치경찰의 지향점을 구현해가는 노력이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현행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과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향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치경찰제도 도입 과정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왔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박준휘 외, 2019).

(1) 문민정부 이전 단계

1940년대 정부조직법 제정 과정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 자치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국토면적의 협소함과 지방재정의 빈약함, 분단상황과 이념적 갈등, 경찰업무 신속성의 필요 등을 들어 국가경찰제도가 채택되었다(신현기, 2017). 정부수립 당시의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채택하였으나 경찰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문민정부 이전 시기에도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1955년 시·도지사 소속하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시·도경무청을 두는 내용의 경찰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심의되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1960년에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경찰 중립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중단되었다(조강원, 2003). 1970년대는 군사

정권, 유신헌법으로 대표되는 국정운영으로 자치경찰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신현기, 2017; 최기문, 2000). 1980년대는 치안본부 주도로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경찰청 설치 및 경감 이하는 지방직으로 이원화하는 등의 구체화 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1988년에도 국회에서 3개의 경찰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최종 철회 또는 폐기되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자치제 정착 이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신현기, 2017; 조강원,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은 의원 다수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1990년대는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도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1993년 대통령 소속 행정쇄신위원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1단계로 시·도지사와 지방경찰이 예산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2단계로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되, 그 추천과 임명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며, 3단계로는 시·도지사 산하에 지방경찰위원회와 지방경찰국을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신현기; 2017; 박준휘 외, 2019).

(2)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 당·정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과 자치경찰의 포괄적 사무 수행 예산·인사권은 국가경찰이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권의 악영향, 지방재정의 취약성, 경찰권 분산으로 인한 치안력 약화 우려, 경찰관서 신설 등에 따르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였다.

(3) 참여정부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발전 핵심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관련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제3항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에 중앙 및 지방정부, 국회 등 다각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2005년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국회 의원발의,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도 제안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제한적 자치경찰제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4)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19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되었으며(박준휘 외, 2019), 자치경찰제에 관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의 법률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광역단위 기능보강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시기 추가 논의된 사항이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통합운용권, 시·도지사의 보좌를 위한 자치경찰지원관 설치 및 협력관 파견 등이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제 실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역시 법률의 형태로 제출되지는 못하였다.

(5)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의 세부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포함되

4)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면서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담당·추진하였다. 2014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후 실무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논의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의원발의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6)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른바 ‘서울시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안’을 발표하여 이전의 두 가지 제안을 절충하는 안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제로 접근된 측면도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전략의 일부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포함하고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의 재·개정 및 2021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22년 전면 실시하는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추진되던(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안)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안에 따른 ‘일원화 모델’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 모델은 여러 비판의견에도 불구하고 발의 이후 4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빠른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7)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 따라 지방분권 국정과제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재조정의 세부 목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였다(박준휘, 2022). 이는 이원화 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기초지자체 단위의 자치경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발표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2026년까지 기초지자체 단위 자치경찰 전면시행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로의 변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성과

사무의 내용과 수행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찰의 신분도 국가공무원인 상태로 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시·도 지사의 영향력 하에 위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더욱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자치경찰 도입을 거쳐 본격적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기존 국가경찰 기능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출발함에 따라 시작 단계부터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취지는 국가 영토의 협소성, 경찰력 분산으로 인한 광역경찰 기능 약화, 경찰 위계질서의 해이, 지역 간 경찰력 수준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강력한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온 흐름을 벗어났다는 점이다(배미란, 2021). 중앙권력의 거대화과 지방 간 불균형 심화 문제 해소를 위해 강조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함께 지방분권의 틀에서 논의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경찰권의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치경찰제의 핵심이 지방분권화의 의미를 가지며, 중앙에 집중된 경찰행정의 권한 분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효율적 제도로 그 도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1) 과도기적 제도로서 안정적 정착

자치경찰제가 20대 국회 이전부터 장기간 논의되던 이른바 의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선회한 이후, 발의 4개월여 만에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2021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체계와의 정합과 권력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박준휘, 2022). 그러나 다수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적극적 반대 여론이 형성되지는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찬성 입장에서 관련 대안이 제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원화 모델은 의원화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기라 설명할 수 있다. 일원화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자치성이 부재하다는 평가(김원중, 2020)도 있으나

개정된 경찰법 제2조에서는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치안활동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 물론 현재의 제도가 기존 국가경찰이 가진 기능과 인력에 대한 이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인사, 재정권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자치성에 흠결이 있다는 점은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기존의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계되는 일부 편익도 존재한다.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이 낮은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이 적다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관리 틀 속에서 채용,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장비 사용 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박준휘, 2022).

(2)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시도

자치경찰제 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국가경찰체제와는 차별화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환경 개선 및 관련 주요 시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형 경찰체제에서 지역 중심의 분권형 경찰체제로의 변화는 개별 지역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시민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강조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현장 경찰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⁵⁾

5)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회의」 개최), 보도일: 2021.10.08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1년을 기점으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한 주요 시책은 크게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안전 확보, 교통안전강화, 주민 참여·소통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자치경찰 홍보 활성화 등 6개 유형으로 나뉜다. 시책 개발과 관련된 특징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책의 발굴을 위한 노력과 시도의 측면이다. 비록 경찰법상 사무관련 재정 마련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경찰청 등 중앙정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밀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등은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성·우하린, 2022). 또한 유사한 시책을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하는 정책의 확산도 일부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소통관련 업무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민참여의 창구 다양화와 활성화 측면의 보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표 2-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책 운영성과

| 분야 | 운영성과 |
|-----------|--|
| 사회적 약자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인·장애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범죄예방 환경 개선 ·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강화 · 교통약자 보호활동 · 가정폭력 대응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전담의료기관 확대 추진 · 여성 범죄 대응 강화 통한 체감안전도 향상 · 성범죄 예방 VR활용 교육 추진 · 화장실 내 안심 스크린 설치 |

| 분야 | 운영성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제적 보호활동 강화 · 빅데이터 활용 통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 · 위기 아동 보호센터 신설 · 아동·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 등록 · 노인 사망사고 예방 위한 도로 조명설치 시범사업 실시 |
| 시민안전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범죄 대응 역량 확보 및 한강공원 치안 환경 개선 추진 · 관광경찰대 PM 도입·운영 · 전자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운영 ·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강화 · 빅데이터 분석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 시민이 주도하는 셉테드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범죄취약 환경 개선 · 도·시립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 빅데이터 활용 통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 · 평화누리길 범죄예방 환경 조성 · 주민 불편 도로안전시설 개선 · 도심 안심구역 및 안심귀갓길 등 주민 안심 거리 조성 · 치매·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섬 지역 범죄예방 ·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추진 |
| 교통안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보행 친화적 교통체계 개선 추진 · 사고위험 터널구간 단속장비 구축 · 아동지킴이 과속방지시설 설치 · 교통안전 확산운동 지원 · 어린이 교통안전 확대 및 위해요소 제거 · 도시철도 공사구간 교통통제 해소 · 메타버스 교통안전 가상월드 및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및 광역교통안전팀 운영 · 교통 정체구간 신호운영 최적화 추진 · 주민불편 도로안전시설 개선 ·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추진 |
| 주민참여·소통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시민 등 치안현장 합동방문·조사 · 자문단·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주민참여 협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 치안리빙랩 추진 · 시민참여 치안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민 정책제안 활성화 · 자전거 순찰대 등 주민참여형 사업 발굴·추진 |

| 분야 | 운영성과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유도 등을 통한 셉테드사업 내실화 고도화 · 주민참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 · 아이디어·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청년서포터즈·홍보단 등 운영 ·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운영 |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 개선 · 시민이 주도하는 셉테드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범죄취약환경 개선 ·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제·개정 · 평화누리길 범죄예방 환경 조성 · 도시재생사업지구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추진 ·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유도 등을 통한 셉테드사업 내실화 고도화 |
| 자치경찰 홍보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홍보대사 위촉 및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 생활밀착형 홍보활동(각종 언론·온라인·행사·축제 활용) 전개 · 청년서포터즈·홍보단 등 운영 · 메타버스 교통안전 가상월드 및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 성범죄 예방 VR활용 교육 추진 ·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운영 |

자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 중 2개 이상 시도 시행사업중심으로 재구성

(3) 현행 제도운영의 한계

현재의 경찰법에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밀착형 경찰 서비스 실현을 제안의 목적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에서도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유로 동일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자치경찰제는 외형상으로는 과거와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자치경찰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고 있으

나, 조직과 인력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한다 하더라도 자치경찰의 실체 없이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형식적인 수준의 인사권을 행사할 뿐이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의 집행기능이 부재하고 단지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능할 뿐이다. 이로 인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2023년부터 자치경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시·도비 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직접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재원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장기적인 재원 안정성이 요구된다.

3) 향후 과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차원의 치안역량 강화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후속 추진을 고려하는 주요 시책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논의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사항 및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시·도 중심의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의 민생치안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제도적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한 자치경찰의 일반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지역 특성을 면밀히 진단하여 치안시책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주요 시책은 시간적·공간적 특성을 명확히 진단하여 우선순위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주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활동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치안을 위한 경찰활동의 현장성을 고려한 추진이 요구된다. 즉, 현재 자치경찰제는 광역형 자치경찰제의 모델로 볼 수 있는 바, 주민이 생활하는 최접점 현장을 고려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하위 체계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분권형 치안 시스템 개선 및 정착에 있다. 일반 주민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그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policing)을 변화시키고, 경찰(Police)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⁶⁾

정부와 경찰은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용어를 주로 활용하였다.⁷⁾ 해당 문구에 나타난 바가 자치경찰의 도입과 시행에 대한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민밀착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과연 어떻

6) Weisburd, D. & Braga, A., (2019). Police Innovation-Contrasting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대한민국 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분야별·부처별 시기별 주요제도 핵심사항 자료집, 2023

게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요구에 대한 수용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자치경찰 활동의 선택과 집중에 필요한 사항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고려한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실효성을 고려한 협업·공동체제 구축과 운영

대부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협업과 공동체제 구축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한 협업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민·관 합동의 자치경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으나 그것이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부산 지역은 기초지자체·경찰서 공동으로 학대아동을 신속·정확하게 원스톱 보호조치하는 ‘아동학대 종합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확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15개 구 및 14개 경찰서) 기초지자체와 경찰서의 협업이 미흡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 자치경찰의 개입 시점에 대한 설정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제기되고 있다. 주된 메커니즘은 ‘위기 대응-돌봄-사후지원 강화’로 자치경찰의 후속적인 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사후관리는 재발 또는 발생

의 반복성을 고려하여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어떤 시점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자치경찰 활동에서 필요하다. 또한 통합관리에 있어서 주된 활동의 책임기관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3) 자치경찰 업무 전담 부서 및 인력 배치

광역단위 중심의 자치경찰활동은 하위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무리가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은 기존 국가경찰 체제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쉽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치안 환경 및 상황이 다른 측면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일선 시·군의 자치경찰 업무 참여와 이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팀 또는 자치경찰 담당관의 배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별 주민센터에 자치경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 주민 주도의 환경개선 활동

각 지역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은 범죄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능동적인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관 주도적인 측면에서 범죄환경 개선이 접근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협업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은 ‘충남형 범죄예방환경설계 협력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충남형 CPTED의 핵심은 무엇인가? 물리적 설계 및

환경 개선, 장비를 활용한 자치경찰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전반적인 구성요소를 유지·관리하는 것에 관한 지자체의 활동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력체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활동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 지역에서 시도한 매입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방치된 시설 및 공간·폐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5) 개별화된 접근 전략을 통한 경찰활동의 다양화

지역의 교통개선활동의 대부분이 소위 ‘맞춤형’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계절별·시기별·테마별로 자치경찰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서비스의 수혜자 또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활동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교통안전의 경우, 고령자뿐만 아니라 운전 초기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인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도 필요하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치안안전망 구축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의 활동 강화이다. 여기에는 위험 상황에서의 약자 또는 취약계층, 위기가정 등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에서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주민에 대한 선별 및 관리의 주체는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종합적인 관리를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종합관리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대상에 대한 중복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7) 신종 위험요소에 대비한 협력체계 마련

범죄는 시·공간적 영역을 넘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정 위험 및 신종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수사영역에 해당되는 경우, 자치경찰의 권한 및 활동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또한 악화 단계로 발전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자치경찰 고유의 관리코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범죄 유형 및 상황에 따라 개별 대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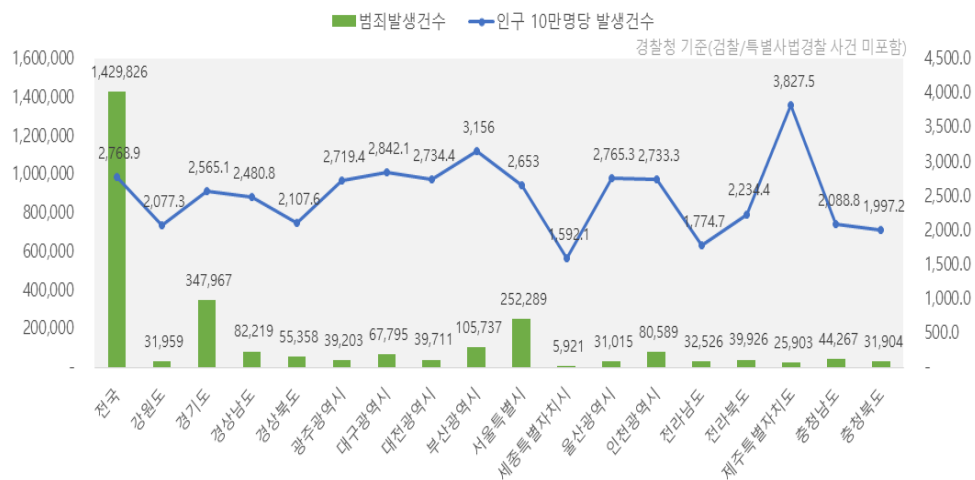
충청남도 치안 현황 및 여건 분석

1. 충청남도 치안환경 분석
 - 1) 일반현황
 - 2) 관리여건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 1) 조직 및 인력 현황
 - 2) 기능과 사무
3. 정책적 시사점

1. 충청남도 치안환경 분석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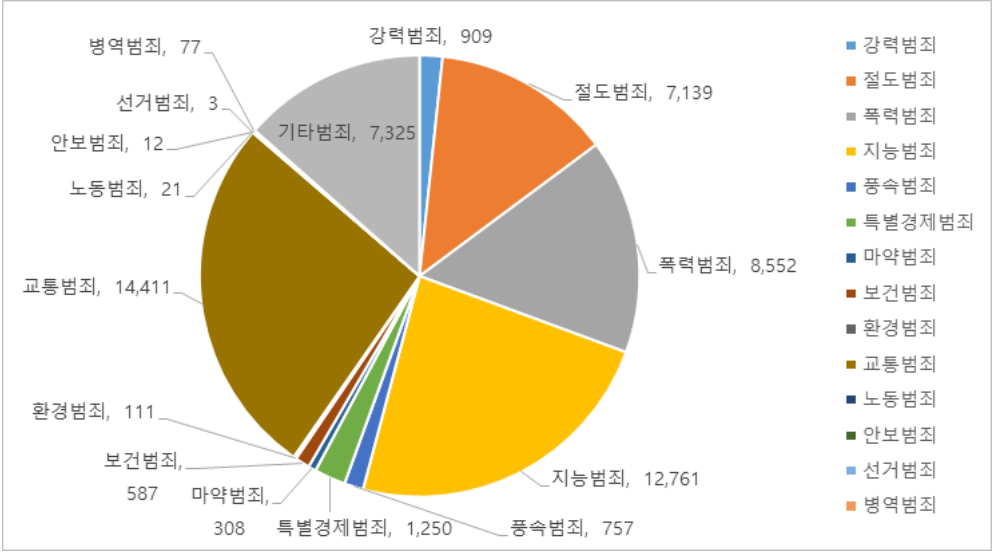
2021년 기준 충청남도의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44,267건으로 전국 1,429,826건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47,967건이나 인구 10만명 당 발생 건수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높다. 충남도는 인구 10만 명당 2,088.8건으로 세종, 전남, 충북, 강원과 유사한 안정적 관리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 지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2021년 기준)

출처: 전국시도경찰청, 경찰청 범죄통계(2021)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은 교통범죄로 전체 54,223건 중 27%인 14,411건이 해당되며, 다음으로는 지능범죄가 12,761건, 폭력 8,552건, 절도가 7,139건으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강력범죄를 제외한 생활안전이나 질서유지, 교통 등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3-2] 범죄발생 현황(2021년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범죄통계

치안행정 수요 판단에 있어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사항은 인구, 관할 면적과 함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해당된다.

〈표 3-1〉 일반치안환경 비교(2021년 기준)

(단위: 명, km²)

| 구분 | 인구 | 면적(km ²) | 경찰인력 수 | 면적/인 | 경찰1인당 담당주민 수 |
|----|-----------|----------------------|--------|------|-----------------|
| 충남 | 2,123,709 | 8,226 | 4,627 | 1.78 | 459 |
| 서울 | 9,729,107 | 605 | 28,717 | 0.02 | 339 |
| 인천 | 2,957,026 | 1,063 | 6,446 | 0.16 | 459 |
| 전북 | 1,818,917 | 8,067 | 4,954 | 1.63 | 367 |
| 경남 | 3,362,553 | 10,540 | 6,961 | 1.51 | 483 |
| 제주 | 670,989 | 1,850 | 1,769 | 1.00 | 379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전국 시도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각 지역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경찰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인구수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기준 경찰 1인당 411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45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가장 적은 서울 333명, 전남 340명, 제주 346명, 전북 364명 등과 비교할 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치안수요 판단을 위하여 관할지역 면적을 살펴보면 충남은 8,226km²로, 전북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면적당 인구가 0.15명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 수는 334명 적어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 격차를 더욱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3-2〉 치안 수요에 따른 비교 (2021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 범죄발생 건수 | 경찰 1인당 총 범죄 발생 건수 | 경찰 1인당 인피교통사고 발생 건수 |
|----|---------|-------------------|---------------------|
| 충남 | 63,290 | 13.5 | 2.0 |
| 서울 | 274,830 | 11.0 | 1.0 |
| 인천 | 85,432 | 14.1 | 1.4 |
| 전북 | 52,587 | 9.74 | 1.7 |
| 경남 | 111,102 | 13.82 | 1.6 |
| 제주 | 26,499 | 14.0 | 2.3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범죄발생 건수를 고려할 때 경찰 1인당 범죄발생 건수는 경남과 유사하게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충남의 교통사고 및 교통 범죄 발생이 높은 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담당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3-3〉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범죄발생 건수 추이 (2017년~2021년)

(단위: 건)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범죄발생 건수 | 73,772 | 75,405 | 73,817 | 71,847 | 63,290 |
|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 3,485.1 | 3,546.3 | 3,475.9 | 3,387.4 | 2,986.4 |
| 재산범죄 | 21,983 | 24,075 | 25,242 | 25,822 | 21,943 |
| 강력범죄(흉악) | 1,202 | 1,250 | 1,207 | 1,182 | 1,302 |
| 강력범죄(폭력) | 8,436 | 8,862 | 7,902 | 7,260 | 6,296 |
| 위조범죄 | 732 | 636 | 655 | 646 | 507 |
| 공무원범죄 | 103 | 110 | 93 | 113 | 92 |
| 풍속범죄 | 393 | 375 | 406 | 404 | 299 |
| 과실범죄 | 373 | 389 | 388 | 387 | 348 |
| 기타형법범죄 | 3,671 | 4,026 | 4,314 | 4,134 | 3,263 |
| 특별법범죄 | 36,879 | 35,682 | 33,610 | 31,899 | 29,240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범죄발생 건수는 2018년 일시 증가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2%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범죄 중 특별법범죄가 29,240건으로 가장 많으며, 재산범죄는 21,943건, 폭력범죄 발생이 6,2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6,179건)과 도로교통법 관련 발생 건수(7,215건)가 전체의 4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도로교통법 관련으로는 음주운전(5,119건)이 가장 많았다. 강력범죄 중에는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악범(1,302건)외 폭력범 발생이 6,296건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는 폭행이 3,5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가 1,546건, 협박이 8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범죄발생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유형에 있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강력범죄 중 흉악범죄이며, 이 가운데 성폭력이 2017년

1,033건에서 2018년 1,081건, 2021년은 1,178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죄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2017년 발생 건수에 비해 4배 증가하였으며, 음주측정거부 위반 건수가 2017년 190건에서 2021년 272건, 도로법 위반 건수도 85건에서 406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관련 범죄가 2017년에 139건에서 2018년 180건, 2019년 214건, 2021년은 63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4〉 충남 시(市)부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 천안시 | 아산시 | 서산시 | 공주시 | 당진시 | 보령시 | 논산시 | 계룡시 |
|--------|--------|-------|-------|-------|-------|-------|-------|-----|
| 강력범죄 | 310 | 113 | 94 | 48 | 53 | 51 | 49 | 11 |
| 절도범죄 | 2,726 | 1,132 | 541 | 278 | 506 | 272 | 421 | 65 |
| 폭력범죄 | 2,728 | 1,393 | 824 | 387 | 835 | 441 | 435 | 95 |
| 지능범죄 | 4,453 | 1,670 | 1,013 | 623 | 770 | 468 | 748 | 89 |
| 풍속범죄 | 268 | 100 | 43 | 28 | 48 | 35 | 20 | 3 |
| 특별경제범죄 | 413 | 257 | 109 | 53 | 89 | 89 | 52 | 9 |
| 마약범죄 | 93 | 44 | 18 | 15 | 33 | 29 | 21 | 3 |
| 교통범죄 | 4,929 | 2,109 | 1,172 | 766 | 1,383 | 704 | 567 | 96 |
| 계 | 15,920 | 6,818 | 3,814 | 2,198 | 3,717 | 2,089 | 2,313 | 371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도시인구의 산술적 증가가 범죄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기정훈,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을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충청남도 내 8개 시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로 15,920건이었으며, 아산시가

6,818건, 서산시가 3,814건, 당진시가 3,71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부에서 가장 많은 범죄 발생 유형은 교통범죄였으며, 다음으로는 지능범죄(사기), 폭력과 절도범죄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진시와 계룡시에서는 지능범죄 발생 보다 폭력범죄 발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별 소년범 검거현황

(단위: 건)

| 구분 | 총계 | 강 력 범 | | | | | 절도 | 폭력 | 지능 | 풍속 | 기타 형법 | 특별법 |
|------|-------|-------|----|----|-----|----|-------|-----|-----|----|----------|-----|
| | | 소계 | 살인 | 강도 | 성폭력 | 방화 | | | | | | |
| 계 | 3,207 | 98 | - | 18 | 72 | 8 | 1,223 | 721 | 406 | 5 | 95 | 659 |
| 천안서북 | 902 | 13 | - | 2 | 11 | - | 486 | 138 | 98 | 3 | 17 | 147 |
| 천안동남 | 419 | 20 | - | 12 | 8 | - | 141 | 92 | 74 | 1 | 14 | 77 |
| 서산 | 239 | 9 | - | - | 4 | 5 | 57 | 82 | 34 | - | 6 | 51 |
| 아산 | 465 | 17 | - | 4 | 13 | - | 187 | 113 | 46 | 1 | 13 | 88 |
| 논산 | 226 | 4 | - | - | 4 | - | 107 | 43 | 22 | - | 18 | 32 |
| 공주 | 122 | 2 | - | - | 1 | 1 | 49 | 34 | 10 | - | 1 | 26 |
| 보령 | 122 | 4 | - | - | 4 | - | 30 | 31 | 23 | - | 2 | 32 |
| 당진 | 242 | 8 | - | - | 8 | - | 64 | 73 | 27 | - | 6 | 64 |
| 홍성 | 150 | 4 | - | - | 4 | - | 36 | 32 | 17 | - | 7 | 54 |
| 예산 | 83 | 1 | - | - | - | 1 | 34 | 28 | 10 | - | 3 | 7 |
| 부여 | 31 | - | - | - | - | - | 7 | 5 | 7 | - | 2 | 10 |
| 서천 | 45 | - | - | - | - | - | 14 | 15 | 9 | - | 2 | 5 |
| 금산 | 53 | - | - | - | - | - | 5 | 27 | 10 | - | - | 11 |
| 청양 | 6 | - | - | - | - | - | 4 | - | - | - | 1 | 1 |
| 태안 | 29 | 1 | - | - | - | 1 | 2 | 7 | 6 | - | 3 | 10 |
| 도경 | 73 | 15 | - | - | 15 | - | - | 1 | 13 | - | - | 44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범죄 관련 소년범 특성을 살펴보면, 검거된 소년범죄 건수 총 3,207건 중 절도가 가장 많은 1,223건 이었으며, 폭력이 721건, 특별법이 659건, 지능범죄

가 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의 발생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강력범(98건) 가운데는 성폭력 건수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소년범죄는 천안이 서북구에서 902건, 동남구에서 419건 등 총 1,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 465건, 당진 242건, 서산 239건, 논산 226건, 홍성 1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 유형에서와 같이 지역별로도 절도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특별법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산, 보령, 당진, 홍성, 부여, 금산, 태안에서는 절도와 특별법간 차이가 미미하거나 특별법 건수가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생이 아닌 검거건에 따른 결과로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다발하는 유형과도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3-6〉 연도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단위: 건)

| 구분 | 발생 | 검거(건) | 검거(명) | 검거율(%) |
|----------|-------|-------|-------|--------|
| '19년 | 1,040 | 1,032 | 1,163 | 99.2 |
| '20년 | 1,020 | 1,006 | 1,141 | 98.6 |
| '21년 | 1,167 | 1,087 | 1,212 | 93.1 |
| '22. 12월 | 1,478 | 1,296 | 1,454 | 87.7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도시권에서 발생 건수가 높으며, 재범발생도 유사하게 높게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충남도 내 성폭력 범죄 발생은 전체 1,478건이며, 이 가운데 1,296건이 검거되어 87.7%의 검거율을 보였다. 이는 2019년의 99.2%, 2021년의 93.1%보다 최대 11.5p 감소한 수치이며, 성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면 검거비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위험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력보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7〉 지역별-유형별 성폭력 발생 건수(2022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 전체 성폭력 | 강간·강제추행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통신매체 이용음란 | 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
|------|--------|---------|------------|-----------|---------------|
| 계(건) | 1,478 | 879 | 209 | 380 | 10 |
| 서북 | 384 | 206 | 59 | 115 | 4 |
| 동남 | 212 | 118 | 33 | 59 | 2 |
| 서산 | 113 | 69 | 13 | 31 | 0 |
| 아산 | 223 | 127 | 33 | 63 | 0 |
| 논산 | 68 | 48 | 8 | 12 | 0 |
| 공주 | 58 | 32 | 19 | 7 | 0 |
| 보령 | 77 | 57 | 8 | 11 | 1 |
| 당진 | 107 | 75 | 9 | 23 | 0 |
| 홍성 | 61 | 37 | 5 | 19 | 0 |
| 예산 | 40 | 25 | 7 | 8 | 0 |
| 부여 | 24 | 19 | 1 | 4 | 0 |
| 서천 | 23 | 14 | 4 | 5 | 0 |
| 금산 | 26 | 15 | 4 | 6 | 1 |
| 청양 | 12 | 7 | 2 | 2 | 1 |
| 태안 | 50 | 30 | 4 | 15 | 1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가장 많으며,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초등학교에 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천안시(서북 384건, 동남 212건), 아산시(223건), 서산시(113건), 당진시(10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 충청남도 가정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현황

(단위: 건, 명)

| 구 분 | 신고건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 가정보호사건 송치현황 |
|------|-------|-------|-------|----|-------|----------------|
| | | | 계 | 구속 | 불구속 | |
| 계(건) | 7,966 | 1,312 | 1,490 | 33 | 1,457 | 715 |
| 서북 | 1,877 | 206 | 248 | 1 | 247 | 133 |
| 동남 | 1,150 | 140 | 114 | 2 | 112 | 59 |
| 서산 | 869 | 221 | 276 | 12 | 264 | 114 |
| 아산 | 1,015 | 139 | 171 | 1 | 170 | 76 |
| 논산 | 409 | 73 | 80 | 0 | 80 | 39 |
| 공주 | 301 | 44 | 43 | 0 | 43 | 7 |
| 보령 | 342 | 70 | 81 | 1 | 80 | 39 |
| 당진 | 746 | 167 | 186 | 3 | 183 | 106 |
| 홍성 | 230 | 32 | 32 | 2 | 30 | 13 |
| 예산 | 284 | 39 | 44 | 1 | 43 | 17 |
| 부여 | 160 | 37 | 45 | 1 | 44 | 35 |
| 서천 | 148 | 39 | 48 | 2 | 46 | 29 |
| 금산 | 112 | 41 | 45 | 2 | 43 | 20 |
| 청양 | 54 | 14 | 16 | 2 | 14 | 6 |
| 태안 | 269 | 50 | 61 | 3 | 58 | 22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충청남도 내에서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와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고건수는 7,966건으로 이 가운데 검거된 건수는 16.4%인 1,3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건수로는 천안, 아산이 1천 건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서산 869건, 당진 746건으로 도시 지역, 인구 밀집지역에서 신고 건이 많았다.

〈표 3-9〉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응급조치(유관기관 연계) | | |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
| | 계 | 보호기관 | 의료기관 | 가해자교정 | | |
| 계(건) | 226 | 69 | 140 | 17 | 44 | 213 |
| 서 북 | 64 | 33 | 26 | 5 | 6 | 46 |
| 동 남 | 22 | 10 | 12 | 0 | 0 | 19 |
| 서 산 | 25 | 2 | 22 | 1 | 6 | 12 |
| 아 산 | 15 | 3 | 11 | 1 | 2 | 16 |
| 논 산 | 20 | 0 | 20 | 0 | 1 | 16 |
| 공 주 | 0 | 0 | 0 | 0 | 1 | 11 |
| 보 령 | 11 | 2 | 6 | 3 | 5 | 19 |
| 당 진 | 43 | 16 | 27 | 0 | 1 | 16 |
| 홍 성 | 0 | 0 | 0 | 0 | 10 | 15 |
| 예 산 | 15 | 0 | 9 | 6 | 1 | 8 |
| 부 여 | 1 | 1 | 0 | 0 | 4 | 8 |
| 서 천 | 4 | 0 | 4 | 0 | 7 | 10 |
| 금 산 | 2 | 0 | 2 | 0 | 0 | 10 |
| 청 양 | 1 | 0 | 1 | 0 | 0 | 5 |
| 태 안 | 3 | 2 | 0 | 1 | 0 | 2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은 응급조치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각각 44건, 2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응급조치는 의료기관 연계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보호기관 연계가 69건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교정기관으로 연계된 건수는 17건으로 응급조치 중 가장 적었다.

응급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 서북구가 64건이었으며, 당진시가 43건, 서산시 25건 순이었다.

〈표 3-10〉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 구분 | 총계 | 전화신고 (112, 일반 전화) | 고소·고발 | 아동보호 전화의뢰 | 첩보인지 | 방문 | 기타 |
|------|-------|-------------------------|-------|--------------|------|----|----|
| '19년 | 801 | 714 | 17 | 36 | 2 | 12 | 20 |
| '20년 | 1,096 | 978 | 22 | 28 | 10 | 12 | 46 |
| '21년 | 1,665 | 1,566 | 41 | 8 | 13 | 16 | 21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80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는 1,6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신고 방식은 전화 신고가 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소·고발, 방문, 첩보인지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이 큰폭으로 증가하는데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미디어의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련 범죄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이웃 등 신고가 활성화 되는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 신고 건수와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 총계 | 친부모 | 계·양부모 | 가족 (친척 포함) | 보육 교사 | 교원 | 부모의 동거인 | 시설 종사자 | 기타 (파악 안됨) |
|------|-------|-------|-------|---------------|----------|----|------------|-----------|---------------|
| '22년 | 1,273 | 1,011 | 35 | 46 | 25 | 51 | 5 | 16 | 84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부모가 전체 1,273건 중 1,0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원이 51건, 가족이나 친척이 46건, 계부모가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2〉 충청남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전체 | | | 노인(65세 이상) | | | 어린이(12세 이하) | | |
|------|-------|-------|--------|------------|-------|-------|-------------|-------|-------|
|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 '19년 | 9,471 | 309 | 14,196 | 2,047 | 147 | 2,182 | 488 | 4 | 635 |
| '20년 | 8,985 | 267 | 13,446 | 1,871 | 133 | 2,006 | 372 | 5 | 473 |
| '21년 | 8,519 | 275 | 12,293 | 1,739 | 116 | 1,882 | 384 | 3 | 481 |
| '22년 | 8,251 | 232 | 11,983 | 1,797 | 121 | 1,997 | 410 | 1 | 530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그 감소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 하겠다. 202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519건으로 사망자는 275명, 부상자는 12,29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사고 발생은 1,739건으로 사망자 116명, 부상자 1,882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고 발생 건수 및 사망자 감소 추세를 바탕으로 노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에 비해 노인 사망자 발생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법규 강화 등 일련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 사고요인행위 단속 현황

(단위: 건)

| 구분 | 사고요인 행위 | | | | | | | |
|------|-----------|-------|-------|-------|--------|---------------|---------------|-------|
| | 계 | 음주면허 | | 무면허 | 중앙선 침범 | 신호 (무인 포함) | 과속 (무인 포함) | 난폭 |
| | | 정지 | 취소 | | | | | |
| '19년 | 1,129,909 | 3,219 | 5,795 | 3,198 | 2,646 | 139,083 | 972,459 | 3,509 |
| '20년 | 971,566 | 1,820 | 4,556 | 2,350 | 2,308 | 114,440 | 842,754 | 3,338 |
| '21년 | 1,096,635 | 1,502 | 5,413 | 2,203 | 2,086 | 121,273 | 961,107 | 3,051 |
| '22년 | 1,555,757 | 1,824 | 5,706 | 2,566 | 1,468 | 284,479 | 1,256,908 | 2,806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교통사고 발생 사고요인 행위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요인이 되는 행위 중 과속단속이 1,256,9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284,479건, 음주관련 7,530건, 난폭운전 2,80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행위가 주로 신호와 과속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사고유발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행위의 발생 순서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신호·과속 단속 건수의 급증도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추세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1년 대비 신호위반은 100% 이상, 과속단속도 25%이상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14〉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기간 | 발생(건) | 사망(명) | 부상(명) |
|----------|-------|-------|-------|
| '19년 | 1,027 | 33 | 1,607 |
| '20년 | 1,096 | 23 | 1,819 |
| '21년 | 891 | 12 | 1,385 |
| '22년 | 832 | 10 | 1,331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음주 원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발생 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800건 이상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충남지역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높고, 단속 경찰인력 수는 부족하여 제도보완 및 인력증원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관리여건

충청남도는 도·농 복합형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별 인구와 산업분포가 다양하며, 이에 따른 범죄발생의 양상과 안전에 대한 요구도 차이를 보이는 한편 인력과 장비 등 치안행정관리 환경이 상이한 특성이 있다.

〈표 3-15〉 충남 지역별-분야별 인력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충남전체 | 516 | 508 | 459 | 451 | 434 | 427 |
| 천안서북 | 871 | 861 | 841 | 840 | 741 | 726 |
| 천안동남 | 642 | 626 | 610 | 603 | 574 | 576 |
| 서산 | 676 | 649 | 628 | 625 | 599 | 584 |
| 아산 | 803 | 753 | 743 | 732 | 710 | 728 |
| 논산 | 653 | 626 | 606 | 596 | 598 | 593 |
| 공주 | 451 | 439 | 428 | 421 | 426 | 424 |
| 보령 | 418 | 406 | 394 | 390 | 400 | 395 |
| 당진 | 662 | 636 | 615 | 609 | 590 | 591 |
| 홍성 | 486 | 477 | 466 | 462 | 482 | 476 |
| 예산 | 449 | 443 | 427 | 422 | 434 | 439 |
| 부여 | 372 | 359 | 341 | 336 | 367 | 359 |
| 서천 | 339 | 327 | 311 | 305 | 327 | 323 |
| 금산 | 385 | 375 | 356 | 350 | 380 | 377 |
| 청양 | 249 | 245 | 237 | 232 | 265 | 263 |
| 태안 | 395 | 379 | 365 | 362 | 382 | 381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 전체의 경우, 2017년 516명에서 2019년 459명, 2022년 427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천안 서북, 아산시, 당진시 등 시 지역 대부분에서는 최고 728명(아산), 726명(천안 서북)으로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7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충남 지역별-분야별 인력현황

(단위: 명)

| 서별 구분 | 계 | 서북 | 동남 | 서산 | 아산 | 논산 | 공주 | 보령 | 당진 | 홍성 | 예산 | 부여 | 서천 | 금산 | 청양 | 태안 |
|-----------|-----|----|----|----|----|----|----|----|----|----|----|----|----|----|----|----|
| 생활 안전 | 137 | 16 | 13 | 12 | 14 | 9 | 8 | 8 | 11 | 8 | 6 | 7 | 6 | 6 | 5 | 8 |
| 여성 청소년 | 244 | 35 | 29 | 22 | 31 | 18 | 15 | 14 | 18 | 12 | 9 | 9 | 9 | 8 | 6 | 9 |
| 교통 | 244 | 35 | 29 | 22 | 31 | 18 | 15 | 14 | 18 | 12 | 9 | 9 | 9 | 8 | 6 | 9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지역별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은 교통과 여성청소년이 각각 244명, 생활안전 담당인력이 137명이며,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7〉 학교전담경찰관 운영현황

(단위: 명)

| 구 분 | 계 | 서북 | 동남 | 서산 | 아산 | 논산 | 공주 | 보령 | 당진 | 홍성 | 예산 | 부여 | 서천 | 금산 | 청양 | 태안 |
|------------|------------|----------|----------|----------|----------|----------|------|----------|----------|----------|----------|------|------|-----|-----|------|
| 정원 (현원) | 58 (48) | 7 (5) | 5 (4) | 4 (3) | 6 (4) | 6 (3) | 5 | 3 (2) | 4 (5) | 3 (2) | 2 (1) | 3 | 3 | 2 | 2 | 3 |
| 학교수 | 737 | 65 | 70 | 56 | 80 | 69 | 53 | 51 | 55 | 39 | 43 | 40 | 34 | 29 | 19 | 34 |
| 1인당 | 15.3 | 13 | 17.5 | 18.6 | 20 | 23 | 10.6 | 25.5 | 11 | 19.5 | 43 | 13.3 | 11.3 | 9.6 | 9.5 | 11.3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관련 업무를 전문 경찰관이 전담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경찰 1인당 평균 10개교 내외를 관리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충남 전체의 학교 수는 737개교이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58명에 불과하여 경찰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전국적 평균 11.8개교에 이른다. 특히 예산 43개교, 보령 25.5개교, 논산 23개교, 아산 20개교, 홍성 19.5개교 등으로 나타나 충남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부족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문제로 실제 현원은 정원을 충족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실질적 예방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8〉 연도별 방법용 CCTV설치 현황

(단위: 대)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20,676 | 24,390 | 26,790 | 29,158 | 28,413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충남지역의 방법용 CCTV 설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22년 기준 28,413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의 단위 면적당 3.46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1Km²당 방법용 CCTV 대수는 122대로 가장 적은 곳이 61대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법용 CCTV는 치안을 위해 활용되며, 강·절도와 폭력 등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고 치매노인의 위치추적 등 보호실적 상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따라서 관리면적을 고려하여 설치대수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9〉 지역별 CCTV설치 현황(2021년 기준)

(단위: 대)

| 구분 | 계 | 서북 | 동남 | 서산 | 아산 | 논산 | 공주 | 보령 | 당진 | 홍성 | 예산 | 부여 | 서천 | 금산 | 청양 | 태안 |
|----|--------|-------|-------|-------|-------|-------|-------|-------|-------|-------|-------|-----|-------|-------|-------|-------|
| 대수 | 29,158 | 3,155 | 2,800 | 3,063 | 2,962 | 2,082 | 1,771 | 2,656 | 1,406 | 1,406 | 1,426 | 924 | 1,015 | 1,398 | 1,592 | 1,502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방법용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별 관심도와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데 충남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29,158대이고, 천안에 5,955대, 서산 3,063대, 아산 2,962대, 보령 2,656대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단위: 건)

| 구분 | 합계 | 성별 | | 연령 | | | 발생지역 | | | 인계수단 | | | |
|----|-----|-----|-----|-------|--------|--------|-------|-------|-------|------|-----|-----|----|
| | | 남 | 여 | 1~29세 | 30~59세 | 60세 이상 | 서산·동남 | 태안·서북 | 당진·아산 | 112 | 119 | 공동 | 기타 |
| 누계 | 690 | 544 | 146 | 80 | 395 | 215 | 500 | 171 | 19 | 17 | 515 | 85 | 73 |
| 서산 | 612 | 471 | 141 | 73 | 348 | 191 | 440 | 163 | 9 | 7 | 474 | 70 | 61 |
| 천안 | 78 | 73 | 5 | 7 | 47 | 24 | 60 | 8 | 10 | 10 | 41 | 15 | 12 |
| 월별 | | | | | | | | | | | | |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누계 | 39 | 37 | 39 | 62 | 61 | 65 | 68 | 53 | 79 | 63 | 62 | 62 | |
| 서산 | 39 | 37 | 39 | 62 | 61 | 65 | 50 | 37 | 70 | 52 | 51 | 49 | |
| 천안 | - | - | - | - | - | - | 18 | 16 | 9 | 11 | 11 | 13 |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충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두 곳으로 서산과 천안으로 구분된다. 각 센터별 처리 건수는 서산이 612건, 천안이 78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천안지역은 신규 설치 시설로 7월부터의 처리 건수만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544건, 여성이 146건으로 남성이 많으며, 연령별로는 30~50대가 395건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215건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은 서산, 천안 동남구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서산 센터의 관할지역으로서 이송 건수가 많은 점이 분석에서 추가 고려될 필요는 있다. 월별로는 9월에 가장 많았으나 의미있는 수준의 월별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자율방범대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서북 | 동남 | 서산 | 아산 | 논산 | 공주 | 보령 | 당진 | 홍성 | 예산 | 부여 | 서천 | 금산 | 청양 | 태안 |
|---------|----|-------|-----|-----|-----|-----|-----|-----|-----|-----|-----|-----|-----|-----|-----|-----|
| 남성 대 | 조직 | 217 | 13 | 15 | 18 | 17 | 19 | 12 | 25 | 16 | 16 | 10 | 11 | 12 | 9 | 12 |
| | 인원 | 5,205 | 319 | 316 | 535 | 409 | 491 | 303 | 722 | 332 | 276 | 390 | 218 | 190 | 207 | 289 |
| 여성 대 | 조직 | 85 | 1 | 1 | 8 | 0 | 12 | 9 | 1 | 0 | 1 | 5 | 15 | 7 | 10 | 11 |
| | 인원 | 1,955 | 109 | 86 | 215 | 51 | 244 | 156 | 301 | 41 | 47 | 118 | 123 | 85 | 150 | 151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지율방범대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마을단위로 자율적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봉사조직이다. 전국적인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충남에서는 총 312개 조직에 7,205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자율적 방법의식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방범활동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4월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강화를 통해 준경찰력으로서 경찰의 보조적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명) | 천안 서북 | 천안 동남 | 서 산 | 아 산 | 논 산 | 공 주 | 보 령 | 당 진 | 홍 성 | 예 산 | 부 여 | 서 천 | 금 산 | 청 양 | 태 안 |
|--------|----------|----------|----------|--------|--------|--------|--------|--------|--------|--------|--------|--------|--------|--------|--------|--------|
| 모범운전자회 | 578 | 45 | 28 | 35 | 56 | 39 | 43 | 43 | 59 | 56 | 42 | 35 | 16 | 22 | 16 | 43 |
| 녹색어머니회 | 20,176 | 4,389 | 7,673 | 1,200 | 0 | 213 | 297 | 251 | 5,900 | 61 | 0 | 24 | 72 | 79 | 17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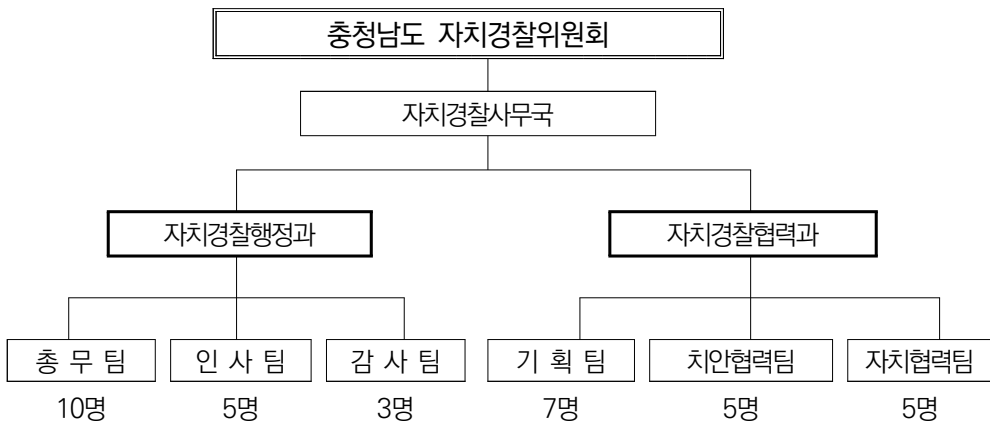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주민참여치안 활성화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교통안전 협력단체로 대표적인 곳이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라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은 2022년 기준 모범운전자회 578명, 녹색어머니회 20,17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운전자회의 경우, 천안이 가장 많은 73명, 당진 59명, 홍성·아산 각 56명, 태안·보령·공주가 각각 43명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어머니회는 천안 동남구 7,673명, 서북구 4,3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시가 5,900명, 서산이 1,200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인구특성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봉사회의 특성과 지역 대표자의 활동력에 따라 변화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의 녹색어머니회 회원수가 0명으로 나타난 것은 조사과정에서 누락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감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과 자치경찰 위원회 내 사무국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도

자료: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자치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이 있다.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의 신분은 경찰법 제23조⁸⁾ 규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

〈표 3-23〉 사무국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정무직 | 일반직(경찰) 정원 | | | | | | 기타 |
|---------|-----------|-----|------------|------------|-------------------|------------|------------|---------|--------|
| | | | 4급 (총경) | 5급 (경정) | 6급 (경감, 경위) | 7급 (경사) | 8급 (경장) | 9급 - | |
| 계 | 35(24/11) | 2 | 2(1/1) | 6(3/3) | 10(8/2) | 8(5/3) | 5(3/2) | 1(1/-) | 1(1/-) |
| 자치경찰행정과 | 18(14/4) | 2 | 1(1/-) | 3(2/1) | 6(4/2) | 2(1/1) | 2(2/-) | 1(1/-) | 1(1/-) |
| 자치경찰협력과 | 17(10/7) | | 1(-/1) | 3(1/2) | 4(4/-) | 6(4/2) | 3(1/2) | |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는데,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사무국은 2과 6팀 3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충남도 소속 일반직 24명과 경찰 소속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총무, 인사, 감사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운영을 담당한다. 자치경찰협력과는 기획, 치안협력, 자치협력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및 시책발굴 업무를 담당한다.

2) 기능과 사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국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되었다.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을 사무로 규정된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 국가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수사 사무의 경우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8)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공동체 치안, 범죄예방 진단 및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방법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치안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운영하며 경비업 허가·폐지 등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생활질서와 관련해서는 경범죄, 자살기도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와 경호 안전검측 및 유지 계획, 풍속사범 단속, 총포·화약류 허가 및 불법무기, 유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여성보호,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대응시책의 발굴과 아동보호시설 및 피해자 쉼터 등 기관간 협력 조정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보호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에도 기여한다.

교통분야는 교통안전시설물관리와 교통규제 업무, 교통관리 및 통제, 지도단속, 과태료 징수와 무인단속장비의 운영,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단체의 운영과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는 교통소통 유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에 기여한다.

3. 정책적 시사점

충남도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으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4%대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안전은 지역 간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발생 건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역 내 유형별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치안수요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공·상업지역과 해안지역 등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집결된 지역으로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주민 생활에 근접한 형태의 치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의 가속화 및 산업인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의 증가, 외부인구의 유입 등 신종 범죄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 물적 치안수요의 증가와 특수한 치안수요로의 확장 추세는 기존 경찰이 가지는 인력과 사무구조의 경직성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며, 질서유지, 교통분야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단기적인 인력확충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다변화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112 신고, 가정 폭력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치안 인프라의 재구축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치안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재발 우려가 높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

단하는 등의 예방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도내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도시권 중심으로 크게 나타나며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그 수치가 적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예방과 치안 확보를 위한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등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는 분야의 신고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전문상담기관 연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는 전반적인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 및 절도 범죄의 경우도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보이는 등 학교폭력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학교폭력 경향이 신체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인 유형은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70%에 이를 만큼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안전분야에서는 ‘민식이 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처벌 강화로 관련 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관련 범죄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의 전국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사무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에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발굴은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 비전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책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제 4 장

도민 치안행정 수요 분석

1.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주민수요 특성
 - 1) 자치경찰제도의 주민참여 보장 제도기반
 - 2) 자치법규 검토
 -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여론 동향
 - 4) 112 신고 및 민원데이터 분석
 - 5) 지역안전 거버넌스와 치안협력 네트워크
 - 6) 종합
2.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2)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 3)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
 - 4)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 5)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인식
 - 6) 종합
3. 자치경찰 관련 연구 및 언론 분석
 - 1) 개요
 - 2) 자치경찰 관련 연구
 - 3) 자치경찰 관련 언론
 - 4) 종합

1.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주민수요 특성

1) 자치경찰제도의 주민참여보장 제도기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취지는 주민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가 직·간접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찰법상 주민의 참여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으며, 간접참여 방식도 조직규정이나 사무규정 일부에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1) 사전참여

자치경찰제도에서 주민참여는 사전참여와 사후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을 지역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는 그 자체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 구성을 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주민참여는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단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사무의 실질적 지휘감독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한다. 그러나 시·도 경찰청장의 임명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은 없으며, 시·도경찰위원회의 형식적 추천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경찰법상 유일한 자치경찰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위의 단체장 소속으로 설치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시·도 의회가 추천하

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으로 이루어진다. 임명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위원 중 1인은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서 국가경찰기관의 개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주민의 자주적 책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김원중, 2021).

현재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도는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치안업무 수행은 여전히 일선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진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기관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나, 경찰기관 구성에 주민의사의 직접반영은 규정되지 않으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시·도 의회와 시·도 교육감 추천인사의 임명을 통한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접적 참여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는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업무 수행이다. 현행 경찰법상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규정에 제시하는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기준의 요건으로서 지역주민이 아니어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주민의 참여 자격을 예외적⁹⁾ 상황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 조항에서도 “지역주민의

9)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경찰법 제21조 제2항)”고 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법정화 하지는 않는다. 특히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은 7인 중 2인에 제한되어 나머지 5인을 모두 지역주민과 관련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2) 사후통제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 등 안전과 관련된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녕을 위한 범위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주민생활의 질 향상과 청소년 보호 등 생활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민 위주의 봉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이기춘, 2018). 따라서 경찰활동은 권력적 작용에 의해 주민의 안녕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자치경찰이 지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치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함께 사후통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경찰법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주민 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단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의 요구권¹⁰⁾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되어 임

10)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명된 대표성을 가지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권자의 의사에 반한 사무를 심의·의결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의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김원중, 2021).

경찰법은 주민이 자치경찰 사무에 참여할 권한과 감독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지역치안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처리한다는 근본 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자치경찰 사무 감독권 행사가 지역주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의 법제도 하에서 제한적인 주민참여의 기회 보장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경찰제도 시행의 본래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사무에 반영하여 치안정책의 반응성(responsiveness)¹¹⁾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장기적 관점에서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수요 요인을 필요와 선호, 참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분야별 예산 분석을 통해 주민 수요 반응성을 분석한 연구(정영아·김윤지, 2022)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사업 예산 배분이 주민의 다양한 수요 중 선거 활용목적 또는 일부 복지수요에만 한정하여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수요에 있어서 노인

11) 지방정부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단위로서 지역주민과 밀착하여 주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정영아·김윤지, 2022)는 점과 지방자치 목적이 구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제13조 제2항)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반응성 특히 치안행정에서의 반응성은 지방정부(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한)가 책임있는 태도로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비율 등 필요 측면의 반영만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선호의 측면이나 투표율 등 각종 참여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이 실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동시에 정책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식적 참여기제 마련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창구의 확충 필요성이 높다.

2) 자치법규 검토

앞선 논의에서와 같이 경찰법 개정의 이유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 요구 및 주민 밀착형 제도운동을 위한 목적성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주민의 의견개진 및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법이 바라보는 주민은 보호의 대상으로 제시될 뿐이며, 주민 참여활동이나 자치경찰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수렴도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통한 법률적·제도적 행위 수행이 요구된다(이동기·조경옥, 2021).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내용을 포함하는 규범이며,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221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향의 설정이 가능하고, 필요한 조직의 설치와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진다.

각 시도의 관련 조례는 내용상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는 조례가 갖는

12)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측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또는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특화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내용 유사성을 갖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지역 특화 치안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지역의 치안 현황을 고려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항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만큼 지역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실무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 10조제2항¹³⁾에서는 실무협의회를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간사에 대해서도 사무기구 소속 과장으로 정하는 등 실무협의회 구성원 자체를 정부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자치경찰의 목표수립이나 평가 및 실무 협의에서도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주로 기존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 간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마련된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조항의 내용과 운영을 경찰사무의 조정으로 한정하는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성원을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특정할 타당한 근거는 없다. 또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내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발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주민과 기업,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13)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국이 일괄적인 형식과 내용을 따른 현재의 내용 규정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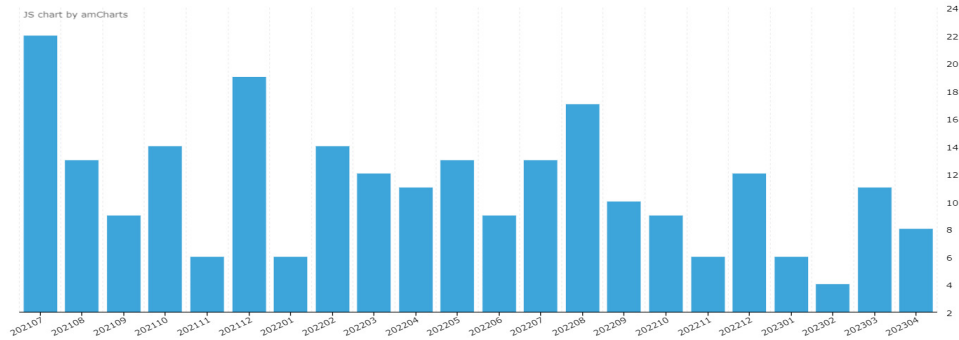
법률이 모든 사항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에 주민 참여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경찰제의 구상과 제도의 도입이라면 주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근거에 담고 있어야 함이 타당하며, 주민의 참여 기회를 명문화 하는 규정의 마련과 그 운영의 적극성이 필요할 것이다.

3) 자치경찰제도 관련 여론 동향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이후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비교할 수 있으나, 제도 시행의 기간이 짧아 지표상 유의미한 변화를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론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여 제도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동향을 파악하여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주민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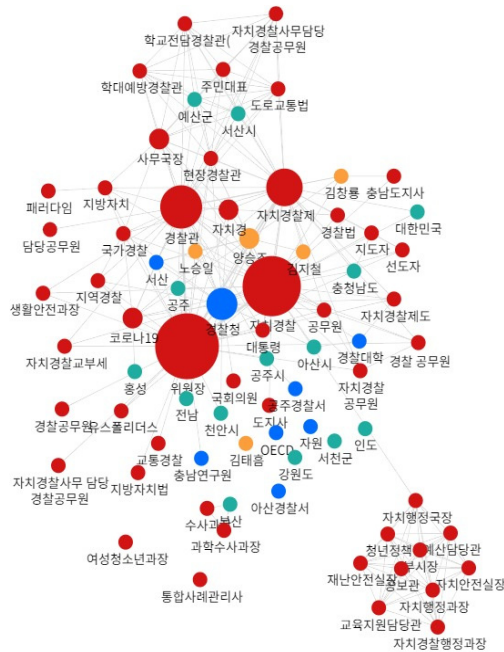
충남 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권 지역일간지 기사에 빈도가 높게 출현하는 키워드를 확인하여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기별 언론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시행된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다. 빅카인즈 지역일간지(6개사)¹⁴⁾ 기사 중 ‘자치경찰’, ‘충남’ 단어가 모두 포함된 기사 248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4)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일보, 충남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그림 4-1] 자치경찰 관련 언론보도 건수(기간 중 월별)

자치경찰제 시행직후 언론보도 비중이 높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2월, 2022년 8월에 일시 증가하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시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사나 동향 관련보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림 4-2] 주제어간 연결망 분석 결과

자치경찰의 본격 시행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및 임명 위원장에 대한 관심사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안전, 교통, 아동학대 등 주민밀착형 수사 사무와 같이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연결망에 나타난 결과에서는 교통안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통합사례관리, 학대예방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 등의 단어 구성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청소년 보호와 생활안전 등 관련 활동의 기사가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자치경찰 관련기사 빈출어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1 | 자치경찰 | 359 | 11 | 주취자 | 78 |
| 2 | 위원장 | 245 | 12 | 간담회 | 78 |
| 3 | 자치경찰위원회 | 242 | 13 | 사무 | 71 |
| 4 | 치안 | 239 | 14 | 도민 | 68 |
| 5 | 충남 | 219 | 15 | 치안협의체 | 31 |
| 6 | 교통 | 202 | 16 | 업무협약 | 28 |
| 7 | 안전 | 182 | 17 | 생활안전 | 28 |
| 8 | 지역 | 151 | 18 | 정기회의 | 28 |
| 9 | 정책 | 143 | 19 | 정착 | 27 |
| 10 | 개최 | 91 | 20 | 어린이 | 24 |

빈출단어를 중심으로 상위에 기록되는 단어는 자치경찰,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치안, 충남, 교통, 안전, 지역, 정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치안 정책의 일환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주취자 보호는 물론 응급의료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 계획을

세웠다. 이는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대안으로 추진된 시책이었다. 이에 관련 기관의 업무협약 등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충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망자 수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언론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자치경찰 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한 보도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안건 등의 단어들이 빈출된 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개최한 정기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영향으로 파악된다.

〈표 4-2〉 충청권 주요일간지 사설 제목

| 날짜 | 언론사명 | 사설 제목 |
|--------------|------|-------------------------|
| 2021. 07. 07 | 충북일보 | 후안무치 농산물 절도 검거율 높여라 |
| 2021. 08. 05 | 중부매일 | 출범 한달 자치경찰제가 가야할 길 |
| 2021. 12. 26 | 중부매일 | 도 넘은 경찰관 비위 일탈 일벌백계해야 |
| 2022. 01. 14 | 중도일보 | 새 지방자치법 시행, 남은 과제도 많다 |
| 2022. 02. 11 | 중도일보 | 자치경찰위 '대선 공약화' 주목된다 |
| 2022. 02. 27 | 대전일보 | 고령층 교통사고 '억지' 나선 충남자치경찰 |
| 2022. 04. 03 | 충남일보 | 충남자치경찰청 출범 1주, 주민소통 주목 |

빈출어의 추출을 통해서는 기사의 논조와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일간지 사설 제목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동향을 분석하였다. 사설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의 기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판 기조가 논조에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론 동향의 파악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충청권 전체에

대한 사설 중 충남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건수를 파악하면 총 7건이 도출되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기대심이 표현된 것이 농산물 절도에 대한 검거율 관련 논의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의 방향성 제시에 따른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경찰관의 일탈행위 이슈화 현장의 문제점 등이 제시되면서 자치경찰이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의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설이 제시되었으며, 제도 시행을 통해 변화를 기대한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언론기사에 나타난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일차적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의 도입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치경찰의 도입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 경찰권한의 분권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¹⁵⁾. 언론보도에 나타난 핵심내용은 자치경찰제 시행이후, 새로운 제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데 대한 기대와 자치경찰제가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특히 시기별 사설 제목의 변화 추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목표방향으로 서서히 진화하는 발전의 모습을 보인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의 동향은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발굴과 시행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내포한다는 점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시하기 보다는 주변 지역 또는 해외의 사업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이유

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를 보여왔다. 자치경찰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방단계를 거쳐 학습과 경험이 축적된 이후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역량을 배양해가는 것도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배제할 수 없다.

4) 112 신고 및 민원데이터 분석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 다양한 분야에서 경찰의 업무영역 확대, 주민친화적인 이미지 구현 및 휴대전화 보급률 향상 영향으로 112신고에 대한 접근성 증대되었으며, 112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전화 신고 외에도 문자, 원터치 SOS, 112앱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접수되는 112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3〉 사건신고통계-접수코드¹⁶⁾별 접수 현황

(단위: 건)

| 기간 | 소계 | 접수코드 | | | | |
|-----------|---------|-------|--------|---------|--------|---------|
| | | C0 | C1 | C2 | C3 | C4 |
| 2022.1-6 | 387,437 | 932 | 44,316 | 134,485 | 28,889 | 178,815 |
| 2022.7-12 | 448,691 | 607 | 51,436 | 148,454 | 31,180 | 217,014 |
| 2022 전체 | 836,128 | 1,539 | 95,752 | 282,939 | 60,069 | 395,829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16) 긴급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 1일부터 대응코드를 3단계(코드1~3)에서 5단계(코드0~4)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 예규)과 112신고 경찰대응 효율화 계획('15. 10월)에 근거).

C0는 강력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것으로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신고로 판단하는 경우 'CODE 0'로 분류한다. 주로 강력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체계가 전개 된다. C1은 선지령 및 제반 출동요소 공조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건이 진행 과정에 있거나 진행 직후 생명과 신체의 위협이 임박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또는 현행범을 목격한 경우로 분류한다. C2는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협이 있거나 범죄예방 필요성이 있는 경우, C3은 즉각적 현장조치가 불필요하나 수사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C4는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 또는 상담신고의 경우로 분류된다. C4로 분류된 사건의 경우는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됨이 원칙이다.

충남지역에서 지난해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총 836,128건으로 이 중 CODE-4로 분류되는 단순 민원 또는 상담신고가 395,829건으로 전체의 47.3%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C2에 해당하는 신고가 282,939건(33.8%)으로 가장 많았다. CODE-1 사건의 비율도 11.5%로 나타났으며(95,752건), CODE-0 사건도 2022년 한 해 동안 1,539건으로 집계되어 약 0.2% 비율로 기록되었다. CODE-2로 분류되는 신고 건의 경우, 예를 들어 취객이 영업시간이 끝난 식당에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귀가했더니 도둑이 침입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취객을 억지로 깨울 때 잠재적 위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도둑이 침입한 흔적 역시 추후 발생할 범죄의 예방을 위해 현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 출동사건(CODE-0, CODE-1)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속한 출동을 요한다.

〈표 4-4〉 충청남도 경찰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 년도별 | 유형 | 살인 | 강도 | 강간_추행 | 절도 | 폭력 |
|-------|----|----|----|-------|--------|--------|
| 2013년 | 발생 | 64 | 94 | 851 | 13,154 | 9,384 |
| | 검거 | 64 | 88 | 739 | 5,141 | 7,531 |
| 2014년 | 발생 | 63 | 80 | 895 | 12,019 | 9,739 |
| | 검거 | 64 | 70 | 827 | 5,090 | 7,952 |
| 2015년 | 발생 | 53 | 51 | 827 | 11,506 | 10,033 |
| | 검거 | 53 | 48 | 809 | 5,512 | 8,484 |
| 2016년 | 발생 | 53 | 50 | 859 | 9,366 | 11,115 |
| | 검거 | 53 | 49 | 839 | 4,754 | 9,482 |
| 2017년 | 발생 | 51 | 36 | 885 | 8,648 | 11,439 |
| | 검거 | 49 | 33 | 881 | 4,865 | 9,838 |
| 2018년 | 발생 | 33 | 40 | 825 | 7,985 | 11,161 |
| | 검거 | 30 | 38 | 822 | 4,171 | 9,613 |
| 2019년 | 발생 | 42 | 31 | 819 | 8,212 | 10,275 |
| | 검거 | 43 | 36 | 815 | 4,585 | 8,870 |
| 2020년 | 발생 | 35 | 40 | 806 | 7,623 | 9,668 |
| | 검거 | 35 | 38 | 807 | 4,317 | 8,146 |
| 2021년 | 발생 | 34 | 21 | 788 | 7,139 | 8,525 |
| | 검거 | 31 | 21 | 761 | 4,195 | 7,105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2013년 이후 5대 범죄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3년 대비 2021년 절도발생 건수가 45.7% 감소하였다. 다만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검거율의 상향이 발생건의 감소에 직접적 영향으로 보이며, 경찰력의 추가 등 제반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폭력 건수는 201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21년에는 8,525건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폭력사건의 감소세가 2018년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2020년 이후의 감소추세는 코로나 등 대면 접촉 기회의 축소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워 향후 변화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간, 추행 발생 건수에 있어서는 2021년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800건 이상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방관리가 요구된다.

〈표 4-5〉 관서별 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 경찰서 | 소계 | 접수코드 | | | | |
|-------|---------|------|--------|--------|--------|---------|
| | | C0 | C1 | C2 | C3 | C4 |
| 충남청 | 328,078 | 47 | 1,646 | 3,186 | 1,061 | 322,138 |
| 천안서북서 | 96,018 | 285 | 15,566 | 55,317 | 12,348 | 12,502 |
| 천안동남서 | 63,884 | 172 | 10,025 | 36,337 | 8,782 | 8,568 |
| 서산서 | 37,560 | 86 | 6,694 | 21,086 | 4,546 | 5,148 |
| 아산서 | 76,475 | 206 | 13,219 | 43,349 | 8,077 | 11,624 |
| 논산서 | 29,335 | 125 | 5,715 | 16,584 | 2,767 | 4,144 |
| 공주서 | 27,542 | 78 | 4,728 | 12,757 | 2,701 | 7,278 |
| 보령서 | 25,646 | 77 | 4,165 | 15,146 | 3,371 | 2,887 |
| 당진서 | 42,150 | 140 | 6,848 | 22,218 | 5,192 | 7,752 |
| 홍성서 | 19,971 | 44 | 3,630 | 11,265 | 2,371 | 2,661 |
| 예산서 | 15,384 | 55 | 3,335 | 8,289 | 1,671 | 2,034 |
| 부여서 | 11,772 | 25 | 2,215 | 5,582 | 1,840 | 2,110 |
| 서천서 | 12,169 | 41 | 1,812 | 6,351 | 788 | 3,177 |
| 금산서 | 9,433 | 23 | 2,046 | 5,241 | 741 | 1,382 |
| 청양서 | 4,949 | 37 | 1,204 | 2,516 | 576 | 616 |
| 태안서 | 14,905 | 32 | 3,126 | 8,214 | 1,912 | 1,621 |
| 교통과 | 5 | 0 | 4 | 1 | 0 | 0 |

자료: 충남경찰청 내부자료

충남경찰청으로 접수되는 건수를 제외한 시군 관서별 사건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서북서가 96,018건으로 가장 많으며, 아산서 76,475건, 천안 동남서 63,884건, 당진서 42,150건, 서산서 37,5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4개 지역의 사고 접수 건수는 316,087건으로 전체 시군의 65%에 이른다.

경찰 인력의 부족에 따라 응급사건 중심으로 사후대처가 이루어지는 것 외에 전체 발생건수 중 비응급으로 구분되는 C2 이하의 사건 종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예방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경미한 신고와 사건화 이전단계에서 종결되는 사안으로 시작되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적시개입을 위한 예측적 데이터관리 필요성이 높다.

〈표 4-6〉 관서별 사건신고자 유형 현황

(단위: 건)

| 경찰서 | 소계 | 내국인 | | | 외국인 | | |
|-------|---------|--------|--------|---------|-----|---|----|
| | | 남 | 여 | 불상 | 남 | 여 | 불상 |
| 충남청 | 328,078 | 85,510 | 43,683 | 198,880 | 1 | 2 | 2 |
| 천안서북서 | 96,018 | 50,682 | 25,534 | 19,802 | 0 | 0 | 0 |
| 천안동남서 | 63,884 | 33,165 | 17,445 | 13,274 | 0 | 0 | 0 |
| 서산서 | 37,560 | 19,264 | 9,922 | 8,374 | 0 | 0 | 0 |
| 아산서 | 76,475 | 39,286 | 19,320 | 17,868 | 1 | 0 | 0 |
| 논산서 | 29,335 | 14,603 | 7,900 | 6,832 | 0 | 0 | 0 |
| 공주서 | 27,542 | 11,763 | 7,031 | 8,748 | 0 | 0 | 0 |
| 보령서 | 25,646 | 13,798 | 6,743 | 5,105 | 0 | 0 | 0 |
| 당진서 | 42,150 | 20,768 | 9,831 | 11,551 | 0 | 0 | 0 |
| 홍성서 | 19,971 | 9,998 | 5,442 | 4,531 | 0 | 0 | 0 |
| 예산서 | 15,384 | 7,585 | 3,878 | 3,921 | 0 | 0 | 0 |

| 경찰서 | 소계 | 내국인 | | | 외국인 | | |
|-----|---------|---------|---------|---------|-----|---|----|
| | | 남 | 여 | 불상 | 남 | 여 | 불상 |
| 부여서 | 11,772 | 5,338 | 3,192 | 3,242 | 0 | 0 | 0 |
| 서천서 | 12,169 | 5,268 | 2,883 | 4,018 | 0 | 0 | 0 |
| 금산서 | 9,433 | 4,740 | 2,192 | 2,501 | 0 | 0 | 0 |
| 청양서 | 4,949 | 2,292 | 1,234 | 1,423 | 0 | 0 | 0 |
| 태안서 | 14,905 | 7,806 | 3,922 | 3,177 | 0 | 0 | 0 |
| 교통과 | 5 | 2 | 1 | 2 | 0 | 0 | 0 |
| 합계 | 487,198 | 246,358 | 126,470 | 114,369 | 2 | 2 | 2 |

자료: 충남경찰청 내부자료

외국인에 의한 신고 건수는 전체 6건으로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내국인에 의해 접수되고 있다. 남성이 신고한 경우가 331,868건으로 여성 170,153건에 비해 많았으나 신고자의 성별이 기록되지 않거나 불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충남청 신고 건에 대한 불상처리가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시군 관서만 종합해 볼 때, 남성은 246,358건, 여성은 126,470건, 불상은 114,369건으로 전 시군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의 신고 건을 보이고 있으며, 불상으로 기록된 수치는 여성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기준 관서별-사건종별 112 신고접수 현황(2022년)

(단위: 건)

| 관서 | 중요범죄 | 기타범죄 | 질서유지 | 교통 | 기타경찰 업무 | 타기관 기타 |
|---------|--------|--------|---------|---------|------------|-----------|
| 계 | 23,999 | 64,902 | 126,872 | 101,037 | 188,031 | 310,758 |
| 충남청 | 522 | 2,945 | 1,957 | 1,735 | 103,324 | 223,659 |
| 천안서북서 | 5,043 | 13,744 | 24,451 | 15,514 | 16,751 | 14,973 |
| 천안동남서 | 3,213 | 7,796 | 16,347 | 10,219 | 11,972 | 8,121 |
| 서산서 | 2,053 | 4,721 | 10,363 | 7,218 | 6,360 | 5,404 |
| 아산서 | 3,634 | 9,907 | 17,574 | 13,525 | 11,084 | 13,751 |
| 논산서 | 1,427 | 4,119 | 8,049 | 5,163 | 4,546 | 5,162 |
| 공주서 | 958 | 2,392 | 5,375 | 4,601 | 4,344 | 9,950 |
| 보령서 | 1,161 | 3,427 | 6,400 | 5,115 | 5,834 | 4,047 |
| 당진서 | 1,976 | 5,497 | 10,410 | 7,872 | 6,392 | 8,988 |
| 홍성서 | 917 | 2,214 | 4,939 | 4,155 | 3,130 | 2,999 |
| 예산서 | 716 | 1,866 | 3,548 | 3,228 | 3,324 | 2,240 |
| 부여서 | 572 | 1,160 | 2,711 | 1,960 | 2,380 | 2,731 |
| 서천서 | 428 | 1,099 | 2,497 | 1,955 | 2,609 | 3,224 |
| 금산서 | 380 | 1,120 | 2,356 | 1,719 | 1,619 | 1,643 |
| 청양서 | 181 | 454 | 1,199 | 915 | 1,025 | 1,007 |
| 태안서 | 723 | 1,896 | 3,906 | 2,944 | 2,876 | 2,454 |
| 고속도로순찰대 | 95 | 542 | 4,763 | 13,128 | 457 | 404 |
| 교통과 | 0 | 3 | 27 | 71 | 4 | 1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2022년 기준 112 신고 접수된 현황을 관서별로 살펴보면 타 기관 사무에 해당하여 이관한 단순신고 건이 310,7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기타 경찰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188,031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질서유지 관련 신고 건수가 126,872건, 교통 관련이 101,037건, 기타범죄 64,872건, 중요범죄 23,9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서유지 관련 신고 건수가 가장 많

은 지역은 천안 서북서(24,451건)였으며, 아산서(17,574건), 천안 동남서(16,347건), 당진서(10,410건), 서산서(10,363건) 순으로 해당 지역은 연간 1만 건 이상의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교통관련 신고접수는 고속도로 순찰대(13,128건)를 제외하면 천안 서북서(15,514건), 아산서(13,525건), 천안 동남서(10,219건)를 중심으로 연간 1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당진(7,872건), 서산(7,218건)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타범죄의 경우 전체 64,902건 중 21.1%인 13,744건이 천안 서북서 관할에서 발생하였으며, 동남서(7,796건), 아산서(9,907건)를 포함하면 천안·아산 지역의 신고 건수가 31,447건으로 전체의 48.4%에 이른다. 신고 발생 건수의 편차가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차별적 대안이 요구된다.

〈표 4-8〉 중요범죄의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단위: 건)

| 시기 | 중요범죄 | | | | | | | | | | |
|----|--------|----|----|----|--------|----------|-----|----------|-------------------|------------------|-----------|
| 월 | 계 | 살인 | 강도 | 치기 | 절도 | 납치 감금 | 성폭력 | 가정 폭력 | 아동 학대 (가정내) | 아동 학대 (기타) | 데이트 폭력 |
| 합계 | 23,844 | 49 | 14 | 2 | 10,683 | 109 | 943 | 8,186 | 969 | 167 | 2,722 |
| 1월 | 1,753 | 10 | 1 | 0 | 674 | 19 | 56 | 702 | 55 | 13 | 223 |
| 2월 | 1,484 | 4 | 3 | 0 | 561 | 14 | 50 | 570 | 65 | 13 | 204 |
| 3월 | 1,886 | 1 | 1 | 1 | 789 | 18 | 60 | 705 | 95 | 19 | 197 |
| 4월 | 1,924 | 11 | 1 | 0 | 944 | 7 | 66 | 599 | 85 | 20 | 191 |
| 5월 | 2,218 | 1 | 0 | 0 | 1,079 | 4 | 99 | 685 | 98 | 15 | 237 |
| 6월 | 2,141 | 1 | 0 | 0 | 1,025 | 9 | 92 | 658 | 79 | 15 | 262 |
| 7월 | 1,993 | 1 | 3 | 0 | 956 | 8 | 108 | 628 | 87 | 9 | 193 |
| 8월 | 2,094 | 6 | 0 | 0 | 958 | 5 | 89 | 720 | 67 | 5 | 244 |

| 시기 | 중요범죄 | | | | | | | | | | |
|-----|-------|----|----|----|-------|----------|-----|----------|-------------------|------------------|-----------|
| 월 | 계 | 살인 | 강도 | 치기 | 절도 | 납치 감금 | 성폭력 | 가정 폭력 | 아동 학대 (가정내) | 아동 학대 (기타) | 데이트 폭력 |
| 9월 | 2,313 | 2 | 0 | 0 | 973 | 7 | 102 | 834 | 109 | 19 | 267 |
| 10월 | 2,180 | 9 | 1 | 0 | 1,038 | 5 | 85 | 688 | 75 | 20 | 259 |
| 11월 | 2,115 | 1 | 4 | 0 | 989 | 4 | 83 | 731 | 83 | 13 | 207 |
| 12월 | 1,743 | 2 | 0 | 1 | 697 | 9 | 53 | 666 | 71 | 6 | 238 |

자료: 충남도경찰청 내부자료

중요범죄의 사건 종류별로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건수 중 살인과 강도, 치기 등의 범죄간 발생월별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살인의 경우, 1월과 4월에 각각 10건, 11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0월에 9건, 8월 6건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절도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5월, 6월, 10월이며, 절도의 경우, 4월부터 11월 사이에 월간 900~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12월부터 3월 사이와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 시기는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로 빈집 외부침입에 의한 절도 발생이 많으며, 10월과 11월은 수확기 농작물 절도 발생 영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과 납치의 경우, 1월~3월 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성폭력의 경우, 5월부터 9월 사이에 높게 나타났다. 특히 7월, 9월에 많은 발생을 보여 해당 시기 집중적인 예방관리 활동이 요구된다. 가정폭력 사건은 전 시기 고른 분포를 보이나 9월에 가장 많았다. 9월은 가정 내 아동학대 접수 건수도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나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적 확인과 9월을 전후한 시기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징후 모니터링과 학교와 상담센터 등 관련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초기 개입을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는 절도가 10,68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 8,186건, 데이트폭력이

2,7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여 신고되지 못한 건수도 잠재해 있을 우려가 높아 실제 발생 건수는 접수된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의 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표 4-9〉 기타범죄의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단위: 건)

| 시기 | 기타범죄 | | | | | | | | | | | | | | | |
|-----|--------|--------|-----|----|-----|-------|-------|------|-------|-------|--------|-----|------|-----|--------|------|
| 월 | 계 | 폭력 | 사기 | 공갈 | 협박 | 도박 | 재물손괴 | 주거침입 | 풍속영업 | 수배불심자 | 기타형사범 | 스토킹 | 학교폭력 | 마약 | 피싱사기 | 동물학대 |
| 합계 | 69,287 | 15,974 | 550 | 16 | 452 | 2,133 | 3,556 | 902 | 2,825 | 1,213 | 27,058 | 970 | 711 | 288 | 12,348 | 291 |
| 1월 | 4,862 | 982 | 46 | 0 | 43 | 259 | 215 | 62 | 208 | 116 | 1,735 | 90 | 44 | 13 | 1,037 | 12 |
| 2월 | 4,378 | 859 | 51 | 0 | 25 | 194 | 179 | 66 | 207 | 95 | 1,690 | 71 | 31 | 14 | 879 | 17 |
| 3월 | 5,548 | 1,193 | 43 | 1 | 47 | 184 | 284 | 88 | 203 | 122 | 2,143 | 81 | 36 | 10 | 1,091 | 22 |
| 4월 | 6,381 | 1,464 | 68 | 2 | 48 | 166 | 308 | 115 | 234 | 98 | 2,534 | 50 | 100 | 17 | 1,158 | 19 |
| 5월 | 6,719 | 1,512 | 47 | 2 | 29 | 147 | 341 | 87 | 266 | 140 | 2,678 | 89 | 94 | 39 | 1,219 | 29 |
| 6월 | 6,239 | 1,460 | 47 | 5 | 51 | 181 | 370 | 81 | 240 | 99 | 2,650 | 71 | 61 | 43 | 838 | 42 |
| 7월 | 6,034 | 1,437 | 55 | 2 | 19 | 185 | 308 | 65 | 286 | 98 | 2,440 | 64 | 48 | 19 | 977 | 31 |
| 8월 | 5,980 | 1,482 | 45 | 1 | 30 | 173 | 316 | 60 | 249 | 83 | 2,336 | 76 | 31 | 11 | 1,060 | 27 |
| 9월 | 6,219 | 1,624 | 31 | 0 | 57 | 172 | 327 | 76 | 198 | 116 | 2,501 | 96 | 70 | 32 | 898 | 21 |
| 10월 | 6,244 | 1,475 | 47 | 1 | 37 | 152 | 345 | 88 | 208 | 63 | 2,482 | 123 | 56 | 41 | 1,102 | 24 |
| 11월 | 5,700 | 1,270 | 43 | 1 | 42 | 155 | 285 | 68 | 234 | 85 | 2,134 | 89 | 77 | 29 | 1,162 | 26 |
| 12월 | 4,983 | 1,216 | 27 | 1 | 24 | 165 | 278 | 46 | 292 | 98 | 1,735 | 70 | 63 | 20 | 927 | 21 |

자료: 충남도경찰청 내부자료

기타범죄는 주로 폭력, 사기, 공갈, 협박, 도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풍속영업이나 수배불심자, 스톱 학교폭력, 피싱사기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발생을 포괄한다. 발생 건수를 종합할 때 가장 많은 유형은 기타형사범(27,058건), 폭력(15,974건), 피싱사기(12,348건) 순이며, 재물손괴(3,556건), 풍속영업관련

(2,825건), 도박(2,133건)도 연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유형인 기타형사범은 명예훼손, 권리행사방해, 신용업무경매, 비밀침입, 유기, 교통방해, 도주와 범죄은닉, 무고, 공안, 내란, 음용수관련,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등이 해당된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볼 때 명예 관련 사항이 가장 많으며, 공무방해, 신용업무경매, 권리행사방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형상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폭력은 1~2월을 제외하고 월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9월이었다. 피싱사기범죄는 전 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5월에 가장 많았으며, 10월과 11월, 4월에도 높게 나타났다. 재물손괴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6월이었으며, 풍속영업의 경우도 12월과 7월 등 관광객이나 연말 등 음주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 범죄는 연간 970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기는 10월로 123건이 발생하였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는 연간 711건으로 신학기에서 적응기간을 거친 4월과 5월이 각각 100건,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4-10〉 질서유지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단위: 건)

| 시기 | 질서유지 | | | | | | | | |
|----|---------|--------|--------|--------|----------|--------|-------|--------|-------|
| 월 | 계 | 시비 | 행패 소란 | 청소년 비행 | 무전 취식 승차 | 주취자 | 보호 조치 | 위험 방지 | 기타 경범 |
| 합계 | 141,954 | 24,451 | 14,515 | 4,007 | 3,649 | 19,815 | 5,448 | 66,135 | 3,934 |
| 1월 | 8,159 | 1,497 | 849 | 176 | 128 | 944 | 410 | 3,772 | 383 |
| 2월 | 7,477 | 1,177 | 795 | 137 | 122 | 740 | 307 | 3,955 | 244 |
| 3월 | 9,896 | 1,751 | 1,131 | 265 | 178 | 1,109 | 413 | 4,714 | 335 |
| 4월 | 11,891 | 2,120 | 1,271 | 445 | 274 | 1,444 | 492 | 5,475 | 370 |

| 시기 | 질서유지 | | | | | | | | |
|-----|--------|-------|-------|--------|----------|-------|-------|-------|-------|
| 월 | 계 | 시비 | 행패소란 | 청소년 비행 | 무전 취식 승차 | 주취자 | 보호 조치 | 위험 방지 | 기타 경범 |
| 5월 | 13,416 | 2,344 | 1,288 | 448 | 388 | 1,799 | 581 | 6,212 | 356 |
| 6월 | 13,994 | 2,291 | 1,263 | 418 | 384 | 2,101 | 533 | 6,642 | 362 |
| 7월 | 14,364 | 2,209 | 1,280 | 362 | 369 | 2,457 | 522 | 6,870 | 295 |
| 8월 | 13,386 | 2,372 | 1,435 | 309 | 354 | 2,288 | 634 | 5,654 | 340 |
| 9월 | 13,633 | 2,350 | 1,310 | 477 | 323 | 2,320 | 497 | 5,910 | 446 |
| 10월 | 13,024 | 2,426 | 1,378 | 452 | 389 | 1,730 | 407 | 5,882 | 360 |
| 11월 | 11,828 | 2,130 | 1,189 | 330 | 373 | 1,502 | 365 | 5,678 | 261 |
| 12월 | 10,886 | 1,784 | 1,326 | 188 | 367 | 1,381 | 287 | 5,371 | 182 |

자료: 충남도경찰청 내부자료

질서유지에 관련된 사건은 단순시비, 행패소란, 청소년비행, 주취자, 보호조치와 위험방지 및 기타 경범죄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으로는 위험방지 관련 사항으로 연간 66,135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비 발생 24,451건, 주취자 관련이 19,815건, 행패소란이 14,5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신고 건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적인 주취자 관련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비, 위험방지, 행패소란, 무전 취식 등 질서유지 관련 대부분의 사건이 음주와 관련이 높아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경찰력 낭비를 막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표 4-11〉 교통관련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단위: 건)

| 시기 | 교통 | | | | | | |
|-----|---------|--------|--------|-------|-------------|------|--------|
| 월 | 계 | 교통사고 | 교통불편 | 교통위반 | 사망· 대형사고 | 인피도주 | 음주운전 |
| 합계 | 110,098 | 66,142 | 15,543 | 9,315 | 11 | 9 | 19,078 |
| 1월 | 7,337 | 4,726 | 926 | 532 | 0 | 1 | 1,152 |
| 2월 | 6,213 | 3,902 | 785 | 518 | 0 | 0 | 1,008 |
| 3월 | 7,555 | 4,527 | 1,175 | 624 | 0 | 1 | 1,228 |
| 4월 | 9,302 | 5,393 | 1,313 | 868 | 0 | 1 | 1,727 |
| 5월 | 10,257 | 6,052 | 1,395 | 963 | 0 | 1 | 1,846 |
| 6월 | 9,405 | 5,450 | 1,305 | 817 | 0 | 1 | 1,832 |
| 7월 | 9,583 | 5,676 | 1,187 | 837 | 0 | 0 | 1,883 |
| 8월 | 9,724 | 5,725 | 1,505 | 806 | 0 | 0 | 1,688 |
| 9월 | 10,634 | 6,350 | 1,345 | 1,073 | 1 | 0 | 1,865 |
| 10월 | 10,693 | 6,321 | 1,535 | 930 | 1 | 2 | 1,904 |
| 11월 | 10,023 | 6,168 | 1,501 | 802 | 1 | 2 | 1,549 |
| 12월 | 9,372 | 5,852 | 1,571 | 545 | 8 | 0 | 1,396 |

자료: 충남도경찰청 내부자료

교통사고 발생에 의한 신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연중 19,078건의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는데, 10월에 1,9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5월~7월, 9월과 10월에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음주관련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시기도 9월~11월, 5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도 9월에 가장 많고, 5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기타 경찰업무 관련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단위: 건)

| 시기 | 기타경찰업무 | | | | | | | | | |
|-----|---------|---------|-------|-------|--------|----------------|----------|-------|-------|----------------|
| 월 | 계 | 상담문의 | 변사자 | 비상벨 | 경비업체요청 | 가출 등 (미귀가자) | 분실 습득 | FTX | 자살 | 실종 (실종아동 등) |
| 합계 | 189,139 | 141,957 | 2,463 | 8,877 | 57 | 1,806 | 20,790 | 1,526 | 4,905 | 6,758 |
| 1월 | 13,216 | 9,958 | 164 | 738 | 1 | 176 | 1,304 | 84 | 339 | 452 |
| 2월 | 11,414 | 8,612 | 168 | 564 | 4 | 133 | 1,125 | 70 | 332 | 406 |
| 3월 | 13,954 | 10,271 | 246 | 779 | 4 | 175 | 1,454 | 84 | 446 | 495 |
| 4월 | 15,820 | 11,375 | 214 | 925 | 9 | 193 | 1,835 | 207 | 455 | 607 |
| 5월 | 17,452 | 13,110 | 182 | 879 | 8 | 167 | 1,973 | 163 | 373 | 597 |
| 6월 | 16,893 | 12,677 | 189 | 919 | 4 | 151 | 1,826 | 139 | 413 | 575 |
| 7월 | 17,017 | 12,932 | 199 | 767 | 9 | 124 | 1,886 | 96 | 448 | 556 |
| 8월 | 17,265 | 13,183 | 207 | 755 | 1 | 144 | 1,849 | 143 | 410 | 573 |
| 9월 | 17,585 | 13,080 | 213 | 726 | 7 | 137 | 2,079 | 164 | 485 | 694 |
| 10월 | 17,702 | 13,322 | 209 | 783 | 1 | 149 | 2,005 | 116 | 426 | 691 |
| 11월 | 16,187 | 12,295 | 218 | 525 | 2 | 123 | 1,810 | 176 | 408 | 630 |
| 12월 | 14,634 | 11,142 | 254 | 517 | 7 | 134 | 1,644 | 84 | 370 | 482 |

자료: 충남도경찰청 내부자료

기타 경찰 업무와 관련된 신고 접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상담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타 업무관련 신고건수 189,139건 중 상담문의는 141,957건으로 75.1%였으며, 신고 접수는 8월~10월에 가장 많고, 5월과 6월이 뒤를 이었다. 분실물 습득 관련은 연중 20,790건이며,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상벨 관련 신고는 4월~6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 등 실종 관련 내용은 전체 6,758건 중 9월~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관련 신고도 연간 4,905건 접수되고 있으며, 이중 3월과 4월, 6월~11월 사이에는 월별 400건 이상의 자살 신고 접수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자살자 비율이 봄에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FTX) 관련으로는 4월에 207건으로 가장 많고, 12월~3월 중에는 신고가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표 4-13〉 타기관 관련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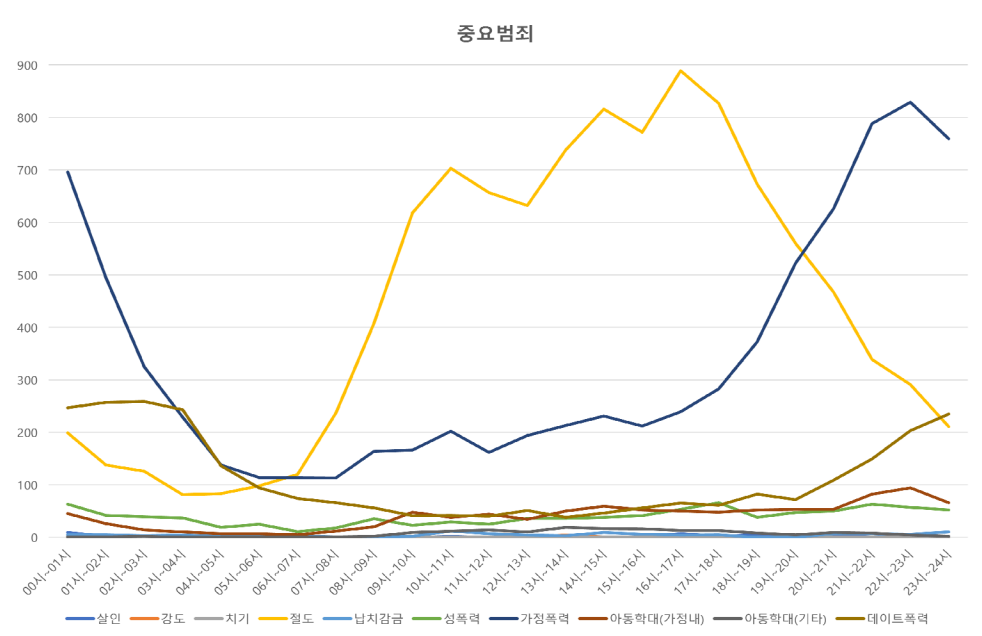
(단위: 건)

| 시기 | 타기관(기타) | | | | | | | | | | |
|-----|---------|----------------|-------|----------|--------|-----|-----------|-----------|-----------|-------|------|
| 월 | 계 | 내용 확인 불가 | 화재 | 구조 요청 | 소음 | 노점상 | 기타 타기관 | 서비스 요청 | 청탁 금지법 | 재해재난 | 위험동물 |
| 합계 | 301,806 | 258,263 | 7,740 | 3,408 | 12,758 | 27 | 12,357 | 5,073 | 0 | 1,501 | 679 |
| 1월 | 20,250 | 17,193 | 594 | 222 | 623 | 1 | 793 | 300 | 0 | 462 | 62 |
| 2월 | 16,465 | 13,485 | 756 | 154 | 672 | 1 | 731 | 315 | 0 | 314 | 37 |
| 3월 | 21,646 | 17,906 | 916 | 226 | 926 | 1 | 927 | 464 | 0 | 229 | 51 |
| 4월 | 22,526 | 18,739 | 817 | 264 | 1,111 | 3 | 990 | 474 | 0 | 96 | 32 |
| 5월 | 26,443 | 22,594 | 759 | 236 | 1,267 | 7 | 1,037 | 503 | 0 | 1 | 39 |
| 6월 | 30,923 | 27,008 | 600 | 298 | 1,512 | 2 | 970 | 480 | 0 | 1 | 52 |
| 7월 | 31,001 | 27,614 | 443 | 329 | 1,012 | 2 | 1,095 | 439 | 0 | 0 | 67 |
| 8월 | 31,411 | 27,436 | 459 | 386 | 1,317 | 1 | 1,158 | 472 | 0 | 122 | 60 |
| 9월 | 28,787 | 24,439 | 514 | 316 | 1,753 | 6 | 1,234 | 375 | 0 | 67 | 83 |
| 10월 | 27,690 | 23,769 | 659 | 342 | 1,169 | 1 | 1,209 | 443 | 0 | 24 | 74 |
| 11월 | 23,191 | 19,689 | 667 | 323 | 828 | 1 | 1,143 | 426 | 0 | 46 | 68 |
| 12월 | 21,473 | 18,391 | 556 | 312 | 568 | 1 | 1,070 | 382 | 0 | 139 | 54 |

자료: 충남도경찰청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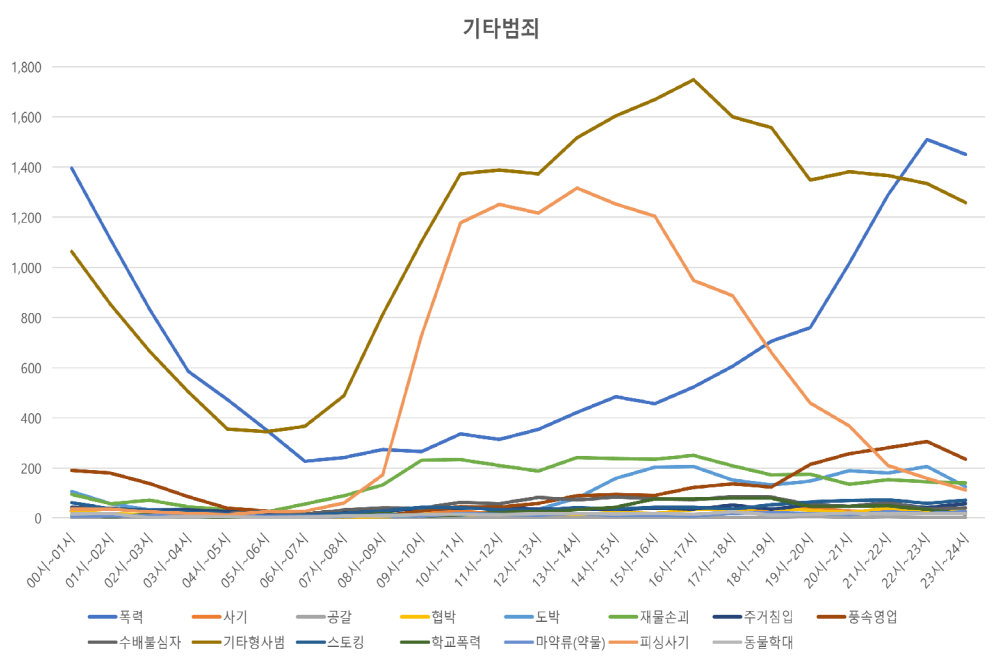
타 기관과 관련된 신고 건으로는 연간 301,806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내용 확인이 불가한 사건이 전체의 85.6%인 258,263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소음 관련으로 연간 12,758건이며, 월별로는 4월~10월, 특히 9월에 가장 많고 그 외 11월~3월 기간 중 발생하는 건수와는 차이를 보였다. 화재나 구조요청, 위험동물 관련은 소방서와 연계한 사항으로 경찰에 동시

접수 되거나 해당 지역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에 관계된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재해재난과 관련된 신고는 1월~3월 기간에 가장 많았다. 주로 경찰에 신고되는 재해재난 관련은 대설, 한파와 관련된 신고 건이나 블랙아이스와 같은 도로결빙 우려 지역에 대한 신고 건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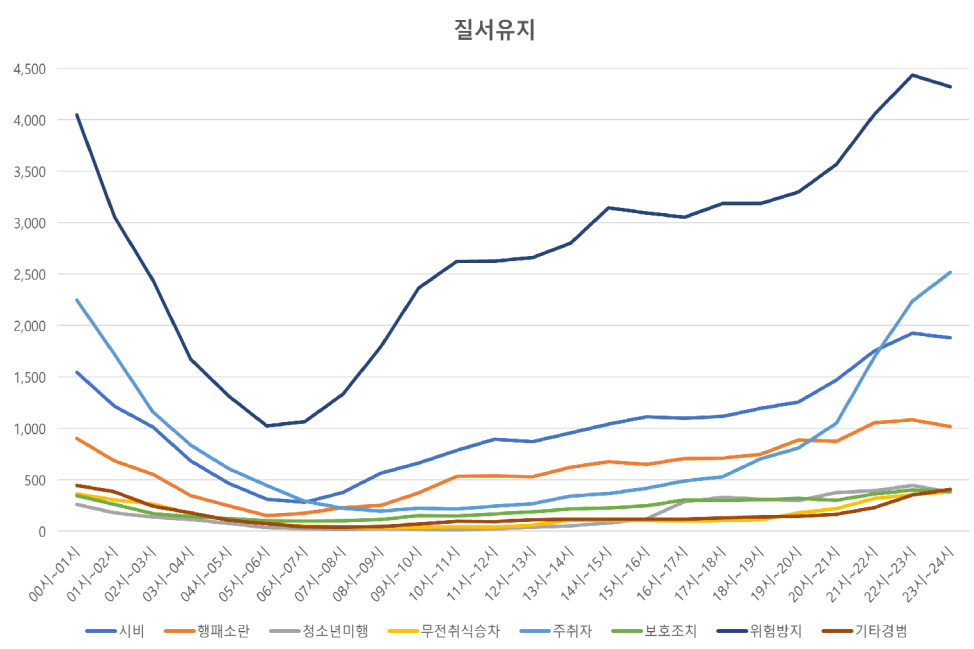
[그림 4-3] 시간대별 중요범죄 출동 건수

2022년 기간 중 중요범죄에 대한 시간대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는 절도사건의 경우, 일몰 이후 감소하여 주간시간대에 많이 나타나고, 특히 16시 전후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은 새벽시간에 가장 낮고 18시 이후부터 높은 발생 증가를 보인다. 특히 22시~23시에 8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사건 출동건수 비중이 절도와 가정폭력 다음으로 높으며 발생시간은 22시~04시까지 야간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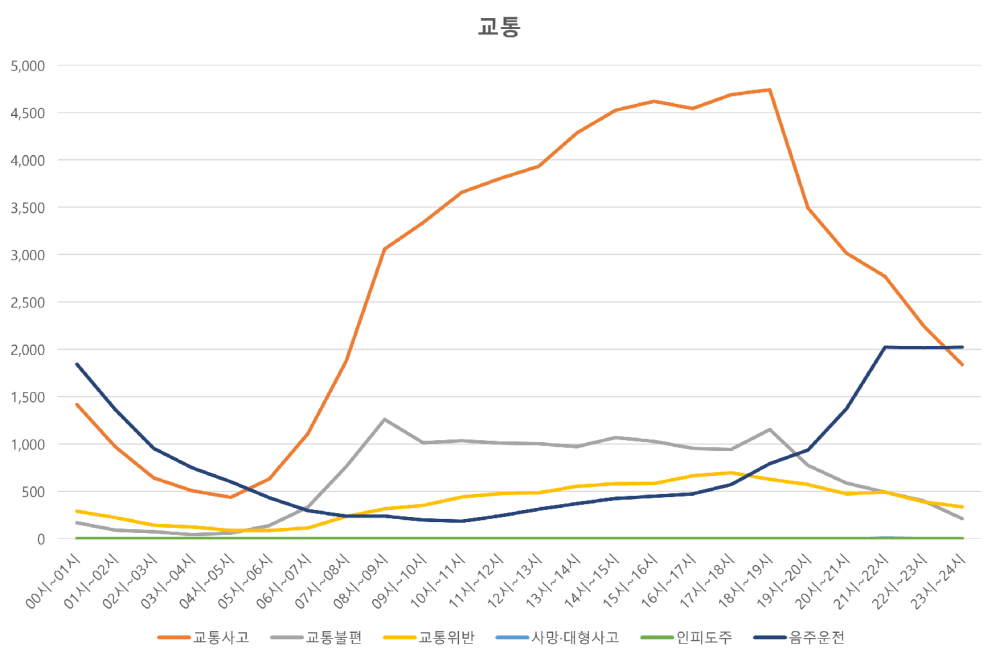
[그림 4-4] 시간대별 기타범죄 출동 건수

폭력, 사기, 풍속영업, 학교폭력, 피싱사기 등 기타범죄 발생으로 인한 출동 건수는 주간시간 대 발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발생을 나타낸 기타형사범은 04시~08시 사이를 제외하고 비교적 일관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5시~16시 사이에 1,6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싱사기 범죄의 경우,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11시~15시 사이에 관련 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주로 야간에 출동 건수가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22시~23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03시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음주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건 종으로 풍속영업, 도박과도 출동 시간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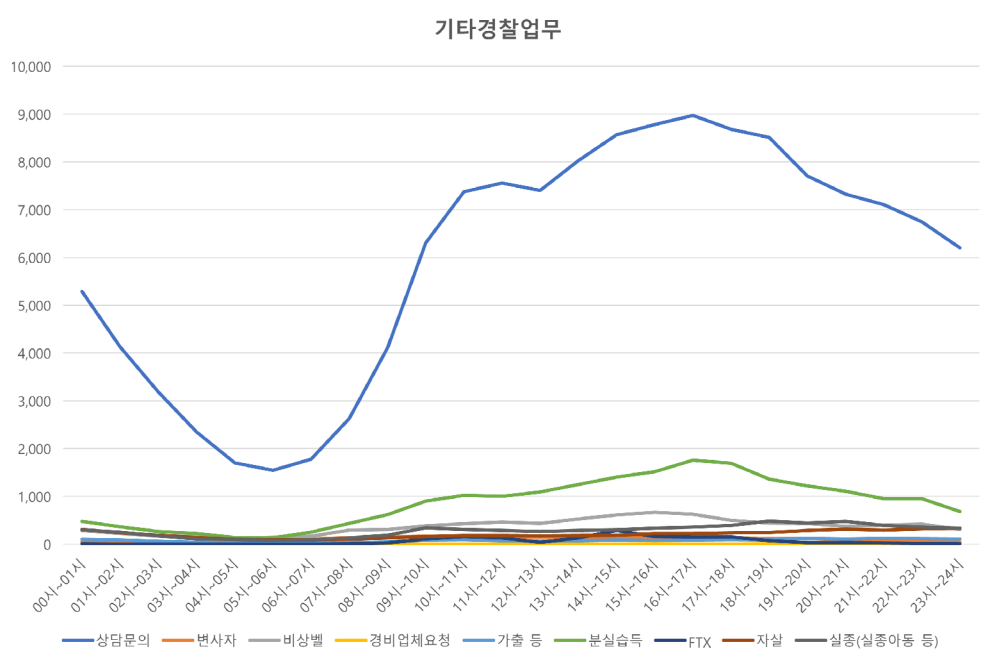
[그림 4-5] 시간대별 질서유지 관련 출동 건수

단순 시비, 행패, 주취자 및 경범죄 등 질서유지와 관련 사건은 이른 새벽에 발생이 가장 낮고 서서히 증가하다 22시~02시 사이 야간(심야) 시간에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순찰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유흥업소 주변이나 젊은 세대의 유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순찰 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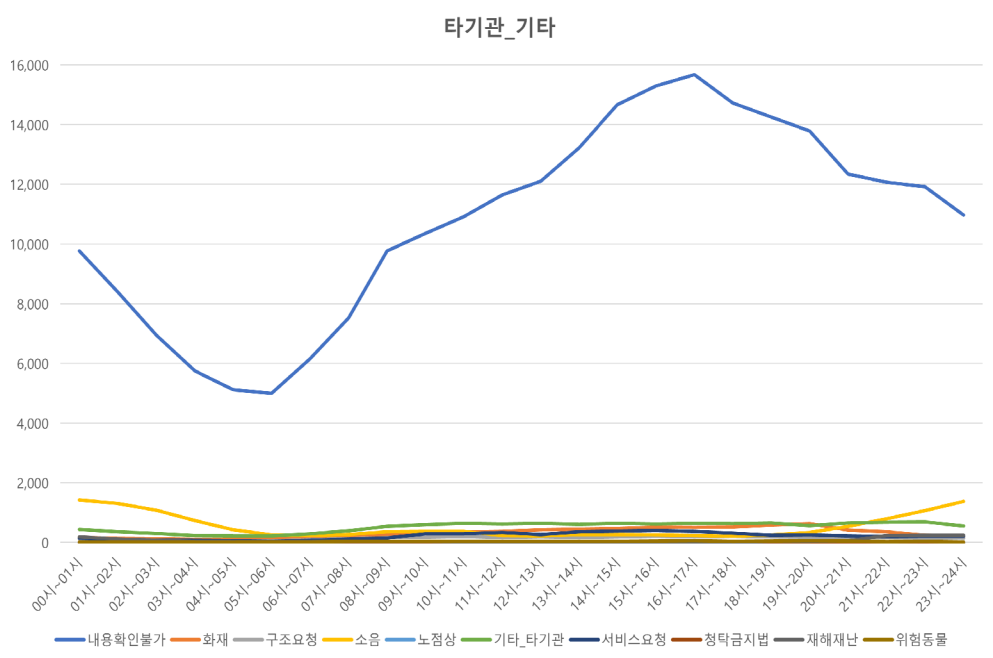
[그림 4-6] 시간대별 교통사고 관련 출동 건수

교통사고는 야간보다 주간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은 8시~9시, 18시 전후 등 출·퇴근 시간으로 교통량이 집중 증가하는 시간대와 오후 시간에 높게 나타난다. 교통불편에 대한 신고와 출동이 많은 시간도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많다. 다만, 음주운전은 21시~01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출동은 17시 전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시간대별 기타 경찰업무 관련 출동 건수

기타 경찰업무에 해당하는 출동 건수로는 상담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이른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 09시 이후 지속증가하여 16시 전후에 가장 높은 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분실 습득 관련 신고는 16시~17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가 일시 감소하나 22시~23시 사이에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림 4-8] 시간대별 타기관 관련 출동 건수

직접적인 경찰 업무가 아닌 타기관 관련으로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내용이 구체화 된 사항으로는 소음 발생이 가장 많았다. 특히 소음관련 신고 출동 건수는 22시~02시 사이 야간 심야시간에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범죄신고 빈발지

(단위: 건)

| 시군구 | 총 신고수 | 가정 폭력 신고수 | 데이트 폭력 신고수 | 성폭력 신고수 | 몰래 카메라 신고수 | 살인 신고수 | 강도 신고수 | 절도 신고수 | 폭력 신고수 |
|----------|----------|-----------------|------------------|------------|------------------|-----------|-----------|-----------|-----------|
| 계 | 41,511 | 8,444 | 3,015 | 1,095 | 5 | 20 | 21 | 12,372 | 16,544 |
| 천안시 북 | 12,992 | 2,266 | 1,514 | 421 | - | 9 | 3 | 3,299 | 5,480 |
| 천안동 남 | 5,251 | 1,031 | 291 | 164 | - | 1 | 3 | 1,911 | 1,850 |
| 서산시 | 3,325 | 825 | 175 | 63 | - | 1 | 1 | 997 | 1,263 |
| 아산시 | 5,903 | 1,292 | 384 | 140 | - | 6 | 7 | 1,604 | 2,470 |
| 논산시 | 1,765 | 287 | 78 | 54 | 3 | - | - | 611 | 735 |
| 계룡시 | 318 | 68 | 18 | 4 | 1 | - | - | 112 | 116 |
| 공주시 | 1,824 | 329 | 93 | 51 | - | 2 | 3 | 603 | 743 |
| 보령시 | 2,140 | 427 | 94 | 34 | 1 | - | 1 | 629 | 955 |
| 당진시 | 2,863 | 671 | 163 | 50 | - | - | - | 818 | 1,161 |
| 홍성군 | 1,219 | 334 | 62 | 24 | - | - | 2 | 384 | 413 |
| 예산군 | 909 | 224 | 24 | 23 | - | 1 | 1 | 323 | 313 |
| 부여군 | 691 | 162 | 29 | 22 | - | - | - | 280 | 198 |
| 서천군 | 588 | 142 | 11 | 13 | - | - | - | 229 | 193 |
| 금산군 | 516 | 79 | 19 | 5 | - | - | - | 223 | 190 |
| 청양군 | 251 | 60 | 4 | 3 | - | - | - | 101 | 83 |
| 태안군 | 956 | 247 | 56 | 24 | - | - | - | 248 | 381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범죄 유형별로 각 지역의 신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고수 41,511건 중 폭력 신고가 16,5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12,327건, 가정폭력 8,444건, 데이트폭력 3,015건, 성폭력 1,0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총 신고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으로 총 18,243건이 접수되었다. 다음으로는 아산 5,903건, 서산 3,325건, 당진 2,86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발생하

는 범죄 유형도 충남 전체 비율과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폭력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 연령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4-15〉 관서별 청소년비행 학교폭력 영향요인(2021년)

(단위: 건)

| 시군구 | 총 신고수 | 청소년 비행 신고수 | 학교 폭력 신고수 | 단란 주점수 | 무인텔 수 | 생활 숙박 시설수 | 성인 게임장 수 | 술집 수 | 여행 숙박 시설수 | 유흥 주점 수 | 클럽 수 |
|------|----------|------------------|-----------------|-----------|----------|-----------------|----------------|---------|-----------------|---------------|---------|
| 천안서북 | 814 | 725 | 89 | 50 | 7 | 1 | 19 | 772 | - | 262 | 14 |
| 천안동남 | 771 | 652 | 119 | 38 | 15 | - | 11 | 361 | 1 | 64 | 4 |
| 서산시 | 267 | 213 | 54 | 40 | 16 | 6 | 10 | 304 | 6 | 92 | 4 |
| 아산시 | 758 | 644 | 114 | 83 | 17 | 1 | 28 | 487 | - | 179 | 4 |
| 논산시 | 236 | 208 | 28 | 23 | 15 | 6 | 9 | 138 | 32 | 58 | 3 |
| 계룡시 | 121 | 120 | 1 | 3 | 5 | 2 | - | 35 | 1 | 18 | - |
| 공주시 | 128 | 112 | 16 | 28 | 23 | 6 | 2 | 134 | 1 | 56 | - |
| 보령시 | 168 | 147 | 21 | 28 | 6 | 3 | 8 | 164 | - | 63 | 7 |
| 당진시 | 447 | 386 | 61 | 40 | 5 | 3 | 18 | 289 | 3 | 120 | 5 |
| 홍성군 | 292 | 262 | 30 | 27 | 7 | - | 2 | 123 | - | 59 | 3 |
| 예산군 | 90 | 76 | 14 | 42 | 12 | - | 20 | 117 | - | 27 | 3 |
| 부여군 | 59 | 50 | 9 | 28 | 4 | 7 | 6 | 75 | 3 | 35 | - |
| 서천군 | 22 | 16 | 6 | 8 | 2 | 2 | 11 | 82 | 5 | 28 | - |
| 금산군 | 65 | 51 | 14 | 2 | 11 | 2 | - | 41 | - | 21 | - |
| 청양군 | 10 | 10 | 0 | 8 | 3 | - | 1 | 21 | - | 14 | - |
| 태안군 | 56 | 41 | 15 | 17 | 5 | 1 | - | 92 | 2 | 40 | 1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591건, 청소년 비행 신고수는 3,713건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이 청소년 비행 1,377건, 학교폭력 208건 등 관련 신고

건수가 총 1,5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 758건, 당진시 447건, 홍성군 292건, 서산시 267건, 논산시 23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범죄 발생의 주요 신고 지역이 인구가 밀집한 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 관련 신고에서는 홍성군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별 신고건의 특성을 추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내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입된 학령인구의 증가가 다른 군부 지역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서 신고 건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신고 건수의 증가는 학부모의 폭력 등 행위에 대한 민감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란주점, 무인텔, 성인 게임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비행 관련 영향시설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아산 지역에 1,12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시 799곳으로 전체 5,276곳 중 36.4%가 천안·아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시설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과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학교 등 관계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사업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유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밖청소년 등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표 4-16〉 2016~2018년 관서별 관리여건 및 사고발생 건수

(단위: 명, 건)

| 시군구 | 부서별 인원 | | | 사건발생수 | | | 112신고 건수 | | | 1인당 범죄발생건수 | | | 1인당 신고건수 | | |
|-----------|--------|------|------|--------|--------|--------|----------|--------|--------|---------------|------|------|----------|------|------|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 천안 서북서 | 424 | 442 | 460 | 14,938 | 13,949 | 13,487 | 81,762 | 82,181 | 81,716 | 35 | 32 | 29 | 193 | 186 | 178 |
| 천안 동남서 | 388 | 406 | 417 | 9,054 | 8,433 | 9,315 | 37,052 | 36,155 | 38,873 | 23 | 21 | 22 | 95 | 89 | 93 |
| 서산시 | 393 | 262 | 275 | 7,323 | 6,904 | 5,215 | 40,805 | 37,733 | 36,750 | 19 | 26 | 19 | 104 | 144 | 134 |
| 아산시 | 375 | 405 | 422 | 8,600 | 8,627 | 8,968 | 66,158 | 69,729 | 63,428 | 23 | 21 | 21 | 176 | 172 | 150 |

| 시군구 | 부서별 인원 | | | 사건발생수 | | | 112신고 건수 | | | 1인당 범죄발생건수 | | | 1인당 신고건수 | | |
|-------------------|--------|------|------|-------|-------|-------|----------|--------|--------|---------------|------|------|----------|------|------|
|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2016 | 2017 | 2018 |
| 논산시 | 253 | 258 | 265 | 4,208 | 4,222 | 3,987 | 30,878 | 28,088 | 27,808 | 17 | 16 | 15 | 122 | 109 | 105 |
| 공주시 | 238 | 240 | 248 | 3,250 | 3,139 | 3,215 | 32,810 | 29,666 | 33,320 | 14 | 13 | 13 | 138 | 124 | 134 |
| 보령시 | 250 | 248 | 254 | 3,704 | 3,322 | 2,994 | 24,161 | 24,789 | 24,753 | 15 | 13 | 12 | 97 | 100 | 97 |
| 당진시 | 249 | 259 | 270 | 5,516 | 4,843 | 5,129 | 37,288 | 31,771 | 34,886 | 22 | 19 | 19 | 150 | 123 | 129 |
| 홍성시 | 202 | 210 | 213 | 2,980 | 2,545 | 2,701 | 20,649 | 18,159 | 17,267 | 15 | 12 | 13 | 102 | 86 | 81 |
| 예산시 | 177 | 179 | 184 | 2,500 | 1,862 | 2,216 | 16,874 | 14,992 | 14,347 | 14 | 10 | 12 | 95 | 84 | 78 |
| 부여시 | 178 | 188 | 195 | 1,629 | 1,441 | 1,354 | 12,729 | 10,336 | 10,244 | 9 | 8 | 7 | 72 | 55 | 53 |
| 서천시 | 165 | 163 | 170 | 1,712 | 1,298 | 1,326 | 14,395 | 14,235 | 11,379 | 10 | 8 | 8 | 87 | 87 | 67 |
| 금산시 | 139 | 140 | 147 | 1,298 | 1,134 | 1,054 | 10,641 | 8,610 | 8,597 | 9 | 8 | 7 | 77 | 62 | 58 |
| 청양시 | 128 | 131 | 132 | 679 | 594 | 654 | 5,169 | 4,634 | 4,722 | 5 | 5 | 5 | 40 | 35 | 36 |
| 태안군 ⁷⁾ | | 162 | 170 | | 70 | 1,764 | | 1,152 | 14,998 | | 0 | 10 | | 7 | 88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관서별 인원, 사건발생 건수, 112 신고 건수 등에 대한 연단위 추이를 살펴 보면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코로나 19 상황으로 사건 발생에 대한 이상치와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6년~2018년 추세를 반영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각 관서별 사고관리 담당 부서의 인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산의 경우, 인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 기간 사건발생과 112 신고 건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1인당 범죄발생 건수와 신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원 부족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1인당 신고 건수는 청양, 금산, 서천, 부여, 예산, 홍성, 당진, 논산, 아산, 천안서북시 등 다수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천안 동남, 서산, 공주, 보령시 등 4개 지역은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7)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자료중 태안군의 2016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

〈표 4-17〉 112신고 분야 치안 고객만족도 결과 종합만족도, 신고 접수 만족도(2022년)
(단위: 점)

| 지역 | 종합 만족도 | 신고 접수 종합 | 신고접수 전반적 만족도 | 현장 처리 종합 | 현장처리 전반적 만족도 | 업무처리 절차 및 과정 | 담당자 응대 태도 | 서비스 품질 |
|------|-----------|----------------|--------------------|----------------|--------------------|--------------------|-----------------|-----------|
| 충남 | 89.2 | 90.5 | 89 | 88.7 | 87.6 | 87.6 | 90.4 | 89.4 |
| 서울 | 88.9 | 90.4 | 88.8 | 88.3 | 87.1 | 87.5 | 90.2 | 88.9 |
| 부산 | 89.9 | 91.1 | 89.8 | 89.4 | 88.3 | 88.5 | 91.1 | 90 |
| 대구 | 88.2 | 89.5 | 88 | 87.6 | 86.5 | 86.8 | 89.2 | 88.2 |
| 인천 | 88.8 | 90.2 | 88.6 | 88.1 | 87 | 87.1 | 90 | 88.8 |
| 광주 | 88.8 | 90.3 | 88.8 | 88.1 | 87.1 | 87.5 | 89.6 | 88.6 |
| 대전 | 88 | 89.1 | 87.4 | 87.5 | 86 | 86.7 | 89.6 | 88.3 |
| 울산 | 88.7 | 90 | 88.5 | 88.1 | 86.9 | 87 | 90 | 89 |
| 세종 | 88 | 89.5 | 87.6 | 87.4 | 85.9 | 85.9 | 89.7 | 88.3 |
| 경기남부 | 88.4 | 90.2 | 88.5 | 87.7 | 86.5 | 86.7 | 89.5 | 88.3 |
| 경기북부 | 88.7 | 90.1 | 88.4 | 88.2 | 86.9 | 87.2 | 90.2 | 88.8 |
| 강원 | 87 | 88.8 | 87 | 86.2 | 84.8 | 84.7 | 88.4 | 87.2 |
| 충북 | 88.2 | 89.9 | 88.3 | 87.4 | 86.3 | 86.4 | 89.2 | 88.2 |
| 전북 | 89.2 | 90.4 | 88.9 | 88.7 | 87.6 | 87.9 | 90.5 | 89.3 |
| 전남 | 88.9 | 90.1 | 88.8 | 88.4 | 87.4 | 87.6 | 89.8 | 88.9 |
| 경북 | 86.9 | 88.4 | 86.8 | 86.2 | 85 | 85.1 | 88 | 86.9 |
| 경남 | 89.2 | 90.6 | 89 | 88.6 | 87.4 | 87.4 | 90.4 | 89.3 |
| 제주 | 87.2 | 88.3 | 86.7 | 86.7 | 85.3 | 85.8 | 88.7 | 87.5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112신고에 대한 치안 고객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은 종합만족도 89.2점으로 경남, 전북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전반적인 만족도가 8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87.6점,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 및 담당자의 태도와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신고 접수 전반과 담당자의 대응 태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처리 절차와 현장 처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비교적 낮았으나, 다른 시도와의 비교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관서별 112신고 분야 치안고객만족도(2022년)

(단위: 점)

| 응답자 특성 | 종합 만족도 | 현장 처리 종합 | 업무 처리 절차 및 과정 | 담당자 응대 태도 | 서비스 품질 | 현장 도착소 요시간 적절성 | 현장 사건 처리 신속성 | 현장사 건처리 안내 및 설명 | 담당 경찰관 친절성 | 담당경 찰관청 렴성 | 사건 처리 전문성 | 사건 처리 공정성 |
|-----------|-----------|----------------|------------------------|-----------------|-----------|-------------------------|-----------------------|--------------------------|------------------|------------------|-----------------|-----------------|
| 천안서북 | 87 | 87 | 85.7 | 89 | 87.9 | 87 | 87 | 83.2 | 87.5 | 90.5 | 87.3 | 88.6 |
| 천안동남 | 89.2 | 89.2 | 88.5 | 90.8 | 89.7 | 89.1 | 89.3 | 87.2 | 89.6 | 92.1 | 89.4 | 90 |
| 서산 | 89.5 | 89.5 | 88.4 | 91.7 | 90.6 | 89 | 89 | 87.1 | 90.4 | 93 | 90.3 | 90.9 |
| 아산 | 86.6 | 86.6 | 85.2 | 88.4 | 87.4 | 86.3 | 86.3 | 83.2 | 87 | 89.7 | 87 | 87.8 |
| 논산 | 89.2 | 89.2 | 88.3 | 90.7 | 89.9 | 88.3 | 88.8 | 87.7 | 89.7 | 91.7 | 89.2 | 90.5 |
| 공주 | 95.1 | 95.1 | 94.5 | 96 | 95.4 | 94.4 | 95.3 | 93.9 | 95.3 | 96.7 | 95.3 | 95.5 |
| 보령 | 90 | 90 | 89.8 | 91.3 | 90.4 | 90.6 | 90.3 | 88.5 | 90.4 | 92.1 | 89.7 | 91.2 |
| 당진 | 87 | 87 | 85.8 | 88.8 | 87.3 | 87.1 | 86.3 | 84 | 87.1 | 90.5 | 86.4 | 88.2 |
| 홍성 | 88.6 | 88.6 | 87.6 | 89.7 | 89.7 | 89.2 | 89 | 84.7 | 88.7 | 90.7 | 89 | 90.3 |
| 예산 | 87 | 87 | 86.1 | 88.8 | 87.6 | 87.2 | 86.5 | 84.4 | 86.8 | 90.8 | 87.1 | 88 |
| 부여 | 91.7 | 91.7 | 90.2 | 93 | 92.6 | 91.2 | 90.6 | 89 | 92.1 | 93.8 | 92.1 | 93.1 |
| 서천 | 92.5 | 92.5 | 92.7 | 93.4 | 92.8 | 95.1 | 93.6 | 89.6 | 92.3 | 94.4 | 91.6 | 93.9 |
| 금산 | 90.9 | 90.9 | 89.4 | 92.8 | 91.5 | 87.9 | 90 | 90.4 | 92 | 93.5 | 90.6 | 92.3 |
| 청양 | 90.6 | 90.6 | 90.5 | 92 | 91.2 | 91.6 | 90 | 89.9 | 91.2 | 92.9 | 90.7 | 91.7 |
| 태안 | 91.5 | 91.5 | 89.9 | 93.5 | 92.3 | 89.5 | 90 | 90.1 | 92.8 | 94.3 | 91.6 | 93.1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도내에서는 공주서가 95.1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서천, 부여, 태안, 금산, 청양, 보령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아산, 천안서북, 당진, 예산에서는 만족도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서의 경우, 현장사건처리에 대한 안내 및 설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8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불만족도 높았다. 이는 천안 서북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12 신고에 있어 주민은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12 신고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나 전반적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강욱·최천근, 2013)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요인 중 전문적 처리와 공정한 처리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이며, 현장의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만족도는 112 신고 이후 경찰이 현장 처리를 얼마나 잘해주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며, 서비스 품질과 업무처리 절차 및 과정, 현장사건처리의 신속성도 중요한 변수로 측정될 수 있다. 사건 발생시 경찰의 전문성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향후 자치경찰 서비스와 관련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며, 민원 발생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만족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신고자의 불만족 요소를 추적·관리하고, 신고 민원 처리의 피드백을 통해 책임치안을 구현하는 시책의 도입방안이 요구된다.

〈표 4-19〉 시군별 치안이슈

(단위: 건)

| 시군 | 인명피해 사건 | 비인명피해사건 | 교통사고 | 비교통사고 | 비리사건 |
|----|---------|---------|------|-------|------|
| 천안 | 109 | 125 | 54 | 182 | 19 |
| 서산 | 37 | 31 | 31 | 168 | 9 |
| 아산 | 26 | 36 | 21 | 64 | 9 |
| 논산 | 8 | 18 | 18 | 31 | 1 |
| 계룡 | 7 | 10 | 1 | 6 | 1 |
| 공주 | 9 | 29 | 32 | 56 | 2 |
| 보령 | 11 | 48 | 135 | 110 | 0 |
| 당진 | 31 | 53 | 44 | 98 | 2 |
| 홍성 | 9 | 20 | 24 | 32 | 2 |
| 예산 | 8 | 11 | 11 | 29 | 1 |
| 부여 | 22 | 20 | 16 | 28 | 0 |
| 서천 | 12 | 16 | 24 | 23 | 2 |
| 금산 | 2 | 9 | 8 | 28 | 1 |
| 청양 | 0 | 14 | 4 | 21 | 0 |
| 태안 | 12 | 65 | 114 | 147 | 5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도내 각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안 이슈는 천안시 지역으로의 사건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관련 수치가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비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이슈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전체 사건 사고를 종합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교통 관련 이슈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통사고는 보령, 태안이 연간 100건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안 관광지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투자의 확대와 주민 외 통행 인파의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사건의 경우 천안, 서산, 당진, 아산 순으로 높으며, 비인명피해 사건은 천안, 태안, 당진, 보령 순으로 높게 나타나 천안을 제외한 시군에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중점관리 유형을 지정하고, 이를 발생 수준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표 4-20〉 시군경찰서별 체감안전도(2020년)

(단위: 점)

| 경찰서 | 전반적안전도점수 | 교통사고안전도점수 | 법질서준수도점수 | 절도폭력전도점수 | 강도살인전도점수 | 여성범죄전도점수 | 순찰활동점수 | 교통안전활동점수 | 기초법서단속점수 | 공동체안전방활동점수 | 타국가대비한국치안안전도점수 | 야간통행안전도점수 |
|------|----------|-----------|----------|----------|----------|----------|--------|----------|----------|------------|----------------|-----------|
| 천안북서 | 75.6 | 70.7 | 61.4 | 78.8 | 82 | 79.2 | 69.7 | 71 | 70 | 67.9 | 39.7 | 71.8 |
| 천안동남 | 75.9 | 72.2 | 63.5 | 80.2 | 82.7 | 79.7 | 69.3 | 69.7 | 68.6 | 65.9 | 38.3 | 71.9 |
| 서산서 | 74.6 | 67.4 | 59.8 | 79.5 | 82 | 78.1 | 65.9 | 64.9 | 64.7 | 63.4 | 41.9 | 73.6 |
| 아산서 | 75.5 | 71 | 60.2 | 79.8 | 82.7 | 78.8 | 65.8 | 65.8 | 66.3 | 61.7 | 41.9 | 75.2 |
| 논산서 | 76.4 | 66.9 | 66.4 | 80.3 | 84.2 | 80.5 | 67.3 | 69.4 | 69.2 | 68.7 | 39.9 | 73.2 |
| 공주서 | 80 | 73.4 | 67.2 | 82.6 | 86 | 81.3 | 70.5 | 71.1 | 72.9 | 66.7 | 40.8 | 76.1 |
| 보령서 | 79.7 | 75.2 | 68.2 | 82.8 | 84.6 | 82.9 | 73.6 | 74.9 | 73.6 | 70.4 | 40.7 | 75.8 |
| 당진서 | 79 | 70.8 | 68.5 | 81.2 | 83.3 | 79.4 | 70.8 | 71.7 | 71.2 | 69.6 | 39.2 | 75.4 |
| 홍성서 | 77.8 | 71 | 68.1 | 82.6 | 85.4 | 81.7 | 71.9 | 73.4 | 73.6 | 71.7 | 41.3 | 76.9 |
| 예산서 | 75.1 | 65.1 | 62.6 | 77.2 | 81.3 | 79.1 | 65.2 | 66.7 | 67 | 65.1 | 39.7 | 68.8 |
| 부여서 | 78.7 | 69.2 | 65 | 82.1 | 86.4 | 81.6 | 71.1 | 72.1 | 71 | 68.8 | 40.9 | 76.1 |

| 경찰서 | 전반안전도점수 | 교통사고안전점수 | 법질서준도수점수 | 절도폭력안전점수 | 강도인도안전점수 | 여성범죄안전점수 | 순찰활동점수 | 교통안전활동점수 | 기초법질서숙점수 | 공동체치안예방활동점수 | 타국가대비한국치안안전도점수 | 야간통행안전점수 |
|-----|---------|----------|----------|----------|----------|----------|--------|----------|----------|-------------|----------------|----------|
| 서천서 | 80.2 | 73 | 72.3 | 83.9 | 86.5 | 83.3 | 75.1 | 75.7 | 76 | 74.5 | 39.6 | 77.4 |
| 금산서 | 84.3 | 78.6 | 73.8 | 88.2 | 90.6 | 87 | 78.1 | 77.6 | 78.4 | 76.8 | 41.3 | 81.6 |
| 청양서 | 84.5 | 77.4 | 76.1 | 88.6 | 89.1 | 89.4 | 79.1 | 80 | 78.7 | 75.5 | 40.3 | 80 |
| 태안서 | 81.2 | 73.7 | 71.3 | 84.4 | 86.1 | 84.9 | 74.5 | 75 | 74.2 | 72.2 | 39.9 | 78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치안이슈와 연결하여 관서별 체감 안전도 수준을 대조하면 전반적 안전도가 높게 조사되는 지역은 청양, 금산, 태안, 서천, 공주 순이며,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는 지역이 서산, 천안, 예산, 아산 순으로 나타난다. 체감 안전도가 실제 지역의 치안 이슈를 반영하거나 치안서비스의 만족도 수준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안전 민감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슈의 크기와 관계 없이 만족도 수준이 낮게 도출되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고령자 분포가 많은 군부 지역에서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만족도 수준도 높게 표출된다. 다만 주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시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실제 사건발생과 이슈가 높은 천안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여 정책소통의 기회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문별로는 야간보행 안전도가 낮은 예산, 천안, 서산, 논산 지역 중심으로 조명시설 설치, 조도개선 사업 집중지역을 선정하여 순차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공동체 치안 예방활동에서는 군부보다 시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활동에 대한 호응이 저조한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라 풀이된다. 기존 전통적 방식의 참여방식 외 공동체 소속감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기여 측면을 강조하여 청장년 주민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서적 접근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4-21〉 치안 트렌드

(단위: 건)

| 범죄유형 | 범죄예측 최소값 | 범죄예측 평균값 | 범죄예측 최대값 | 범죄발생건수 (2019) | 범죄발생건수 (2020) | 범죄발생건수 (2021) | 3년간 평균범죄 발생수 |
|--------|-------------|-------------|-------------|------------------|------------------|------------------|--------------------|
| 전체범죄 | 1,273,581 | 1,494,762 | 1,715,720 | 1,898,495 | 1,757,504 | 1,425,078 | 1,693,692 |
| 살인 | 141 | 893 | 1,652 | 957 | 786 | 719 | 821 |
| 강도 | 1 | 698 | 1,596 | 824 | 679 | 487 | 663 |
| 절도 | 160,161 | 194,868 | 229,273 | 229,303 | 208,877 | 176,536 | 204,905 |
| 강간강제추행 | 10,353 | 16,197 | 22,028 | 26,290 | 21,436 | 17,881 | 21,869 |
| 폭력 | 250,389 | 287,272 | 323,499 | 370,636 | 339,252 | 274,372 | 328,086 |
| 방화 | 95 | 1,061 | 2,091 | 1,504 | 1,312 | 971 | 1,262 |
| 마약 | 1,452 | 5,233 | 9,654 | 7,590 | 7,271 | 5,731 | 6,864 |
| 보이스피싱 | 36,662 | 55,991 | 75,815 | 47,724 | 48,688 | 43,755 | 46,729 |
| 선거범죄 | 105 | 1,221 | 6,237 | 804 | 1,141 | 424 | 789 |
| 아동학대 | 15,645 | 20,605 | 25,582 | 11,251 | 11,565 | 14,746 | 12,520 |

자료: 스마트치안빅데이터플랫폼

우리 지역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전국적인 범죄발생 추세를 3년간 분석하여 향후의 범죄예측을 실시한 치안 트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코로나 발생 전후 3년의 기간으로서 정확한 예측치를 구현하는데는 일부 유형에서는 편차를 보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증가 경향을 나타내는 유형이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마약 관련으로 분석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폭력 등과 함께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와의 분리 및 가해자 행동특성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과거 고령층에 피해자가 집중되던 경향과 달리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그 수법이 더욱 고도화 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 등 법·제도적 보완 요구가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어 마약 등 신종 범죄의 접근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10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청소년 비행, 학교 폭력, 성폭력 등 추가 위험의 발생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5) 지역안전 거버넌스와 치안협력 네트워크

(1) 지역안전 거버넌스와 지역치안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는 네트워크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융합적이고 다원적인 현상으로 정의 된다(Bevier, 2011). 이는 정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수행해온 공동체의 공익활동이나 공공재 생산 자체를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네트워크 또는 공공과 민간 간 협력적 통치체제, 즉 협치로 개념화 할 수 있다(정병순, 2015).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경우,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민참여 안전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OECD는 각국의 민관협치,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현실을 종합하여 정책과정 단계를 활용해 주민참여의 역할을 정보·협의·능동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와 협의는 일방향적 소통으로서 정부가 주가 되어 주민에게 제공하는 측면이라면 능동적 참여는 정부와 주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쌍방향적 소통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주민참여의 유형 중 현재의 거버넌스와 함께 필요한 유형이 능동적 참여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주도, 공공중심, 민관파트너십, 주민주도의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구성·운영된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 공공주도는 충남도 안전에 관한 단순한 정보제공,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형식적 차원의 주민참여에 해당한다. 공공중심은 치안협의회를 통한 정책참여, 일부 자원봉사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과제 수행 등이 해당된다. 민관협력형은 기획 과정부터 정책이나 사업의 실행에 있어 공공과 민간에 실질적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것으로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이 해당된다.

주민주도형은 정책이나 사업의 기획 및 실행은 물론 주민이 주도성을 가지고 작동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해당된다.

충청남도는 치안안전 관련 참여기관과 협력체계를 이루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연계·운영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안전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기관과 자치경찰 위원회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정보공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요구되는 단계로서, 현재 충남의 안전 거버넌스 발전 단계는 공공중심에서 민관파트너십의 강화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22〉 거버넌스 유형 및 발전단계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공공주도형 | -가장 낮은 단계의 유형으로 민간의 참여는 단순 정보제공이나 형식적 차원의 시민 참여에 한정된, 공공주도 또는 공공일방의 운영 원리가 지배적 | -치안교육 -교통안전교육 -홍보 |
| 공공중심형 | -민간이 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의 기획단계에 참여하는 한편,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이 주로 참여하는 단계에 해당 | -지역치안협의회 -외사치안협력위원회 |
| 민관협력형 | -기획과정부터 정책의 실행 및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공공과 민간에 실질적 파트너십이 존재 |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
| 주민주도형 | -정책의 기획과 실행, 자원의 동원과 배분에 주민 주도성이 작동하며, 공공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한정 | -주민참여예산제 |

거버넌스의 속성은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 또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민·관 파트너십, 공공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 신공공관리 기법의 도입 및 기업적 거버넌스, 최소국가, 사회적 인공지능체계 등을 들 수 있다(행정학사전, 2009). 우리나라 안전관리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차 계획 기간(2010년~2014년)부터 ‘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국민 안전의식 제고’, ‘기업의 안전관리참여와 활동영역 확대’ 전략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향식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관리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정지범, 2013).

①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성공적인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결정과 행위주체 간 협력관계구축 등의 구성요소가 요구된다.

가. 지역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성공적 지역안전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원칙은 지역의 안전을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하며, 관련 의사결정 역시 주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정부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안전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나. 다양한 행위주체 간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과정은 다양한 행위주체의 참여가 수반된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경찰, 소방, 보건 등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물론 각종 시민사회단체

와 기업까지 포괄하는 긴밀한 협력관계는 종합적 지역안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정례적인 공론의 장이 요구되며, 실질적 행위주체의 참여를 위한 유인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다. 지역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안전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은 환경의 차이, 주민의 사회·경제적 차이, 인구구조의 차이 등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위험요인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체가 되는 정부부문에서는 지역이 가진 제반 위험요인과 범죄 취약요소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환경의 측면, 대상의 측면, 가해요인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 발생 이외에도 사고 유형과 위험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라. 제도화 및 평가와 개선

지역안전거버넌스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례와 지침 등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례와 같은 법적 제도화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침 등은 제도화의 기능과 함께 이해당사자의 교육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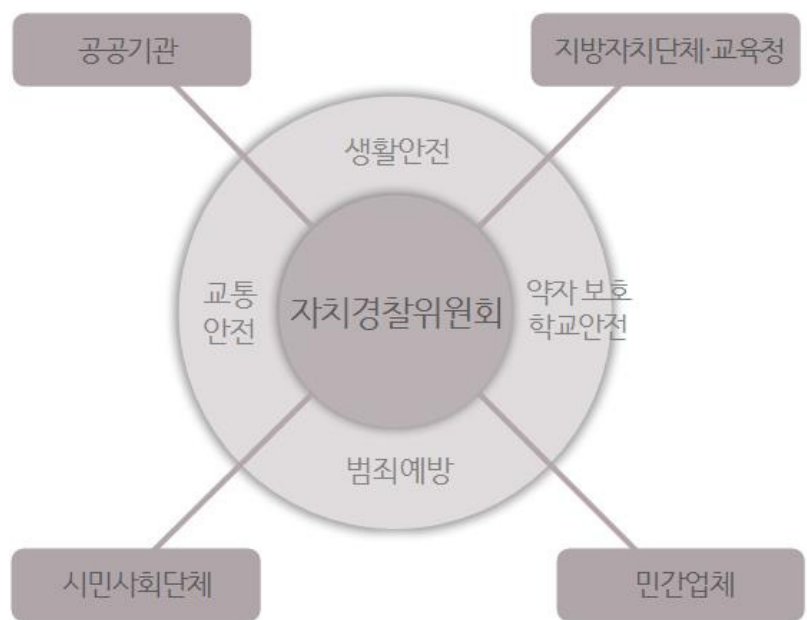
안전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서 평가절차의 마련은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된다.

② 거버넌스 참여주체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본 취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지방자치의 완성과는 같은 프로파간다로서의 의미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여 국가경찰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경찰 서비스의 실질적 제공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제도를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참가자를 확장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가 되며,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성된다 고 볼 때,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업체 간에 소통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권오성·우아린, 2023). 거버넌스의 수준도 이러한 상호협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영역의 문제를 지역안전의 틀 속에서 해결하기 위한 공동사무의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 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일방적인 공급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역치안 거버넌스는 민생과 직결된 로컬 거버넌스의 일부분이다(김광주, 2013). 지역의 거버넌스가 영역에 따라 복지, 치안,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분야별 중범위의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구성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지만 영역별로 주체와 특성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지역치안 거버넌스는 지역치안의 핵심주체인 자치경찰과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민간경비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주체는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각자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각 핵심 주체들이 자신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림 4-9] 지역 치안거버넌스 구축 모형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맞춤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기존의 중앙집권 방식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서비스의 주민자치성, 민주성, 효과성이 달성될 수 있다.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행위자를 자치경찰 즉,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 경찰청과 지역경찰서 소속 경찰관 그룹과 유관기관 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기업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행위자인 일선 경찰, 지역주민과 민간 부문을 포괄한다.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국가중심에서 탈피하여 시장과 민간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 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거버넌스 참여주체 간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 안전의 주요 참여자인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경비업체,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서로 다른데(김광주, 2013),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인 생활안전,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참여자를 파악할 수 있다.

생활안전 영역의 주요 참여자는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으로 구분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는 자율방범대가 대표적이다. 자율방범대는 점죄 취약지역의 순찰 등 눈에 보이는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형성에 기여한다.

교통안전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는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회 등이 있다. 녹색어머니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활동, 일반 보행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모범운전자회는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안전활동 강화, 배달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활동을 수행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공사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여성·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구분될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치안정책 발굴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시민사회단체도 청소년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상호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이루어진다.

③ 참여주체간 관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참여주체 간 관계가 위와

같이 6개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주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형성될 수록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각 주체간에 부여된 역할과 임무는 상이하며 매개 주체별로 관계의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차등할 근거자료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며, 각각의 지위를 동등하게 파악할 뿐이다.

가. 지역주민과 협력단체의 관계

지역주민은 협력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치안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주도의 정부혁신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에 의하면 지역치안 협력단체는 주체별 참여 동기별, 주민참여유형별, 구성근거별, 활동목적별, 기여방법별, 전문기식별, 활동적극성별, 경찰소관부서별 유형으로 구분된다(김광주 외, 2012). 지역단위 거버넌스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핵심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치안에서도 협력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판단하여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협력단체의 관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협력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지역 치안거버넌스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나. 지역경찰서와 협력단체의 관계

지역경찰서와 협력단체 간 관계는 정부기관과 민간자원 단체의 위치로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 성격을 가진다. 지역경찰서와 협력단체는 협업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며, 이 같은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Thompson & Perry, 2006). 결국

지역경찰서와 협력단체간 소통수준이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핵심요소가 되며, 소통이 원활할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 지역주민과 민간경비업체의 관계

공공경비는 사용자 측면에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공공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 공익을 위한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인을 위하여 경비업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경비와는 구별된다(김광주, 2013).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뢰인인 지역주민과 자연스러운 지역치안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된다. 즉 지역치안 영역에서 민간경비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민간경비와 주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가 구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민간경비 또한 지역경찰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므로 민간경비의 활용도가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라. 지역경찰서와 민간경비업체의 관계

지역경찰서와 민간경비업체간에는 지역치안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과 수단의 차이가 존재한다. 민간경비업은 준시장을 정부영역에 도입한 것으로서 지역경찰서와 긴밀한 조직간 관계 형성을 요구하며, 지역치안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야 함은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와 지역경찰서의 협력이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주민은 자신의 요구를 지역 경찰서에 직접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해지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철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요구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집행부의 정책사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공동체의 정치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며, 지역사회 및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범죄와 무질서를 통제하고 지역치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치안 거버넌스와 연계된다(김광주, 2013).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을 판단해볼 수 있다.

바. 지역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역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지원하며 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조직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Boyne & Ashworth, 2010). 과거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별도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이후부터는 상호 협력적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치안 거버넌스에서도 지역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위원회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지역치안 거버넌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2)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협의회¹⁸⁾는 지역의 치안 문제에 대해 주민을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정부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형적 형태를 갖추어 활동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후에도 기대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계서주의, 형식주의 행정문화가 가지는 운영상의 한계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① 지방자치단체 중심 협의체

지역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기구는 대표적으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민방위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협력치안을 위한 기관협의체 운영은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로 관주도로 급조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의존성, 상호호혜성, 민주성, 개방성 등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이 준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백병성, 2014).

18)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한다(양현모, 2002).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이나 통합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 관심사를 토의라고 정보를 교환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작용하는데 비해 지역치안협의회는 지역내 치안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를 행정협의회와 비교한다면 광의의 의미로 행정협의회적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나 단일한 문제(즉, 지역치안에 관한 문제로서 범죄, 방범, 지역안전, 교통, 생활안전 영역에 한정됨)에 대해 관할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협의회와는 차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표 4-23〉 지역안전관련 협의체

| 명칭 | 근거법령 | 위원 구성 | 기능 |
|----------------|---------------|---------------------------------------|-----------------------------------|
|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지자체장, 관내 기관장, 전문가 등 30인 이내 | 지역 재난안전관리 정책 심의 |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 민방위기본법 | 지자체장, 관내기관장, 전문가 등 7~12인 이내 | 전시, 테러, 국가기반시설, 재난, 화재, 교통사고 대응지원 |
|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 교통안전법 | 지자체장,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전문가 20인 이내 | 교통사고 |

이 경우, 참여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합의도출 능력이 확보된 것은 아니며, 사업추진의 재원이 명확하지 않아 형해화된 협의체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② 경찰관서 중심 협의체

경찰은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친화적 협력 치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의 조력을 받는 여러 형태의 협의체(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협력치안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협력단체이며 경찰 내부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이다. 경찰의 조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 시민단체, 국가공공기관, 언론, 민간경비업체 등 다양한 협력자 그룹을 중심으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협력치안의 구성근거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지역치안협의회가 해당된다. 행정발전위원회, 자율방범대는 훈련 또는 예규에 의하며, 아동안전지킴이, 실버지킴이, 청소년 지도위원회, 시민 명예경찰은 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구성된다. 또 무도인방범대, 부녀방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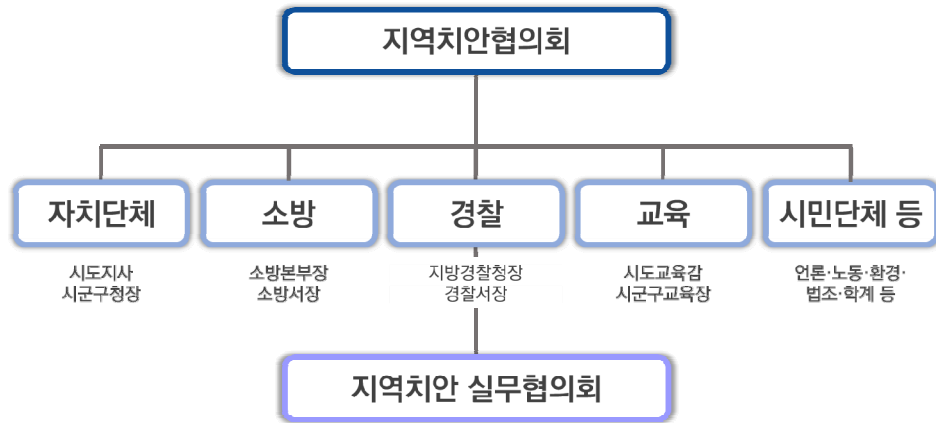
112 HAM 무선봉사단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임의 구성 단체에 해당한다.

〈표 4-24〉 활동목적에 따른 경찰 협력단체 분류

| 범죄예방 | 공공질서유지 | 인권보호 | 행정지원 |
|-------|------------------|--------------------|--------------------|
| 자율방범대 |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인권위원회 | 지역치안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

치안 협력단체들의 활동목적에 따라 범죄예방, 공공질서유지, 인권보호, 행정지원 기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이 지구대 파출소 단위로 조직한 방법활동 협력단체로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능을 수행한다.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질서유지 기능을 담당하며, 인권위원회는 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지원의 기능으로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광역 및 기초 단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역의 치안 및 주민 안전에 관한 협의회 제도는 1991년 이후 시작되었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 치안인프라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기관 협력 방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다만, 치안협의회의 도입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급조된 측면이 있어 도입 초기에 단순 협조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조례에 의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방식 보다는 협약문에 근거해 참여기관·단체가 합의한 것을 토대로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규범적 효력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순 협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림 4-10] 지역치안협의회 조직 운영체계

③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상 기능 범위

충청남도는 2014년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안전하고 질서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로 명시한 지역치안협의회는 기능과 역할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요구 건의사항으로 종합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20명 이상 35명 이내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지방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관계기관·단체장, 전문가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 산하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두며,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표 4-25〉 시군별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구성

| 조례명 | 위원수 | 의장·부의장 | 위원 | 간사 |
|---------------------------------|--------|---------|---------------|------------------------|
| 천안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 30명 이내 | 시장·경찰서장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無 |
|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명 이내 | 시장·경찰서장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공주시 및 공주경찰서 업무담당과장 |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 30명 이내 | 시장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보령경찰서장 |
| 아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명 이내 | 시장·호선 | 의장 등 |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명 이내 | 시장·호선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서산경찰서 경무과장 |
|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 시장·호선 | 의장·교육감·경찰서장 등 |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
|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0명 이내 | 시장·호선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
| 당진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명 이내 | 시장·경찰서장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당진시 업무 담당 과장 |
| 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 20명 이내 | 군수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의장이 위원 중 1명 지명 |
| 부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 군수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부여경찰서 경무과장 |
|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 15명 이내 | 군수·경찰서장 | 의장·교육장·경찰서장 등 | 서천군 자치행정과장, 서천경찰서 경무과장 |
|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 군수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청양경찰서 경무과장 |
|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 군수 | 의장·교육장·소방서장 등 | 홍성 경찰서장 |
|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0명 이내 | 군수 | 의장·교육장·세무서장 등 | 예산 경찰서장 |
|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명 이내 | 군수·경찰서장 | 의장·교육장·전문가 등 | 태안군 및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 |

현재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는 각 시군을 중심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을 정비하고 9개 시군에서 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개 시군이 실무협의
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치안이슈를 공동발굴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각 시군은 2010년~2015년 기간 중 최초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
며, 치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매년 회의를 개최한 시군은 1곳도 없으며, 기
간 중 1회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시군은 천안, 아산, 계룡, 보령, 부여 등 5곳
으로 나타났다.

〈표 4-26〉 2019~2022년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현황 (2023. 2. 현재)

| 구분 | 설치일자 | 위원 구성 | 치안협의회개최(실무협의회개최) | | | | 조례 유무 | 조례상 개최규정 |
|-------|------------|----------|------------------|------|------|-------|----------|-------------|
| |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 계 | - | - | 7 | 1 | 1 | 9(12) | - | - |
| 1 천안 | '11.1.3. | 구성중 | - | - | - | - | 유 | 반기 1회 |
| 2 공주 | '10.11.15. | 10 | - | - | - | 2(2) | 유 | 반기 1회 |
| 3 보령 | '10.10.7. | 20 | - | - | - | 0(1) | 유 | 분기 1회 |
| 4 아산 | '10.12.15. | 구성중 | - | - | - | - | 유 | 반기 1회 |
| 5 서산 | '13.11.8. | 19 | 1 | - | - | 1(0) | 유 | 반기 1회 |
| 6 논산 | '10.9.13. | 8 | - | - | - | 1(2) | 유 | 분기 1회 |
| 7 계룡 | '10.9.13. | 5 | - | - | - | - | 유 | 반기 1회 |
| 8 당진 | '13.9.30. | 20 | 1 | - | - | 1(1) | 유 | 반기 1회 |
| 9 금산 | '10.12.31. | 10 | 1 | - | - | 1(1) | 유 | 분기 1회 |
| 10 부여 | '10.12.1. | 13 | - | - | - | 0(4) | 유 | 분기 1회 |
| 11 서천 | '13.9.27. | 15 | - | 1 | 1 | 1(1) | 유 | 반기 1회 |
| 12 청양 | '11.2.28. | 구성중 | 1 | - | - | - | 유 | 반기 1회 |
| 13 홍성 | '10.12.30. | 구성중 | 1 | - | - | - | 유 | 반기 1회 |
| 14 예산 | '15.10.28. | 21 | 1 | - | - | 1(0) | 유 | 반기 1회 |
| 15 태안 | '11.5.31. | 12 | 1 | - | - | 1(0) | 유 | 반기 1회 |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치안 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감축,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 민생치안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시군과 일선 경찰과의 협의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광역단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여전히 관련 조직이 불비한 불합리가 구조화 되어 있는 만큼 정책협력의 시너지 창출과 지역 맞춤형 민생치안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지역치안협의회 상위 근거 부재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등 존치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어 그 설치·운영에 대한 폐지 논의도 필요한 상황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자치경찰제 운영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와 향후 일원화 가능성에 대한 과도기로서 광역수준의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의 재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시군 치안협의회 간 역할의 배분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마련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하겠다.

(3) 치안협력네트워크

충청남도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경찰활동에 협력관계를 갖는 도민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맞춤형 치안의제를 발굴하는 등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생활안전, 교통) 및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학교 등 경찰 협력단체가 숨(SUM¹⁹⁾) 쉬는 우리동네 치안

19)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치안협력네트워크 업무협약 기관 간 사업명칭으로 Safe U with Me : 나와 함께 안전한 당신-치안 활동을 하는 주체(ME)와 함께 주민(U)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협력네트워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사람중심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제안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별 범죄예방 방안 등 도민 의견수렴으로 각 기관단체의 활동 특성이 반영된 민원요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구제 필요성과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적십자 등 관련 단체와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협력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모범운전자회는 학교 주변 주정차 위반이나 심야(자정 이후)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학교주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지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단속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노인일자리 근무자로 학교주변 교통안전관리 인력이 대체되는 추세에 따라 공공근로 제공자에 대한 교통법규 및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치안협력네트워크는 운영의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직체로서 기 운영되고 있는 협력단체들의 상호 교류와 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운영예산 등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직능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특성상 관련 주민 요구와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 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관-기관 간, 또는 기관-공공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과 일부 단체에서 주민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해당 직능단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민원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6) 종합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경찰법과 관련 지방정부의 조례 등을 검토할 때, 제도 도입의 명시적 목적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에게 밀착한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선언적 의미 외에 주민을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요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가 드러나기 어렵고,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사항도 단순 행정적 홍보필요성에 의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군 관서에서 접수된 112 신고와 민원, 출동 등 사건 관련 현황을 통해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점검해 본 결과 지역별 발생 건수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부 권역으로 대표되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지역은 인구규모의 차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외에도 단순시비 등 풍속범죄 발생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범죄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찰인력의 부족에 관한 현실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수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재배치 등의 방식이 병행논의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중요범죄로 분류되는 사건 가운데는 절도 비중이 가장 높으며, 발생이 많은 지역은 주로 북부권 도심에 건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관광중심, 도심 등 지역별로 절도 범죄 발생의 종류와 유형이 다른 점에서 계절별-지역별 대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순으로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폭력과 학대 사건은 가족이나 연인 등 외부와 차단된 내밀한 사정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되지 않은 잠재적

사건이나 사건화 하지 않고 종결된 사안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 발생에 앞서 사전 징후의 감지와 조기 개입을 통한 대형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치안의 전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를 통한 시군별 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사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적 개입이 필요한 시기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의 관리가 필요하다.

충남지역은 교통관련 사고접수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차량의 증가, 도로 선형이나 시설물의 첨단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음주 등 개인 부주의와 불법행위에 의한 내용을 구분·관리할 필요가 있다.

야간은 풍속범죄, 음주관련 시비와 폭력 등의 사건이 증가한다. 따라서 야간 사고발생이 많은 지역과 유흥업소 등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강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폭력 등 범죄 예방과 사고관리 전반에 음주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건강한 음주문화와 인권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활동이 요구된다.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치안행정이 주민을 관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협력의 주체를 정부부문 차원에 한정된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안전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교류와 협조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주민 안전과 치안에 대해 각 기관과 주민, 단체 및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실무적 협력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주민수요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충남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거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거주지역, 학력 등의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조사내용은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해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 주요 분야의 인식과 수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4-27〉 설문지표의 구성체계

| 구분 | 주요 조사내용 | |
|-----------------|---|---|
| 일반 현황 | · 성별, 연령, 소속, 거주지역, 학력, 직업 등 | |
|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 · 자치경찰제도 인식 수준 | · 지역치안 향상 기여에 대한 인식 |
|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 | ·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 안전 인식 · 가장 위험을 받는 범죄 종류 ·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의사 | · 경찰의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 ·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
|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 · 거주지역의 교통안전 인식 정도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의사 | · 경찰의 교통활동 만족도 ·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위협적 요소 · 교통약자 보호 위해 필요한 활동 |
|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인식 | · 거주지역 사회적약자의 안전수준 인식 · 근절 필요한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 범죄 피해 입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책 | ·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

■ 응답자 특성

충청남도 및 시군의 협조를 통해 2023년 4월에서 5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1,384명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다. 성별은 남성 736명(53.2%), 여성 648명(46.8%), 직업은 공무원 448명(32.4%), 농림축산업(20.9%)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8〉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 | 명(%) | 구분 | | 명(%) |
|----|---------|-----------|------------|---------|-----------|
| 성별 | 여 | 648(46.8) | 거주지 | 천안시 | 71(5.1) |
| | 남 | 736(53.2) | | 공주시 | 125(9.0) |
| 연령 | 만19세 이하 | 8(0.6) | | 보령시 | 73(5.3) |
| | 만20-29세 | 211(15.2) | | 아산시 | 43(3.1) |
| | 만30-39세 | 267(19.3) | | 서산시 | 116(8.4) |
| | 만40-49세 | 263(19.0) | | 논산시 | 144(10.4) |
| | 만50-59세 | 273(19.7) | | 계룡시 | 50(3.6) |
| | 만60-69세 | 283(20.4) | | 당진시 | 53(3.8) |
| | 만70세 이상 | 79(5.7) | | 금산군 | 103(7.4) |
| 학력 | 초등학교 | 33(2.4) | | 부여군 | 139(10.0) |
| | 중학교 | 120(8.7) | | 서천군 | 79(5.7) |
| | 고등학교 | 440(31.8) | | 청양군 | 85(6.1) |
| | 대학교 | 751(54.3) | | 홍성군 | 135(9.8) |
| | 대학원 | 34(2.5) | | 예산군 | 116(8.4) |
| | 기타 | 6(0.4) | | 태안군 | 52(3.8) |
| 직업 | 회사원 | 150(10.8) | 거주특성 | 도시중심지역 | 197(14.2) |
| | 주부 | 145(10.5) | | 도시주변지역 | 257(18.6) |
| | 학생 | 34(2.5) | | 농촌지역 | 843(60.9) |
| | 자영업 | 150(10.8) | | 어촌지역 | 37(2.7) |
| | 공무원 | 448(32.4) | | 산촌지역 | 20(1.4) |
| | 농림축산업 | 289(20.9) | | 섬지역 | 1(0.1) |
| | 무직 | 54(3.9) | | 공장밀집지역 | 5(0.4) |
| | 기타 | 114(8.2) | 거주기간 | 기타지역 | 24(1.7) |
| | | | | 0년-4년 | 82(5.9) |
| | | | | 5년-9년 | 132(9.5) |
| | | | | 10년-19년 | 194(14.0) |
| | | | | 20년-29년 | 328(23.7) |
| | | | | 30년 이상 | 648(46.8) |
| 전체 | | | 1,384(100) | | |

2)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충남도민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은 ‘잘 모르는 수준(47.7%)’으로 나타났다. ‘잘안다’는 비율이 남성(12.6%)이 여성(5.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인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잘안다’는 비중이 7~8% 수준인 것에 비해 금산군(16.5%), 태안군(16.3%), 서천군(15.2%) 등의 지역에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 대상 홍보 및 참여 활동 등의 효과로 생각된다.

〈표 4-29〉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이다 | 잘안다 | 매우 잘안다 |
|-------------|-----|------------|-----------|-----------|-----------|----------|-----------|
| 전체 | | 1,384(100) | 162(11.7) | 498(36.0) | 594(42.9) | 114(8.2) | 16(1.2) |
| 성별 | 여 | 648(100) | 73(11.3) | 258(39.8) | 280(43.2) | 32(4.9) | 5(0.8) |
| | 남 | 736(100) | 89(12.1) | 240(32.6) | 314(42.7) | 82(11.1) | 11(1.5)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9(12.7) | 27(38.0) | 28(39.4) | 5(7.0) | 2(2.8) |
| | 공주시 | 125(100) | 18(14.4) | 42(33.6) | 56(44.8) | 9(7.2) | 0(0.0) |
| | 보령시 | 73(100) | 10(13.7) | 27(37.0) | 31(42.5) | 5(6.8) | 0(0.0) |
| | 아산시 | 43(100) | 8(18.6) | 29(67.4) | 5(11.6) | 1(2.3) | 0(0.0) |
| | 서산시 | 116(100) | 7(6.0) | 43(37.1) | 56(48.3) | 8(6.9) | 2(1.7) |
| | 논산시 | 144(100) | 14(9.7) | 56(38.9) | 61(42.4) | 12(8.3) | 1(0.7) |
| | 계룡시 | 50(100) | 4(8.0) | 16(32.0) | 29(58.0) | 1(2.0) | 0(0.0) |
| | 당진시 | 53(100) | 5(9.4) | 26(49.1) | 19(35.8) | 3(5.7) | 0(0.0) |
| | 금산군 | 103(100) | 9(8.7) | 23(22.3) | 54(52.4) | 15(14.6) | 2(1.9) |
| | 부여군 | 139(100) | 29(20.9) | 52(37.4) | 47(33.8) | 10(7.2) | 1(0.7) |
| | 서천군 | 79(100) | 5(6.3) | 23(29.1) | 39(49.4) | 12(15.2) | 0(0.0) |
| | 청양군 | 85(100) | 6(7.1) | 36(42.4) | 38(44.7) | 4(4.7) | 1(1.2) |
| | 홍성군 | 135(100) | 21(15.6) | 47(34.8) | 53(39.3) | 11(8.1) | 3(2.2) |
| | 예산군 | 116(100) | 11(9.5) | 38(32.8) | 54(46.6) | 10(8.6) | 3(2.6) |
| | 태안군 | 52(100) | 6(11.5) | 13(25.0) | 24(46.2) | 8(15.4) | 1(1.9) |

■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 치안 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인식

자치경찰제가 지역치안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인식은 ‘보통(51.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충남도민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지역 치안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21.9%)이 여성(16.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긍정적인 인식이 태안군(30.8%), 예산군(28.4%), 금산군(24.3%) 등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긍정적 인식도 높은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하다.

〈표 4-30〉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 치안 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전체 | | 1,384(100) | 95(6.9) | 302(21.8) | 717(51.8) | 235(17.0) | 35(2.5) |
| 성별 | 여 | 648(100) | 36(5.6) | 151(23.3) | 352(54.3) | 102(15.7) | 7(1.1) |
| | 남 | 736(100) | 59(8.0) | 151(20.5) | 365(49.6) | 133(18.1) | 28(3.8)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8(11.3) | 18(25.4) | 30(42.3) | 13(18.3) | 2(2.8) |
| | 공주시 | 125(100) | 8(6.4) | 21(16.8) | 65(52.0) | 30(24.0) | 1(0.8) |
| | 보령시 | 73(100) | 3(4.1) | 15(20.5) | 43(58.9) | 10(13.7) | 2(2.7) |
| | 아산시 | 43(100) | 10(23.3) | 18(41.9) | 13(30.2) | 2(4.7) | 0(0.0) |
| | 서산시 | 116(100) | 7(6.0) | 28(24.1) | 59(50.9) | 20(17.2) | 2(1.7) |
| | 논산시 | 144(100) | 10(6.9) | 29(20.1) | 85(59.0) | 18(12.5) | 2(1.4) |
| | 계룡시 | 50(100) | 6(12.0) | 10(20.0) | 27(54.0) | 6(12.0) | 1(2.0) |
| | 당진시 | 53(100) | 3(5.7) | 17(32.1) | 26(49.1) | 6(11.3) | 1(1.9) |
| | 금산군 | 103(100) | 4(3.9) | 9(8.7) | 65(63.1) | 21(20.4) | 4(3.9) |
| | 부여군 | 139(100) | 10(7.2) | 35(25.2) | 70(50.4) | 20(14.4) | 4(2.9) |
| | 서천군 | 79(100) | 3(3.8) | 16(20.3) | 43(54.4) | 15(19.0) | 2(2.5) |
| | 청양군 | 85(100) | 2(2.4) | 25(29.4) | 47(55.3) | 10(11.8) | 1(1.2) |
| | 홍성군 | 135(100) | 15(11.1) | 29(21.5) | 63(46.7) | 24(17.8) | 4(3.0) |
| | 예산군 | 116(100) | 3(2.6) | 20(17.2) | 60(51.7) | 28(24.1) | 5(4.3) |
| | 태안군 | 52(100) | 3(5.8) | 12(23.1) | 21(40.4) | 12(23.1) | 4(7.7) |

3)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 정도

충남도민들은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48.4%)’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8.8)보다 여성(11.3%), 연령별로는 만30~39세(13.8%), 만19세 이하(12.5%)에서 ‘불안감’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산시(18.6%), 당진시(17%), 천안시(14.1%)등 도시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천군의 경우 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16.5%)’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표 4-31〉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매우 안전하다 | 안전하다 | 보통이다 | 불안하다 | 매우 불안하다 |
|-----|-----|------------|---------|-----------|-----------|----------|---------|
| 전체 | | 1,384(100) | 60(4.3) | 610(44.1) | 576(41.6) | 129(9.3) | 9(0.7) |
| 성별 | 여 | 648(100) | 19(2.9) | 279(43.1) | 277(42.7) | 68(10.5) | 5(0.8) |
| | 남 | 736(100) | 41(5.6) | 331(45.0) | 299(40.6) | 61(8.3) | 4(0.5)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1(1.4) | 27(38.0) | 33(46.5) | 9(12.7) | 1(1.4) |
| | 공주시 | 125(100) | 6(4.8) | 59(47.2) | 49(39.2) | 11(8.8) | 0(0.0) |
| | 보령시 | 73(100) | 3(4.1) | 35(47.9) | 30(41.1) | 5(6.8) | 0(0.0) |
| | 아산시 | 43(100) | 1(2.3) | 17(39.5) | 17(39.5) | 7(16.3) | 1(2.3) |
| | 서산시 | 116(100) | 3(2.6) | 48(41.4) | 55(47.4) | 10(8.6) | 0(0.0) |
| | 논산시 | 144(100) | 5(3.5) | 59(41.0) | 66(45.8) | 12(8.3) | 2(1.4) |
| | 계룡시 | 50(100) | 6(12.0) | 27(54.0) | 16(32.0) | 1(2.0) | 0(0.0) |
| | 당진시 | 53(100) | 0(0.0) | 16(30.2) | 28(52.8) | 9(17.0) | 0(0.0) |
| | 금산군 | 103(100) | 7(6.8) | 53(51.5) | 34(33.0) | 8(7.8) | 1(1.0) |
| | 부여군 | 139(100) | 10(7.2) | 58(41.7) | 59(42.4) | 10(7.2) | 2(1.4) |
| | 서천군 | 79(100) | 0(0.0) | 31(39.2) | 35(44.3) | 13(16.5) | 0(0.0) |
| | 청양군 | 85(100) | 4(4.7) | 34(40.0) | 42(49.4) | 5(5.9) | 0(0.0) |
| | 홍성군 | 135(100) | 7(5.2) | 60(44.4) | 51(37.8) | 16(11.9) | 1(0.7) |
| | 예산군 | 116(100) | 4(3.4) | 61(52.6) | 42(36.2) | 9(7.8) | 0(0.0) |
| | 태안군 | 52(100) | 3(5.8) | 25(48.1) | 19(36.5) | 4(7.7) | 1(1.9) |

■ 거주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거주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은 비교적 만족도(36.9%)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33.2%)보다 남성(40.2%)의 만족도가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공주시(44.8%), 금산군(43.7%), 태안군(42.3%), 부여군(41.8%), 예산군(41.4%) 등 농어촌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도시지역인 아산시(23.2%), 천안시(14.1%), 당진시(11.3%) 등은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0~4년(12.2%), 5년~9년(12.1%))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주요한 특징으로 보인다.

〈표 4-32〉 거주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불만족한다 | 매우 불만족한다 |
|-----|-----|------------|---------|-----------|-----------|----------|----------|
| 전체 | | 1,384(100) | 51(3.7) | 460(33.2) | 736(53.2) | 122(8.8) | 15(1.1) |
| 성별 | 여 | 648(100) | 17(2.6) | 198(30.6) | 357(55.1) | 70(10.8) | 6(0.9) |
| | 남 | 736(100) | 34(4.6) | 262(35.6) | 379(51.5) | 52(7.1) | 9(1.2)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2(2.8) | 21(29.6) | 38(53.5) | 9(12.7) | 1(1.4) |
| | 공주시 | 125(100) | 5(4.0) | 51(40.8) | 64(51.2) | 5(4.0) | 0(0.0) |
| | 보령시 | 73(100) | 2(2.7) | 25(34.2) | 42(57.5) | 4(5.5) | 0(0.0) |
| | 아산시 | 43(100) | 0(0.0) | 15(34.9) | 18(41.9) | 9(20.9) | 1(2.3) |
| | 서산시 | 116(100) | 4(3.4) | 37(31.9) | 67(57.8) | 8(6.9) | 0(0.0) |
| | 논산시 | 144(100) | 6(4.2) | 46(31.9) | 75(52.1) | 14(9.7) | 3(2.1) |
| | 계룡시 | 50(100) | 2(4.0) | 18(36.0) | 26(52.0) | 3(6.0) | 1(2.0) |
| | 당진시 | 53(100) | 0(0.0) | 11(20.8) | 36(67.9) | 4(7.5) | 2(3.8) |
| | 금산군 | 103(100) | 4(3.9) | 41(39.8) | 49(47.6) | 9(8.7) | 0(0.0) |
| | 부여군 | 139(100) | 9(6.5) | 49(35.3) | 67(48.2) | 12(8.6) | 2(1.4) |
| | 서천군 | 79(100) | 1(1.3) | 23(29.1) | 41(51.9) | 14(17.7) | 0(0.0) |
| | 청양군 | 85(100) | 2(2.4) | 20(23.5) | 57(67.1) | 6(7.1) | 0(0.0) |
| | 홍성군 | 135(100) | 7(5.2) | 40(29.6) | 69(51.1) | 18(13.3) | 1(0.7) |
| | 예산군 | 116(100) | 6(5.2) | 42(36.2) | 61(52.6) | 6(5.2) | 1(0.9) |
| | 태안군 | 52(100) | 1(1.9) | 21(40.4) | 26(50.0) | 1(1.9) | 3(5.8) |

■ 거주지역에서 가장 위험을 받는 범죄 종류

거주지역에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범죄 종류는 절도(34.5%), 폭력(29.8%)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서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성폭력(18.1%)에 대한 불안감이 남성(9%)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만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주로 폭력(31~37%), 만 40세 이상은 절도(34~41%)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산시(34.5%), 계룡시(28%), 당진시(45.3%), 홍성군(29.6%) 등은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 천안시(36.6%), 공주시(36.8%), 아산시(48.8%), 금산군(45.6%) 등은 ‘절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4-33〉 거주지역에서 가장 위험을 받는 범죄 종류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폭력 | 절도 | 살인 | 성폭력 | 기타 |
|-----|-----|------------|-----------|-----------|----------|-----------|-----------|
| 전체 | | 1,384(100) | 412(29.8) | 478(34.5) | 66(4.8) | 183(13.2) | 245(17.7) |
| 성별 | 여 | 648(100) | 202(31.2) | 190(29.3) | 28(4.3) | 117(18.1) | 111(17.1) |
| | 남 | 736(100) | 210(28.5) | 288(39.1) | 38(5.2) | 66(9.0) | 134(18.2)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20(28.2) | 26(36.6) | 4(5.6) | 8(11.3) | 13(18.3) |
| | 공주시 | 125(100) | 36(28.8) | 46(36.8) | 2(1.6) | 21(16.8) | 20(16.0) |
| | 보령시 | 73(100) | 26(35.6) | 21(28.8) | 4(5.5) | 13(17.8) | 9(12.3) |
| | 아산시 | 43(100) | 17(39.5) | 21(48.8) | 2(4.7) | 3(7.0) | 0(0.0) |
| | 서산시 | 116(100) | 40(34.5) | 29(25.0) | 16(13.8) | 14(12.1) | 17(14.7) |
| | 논산시 | 144(100) | 48(33.3) | 37(25.7) | 8(5.6) | 19(13.2) | 32(22.2) |
| | 계룡시 | 50(100) | 14(28.0) | 6(12.0) | 0(0.0) | 11(22.0) | 19(38.0) |
| | 당진시 | 53(100) | 24(45.3) | 13(24.5) | 2(3.8) | 7(13.2) | 7(13.2) |
| | 금산군 | 103(100) | 21(20.4) | 47(45.6) | 2(1.9) | 9(8.7) | 24(23.3) |
| | 부여군 | 139(100) | 31(22.3) | 58(41.7) | 8(5.8) | 14(10.1) | 28(20.1) |
| | 서천군 | 79(100) | 29(36.7) | 34(43.0) | 3(3.8) | 5(6.3) | 8(10.1) |
| | 청양군 | 85(100) | 19(22.4) | 38(44.7) | 4(4.7) | 11(12.9) | 13(15.3) |
| | 홍성군 | 135(100) | 40(29.6) | 36(26.7) | 8(5.9) | 22(16.3) | 29(21.5) |
| | 예산군 | 116(100) | 35(30.2) | 41(35.3) | 3(2.6) | 15(12.9) | 22(19.0) |
| | 태안군 | 52(100) | 12(23.1) | 25(48.1) | 0(0.0) | 11(21.2) | 4(7.7) |

■ 거주지역에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

주민들이 안전에 가장 위협을 받는 장소는 주로 유흥·변화가(46.8%), 주거지역(44.5%), 외국인밀집지역(1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원지역(17.1%), 공업지역(10.2%)에서도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9세 이하에서는 교통시설 주변(37.5%), 사회활동이 많은 만 20세~만49세에서는 유흥·변화가(54~59%), 만50세 이상은 주거지역(43~46%)에서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유흥·변화가’와 ‘주거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계룡시(36%), 공주시(24.8%), 서천군(19%) 등은 ‘공원지역’에서 위협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거주지역에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 수 | 주거 지역 | 교육 지역 | 상업 지역 | 유흥·변화가 | 교통 시설 주변 | 공업 지역 | 공원 지역 | 관광 지역 | 외국인 밀집 지역 |
|-----|-----|------------------|---------------|---------------|--------------|---------------|---------------|--------------|---------------|-------------|---------------|
| 전체 | | 1,384 (173.6) | 616 (44.5) | 175 (12.6) | 123 (8.9) | 648 (46.8) | 194 (14.0) | 107 (7.7) | 203 (14.7) | 61 (4.4) | 276 (19.9) |
| 성별 | 여 | 648 (178.2) | 296 (45.7) | 88 (13.6) | 50 (7.7) | 312 (48.1) | 95 (14.7) | 66 (10.2) | 111 (17.1) | 15 (2.3) | 122 (18.8) |
| | 남 | 736 (169.7) | 320 (43.5) | 87 (11.8) | 73 (9.9) | 336 (45.7) | 99 (13.5) | 41 (5.6) | 92 (12.5) | 46 (6.3) | 154 (20.9) |
| 거주지 | 천안시 | 71 (174.6) | 35 (49.3) | 6 (8.5) | 4 (5.6) | 33 (46.5) | 8 (11.3) | 5 (7.0) | 9 (12.7) | 3 (4.2) | 21 (29.6) |
| | 공주시 | 125 (188.0) | 62 (49.6) | 9 (7.2) | 9 (7.2) | 73 (58.4) | 23 (18.4) | 4 (3.2) | 31 (24.8) | 8 (6.4) | 16 (12.8) |
| | 보령시 | 73 (183.6) | 32 (43.8) | 5 (6.8) | 5 (6.8) | 44 (60.3) | 10 (13.7) | 8 (11.0) | 12 (16.4) | 9 (12.3) | 9 (12.3) |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 수 | 주거 지역 | 교육 지역 | 상업 지역 | 유흥·변화가 | 교통 시설 주변 | 공업 지역 | 공원 지역 | 관광 지역 | 외국인 밀집 지역 |
|-----|-----|----------------|--------------|--------------|--------------|--------------|--------------|--------------|--------------|-------------|--------------|
| 거주지 | 아산시 | 43 (190.7) | 25 (58.1) | 2 (4.7) | 10 (23.3) | 18 (41.9) | 13 (30.2) | 6 (14.0) | 0 (0.0) | 2 (4.7) | 6 (14.0) |
| | 서산시 | 116 (168.1) | 47 (40.5) | 8 (6.9) | 12 (10.3) | 68 (58.6) | 8 (6.9) | 9 (7.8) | 20 (17.2) | 6 (5.2) | 17 (14.7) |
| | 논산시 | 144 (166.7) | 68 (47.2) | 20 (13.9) | 9 (6.3) | 65 (45.1) | 21 (14.6) | 4 (2.8) | 15 (10.4) | 2 (1.4) | 36 (25.0) |
| | 계룡시 | 50 (192.0) | 19 (38.0) | 5 (10.0) | 9 (18.0) | 28 (56.0) | 5 (10.0) | 2 (4.0) | 18 (36.0) | 0 (0.0) | 10 (20.0) |
| | 당진시 | 53 (190.6) | 22 (41.5) | 9 (17.0) | 3 (5.7) | 29 (54.7) | 3 (5.7) | 7 (13.2) | 7 (13.2) | 0 (0.0) | 21 (39.6) |
| | 금산군 | 103 (157.3) | 43 (41.7) | 11 (10.7) | 11 (10.7) | 49 (47.6) | 12 (11.7) | 12 (11.7) | 9 (8.7) | 0 (0.0) | 15 (14.6) |
| | 부여군 | 139 (169.1) | 70 (50.4) | 20 (14.4) | 16 (11.5) | 46 (33.1) | 22 (15.8) | 10 (7.2) | 17 (12.2) | 6 (4.3) | 28 (20.1) |
| | 서천군 | 79 (188.6) | 42 (53.2) | 13 (16.5) | 8 (10.1) | 26 (32.9) | 16 (20.3) | 10 (12.7) | 15 (19.0) | 7 (8.9) | 12 (15.2) |
| | 청양군 | 85 (182.4) | 40 (47.1) | 13 (15.3) | 10 (11.8) | 45 (52.9) | 17 (20.0) | 6 (7.1) | 11 (12.9) | 2 (2.4) | 11 (12.9) |
| | 홍성군 | 135 (168.9) | 51 (37.8) | 21 (15.6) | 6 (4.4) | 59 (43.7) | 19 (14.1) | 12 (8.9) | 23 (17.0) | 4 (3.0) | 33 (24.4) |
| | 예산군 | 116 (161.2) | 44 (37.9) | 19 (16.4) | 8 (6.9) | 50 (43.1) | 11 (9.5) | 9 (7.8) | 12 (10.3) | 5 (4.3) | 29 (25.0) |
| | 태안군 | 52 (153.8) | 16 (30.8) | 14 (26.9) | 3 (5.8) | 15 (28.8) | 6 (11.5) | 3 (5.8) | 4 (7.7) | 7 (13.5) | 12 (23.1) |

■ 거주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

거주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으로는 경찰관의 순찰강화(38%),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35.7%)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등에서는 ‘경찰관의 순찰강화 활동’,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등에서는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 운영이 필요하다.

〈표 4-35〉 거주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경찰관의 순찰강화 |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CCTV, 비상벨 등) | 주민참여 치안활동 (범죄 취약 지 순찰 등) | 범죄예방 홍보·교육 강화 | 생활안전 위험시설 지도단속 | 기타 |
|-------------|-----|------------|-----------|-------------------------------------|-----------------------------------|---------------------|----------------------|--------|
| 전체 | | 1,384(100) | 526(38.0) | 494(35.7) | 193(13.9) | 80(5.8) | 84(6.1) | 7(0.5) |
| 성 별 | 여 | 648(100) | 244(37.7) | 223(34.4) | 96(14.8) | 34(5.2) | 50(7.7) | 1(0.2) |
| | 남 | 736(100) | 282(38.3) | 271(36.8) | 97(13.2) | 46(6.3) | 34(4.6) | 6(0.8)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35(49.3) | 22(31.0) | 8(11.3) | 3(4.2) | 2(2.8) | 1(1.4) |
| | 공주시 | 125(100) | 48(38.4) | 44(35.2) | 20(16.0) | 7(5.6) | 5(4.0) | 1(0.8) |
| | 보령시 | 73(100) | 22(30.1) | 33(45.2) | 10(13.7) | 4(5.5) | 4(5.5) | 0(0.0) |
| | 아산시 | 43(100) | 12(27.9) | 17(39.5) | 5(11.6) | 7(16.3) | 2(4.7) | 0(0.0) |
| | 서산시 | 116(100) | 35(30.2) | 45(38.8) | 18(15.5) | 7(6.0) | 11(9.5) | 0(0.0) |
| | 논산시 | 144(100) | 64(44.4) | 42(29.2) | 21(14.6) | 4(2.8) | 13(9.0) | 0(0.0) |
| | 계룡시 | 50(100) | 20(40.0) | 18(36.0) | 8(16.0) | 2(4.0) | 2(4.0) | 0(0.0) |
| | 당진시 | 53(100) | 28(52.8) | 14(26.4) | 4(7.5) | 3(5.7) | 4(7.5) | 0(0.0) |
| | 금산군 | 103(100) | 46(44.7) | 31(30.1) | 11(10.7) | 10(9.7) | 4(3.9) | 1(1.0) |
| | 부여군 | 139(100) | 43(30.9) | 53(38.1) | 26(18.7) | 9(6.5) | 8(5.8) | 0(0.0) |
| | 서천군 | 79(100) | 21(26.6) | 35(44.3) | 9(11.4) | 6(7.6) | 8(10.1) | 0(0.0) |
| | 청양군 | 85(100) | 42(49.4) | 28(32.9) | 6(7.1) | 5(5.9) | 4(4.7) | 0(0.0) |
| | 홍성군 | 135(100) | 55(40.7) | 44(32.6) | 21(15.6) | 3(2.2) | 10(7.4) | 2(1.5) |
| | 예산군 | 116(100) | 28(24.1) | 57(49.1) | 16(13.8) | 7(6.0) | 7(6.0) | 1(0.9) |
| | 태안군 | 52(100) | 27(51.9) | 11(21.2) | 10(19.2) | 3(5.8) | 0(0.0) | 1(1.9) |

■ 거주지역 생활안전 관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거주지역에서 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으로는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범죄예방진단’이 55.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13.7%), 남성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14.3%)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만20세~만39세 이하에서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15%)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범죄예방진단’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아산시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11.6%), 홍성군·계룡시·당진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4-36〉 거주지역 생활안전 관리를 위한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지역주민 안전을 위 한 순찰, 범 죄예방 시설 설치· 운영, 범죄 예방진단 |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 관리 | 재난·재해 발생 시 긴 급구조지 원,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 통관리 등 | 경범죄 위 반행위 지 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 공공질서 에 반하는 풍속·성매 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 지역주민 의 생활안 전 관련 112신고 (일반신고 를 포함한 다) 처리 |
|-------------|-----|------------|---|--------------------------------------|--|--|--|---|
| 전체 | | 1,384(100) | 766(55.3) | 151(10.9) | 174(12.6) | 169(12.2) | 59(4.3) | 65(4.7) |
| 성 별 | 여 | 648(100) | 366(56.5) | 67(10.3) | 69(10.6) | 89(13.7) | 31(4.8) | 26(4.0) |
| | 남 | 736(100) | 400(54.3) | 84(11.4) | 105(14.3) | 80(10.9) | 28(3.8) | 39(5.3)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40(56.3) | 7(9.9) | 12(16.9) | 6(8.5) | 3(4.2) | 3(4.2) |
| | 공주시 | 125(100) | 64(51.2) | 18(14.4) | 11(8.8) | 21(16.8) | 8(6.4) | 3(2.4) |
| | 보령시 | 73(100) | 38(52.1) | 8(11.0) | 12(16.4) | 11(15.1) | 3(4.1) | 1(1.4) |
| | 아산시 | 43(100) | 20(46.5) | 4(9.3) | 7(16.3) | 4(9.3) | 5(11.6) | 3(7.0) |
| | 서산시 | 116(100) | 60(51.7) | 11(9.5) | 17(14.7) | 22(19.0) | 1(0.9) | 5(4.3) |
| | 논산시 | 144(100) | 95(66.0) | 17(11.8) | 7(4.9) | 14(9.7) | 4(2.8) | 7(4.9) |
| | 계룡시 | 50(100) | 26(52.0) | 1(2.0) | 9(18.0) | 7(14.0) | 2(4.0) | 5(10.0) |
| | 당진시 | 53(100) | 27(50.9) | 3(5.7) | 8(15.1) | 6(11.3) | 1(1.9) | 8(15.1) |
| | 금산군 | 103(100) | 61(59.2) | 15(14.6) | 11(10.7) | 9(8.7) | 4(3.9) | 3(2.9) |
| | 부여군 | 139(100) | 79(56.8) | 15(10.8) | 23(16.5) | 15(10.8) | 4(2.9) | 3(2.2) |
| | 서천군 | 79(100) | 39(49.4) | 12(15.2) | 8(10.1) | 12(15.2) | 1(1.3) | 7(8.9) |
| | 청양군 | 85(100) | 49(57.6) | 11(12.9) | 7(8.2) | 14(16.5) | 4(4.7) | 0(0.0) |
| | 홍성군 | 135(100) | 72(53.3) | 9(6.7) | 19(14.1) | 13(9.6) | 8(5.9) | 14(10.4) |
| | 예산군 | 116(100) | 60(51.7) | 12(10.3) | 19(16.4) | 13(11.2) | 9(7.8) | 3(2.6) |
| | 태안군 | 52(100) | 36(69.2) | 8(15.4) | 4(7.7) | 2(3.8) | 2(3.8) | 0(0.0) |

■ 거주지역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의사

거주지역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76.6%)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극적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도민(9.9%)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적극적 홍보와 참여기회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12.6%)이 여성(6.8%)보다 적극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만50세 이상(11~14%)에서 높은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아산시(55.8%), 당진시(47.2%)에서 관심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의 경우 자치경찰제에 대한 교육과 활동 성과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7〉 거주지역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의사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적극 참여하겠다 |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 관심없다 |
|-----|-----|------------|-------------|-----------------|-----------|
| 전체 | | 1,384(100) | 137(9.9) | 923(66.7) | 324(23.4) |
| 성별 | 여 | 648(100) | 44(6.8) | 428(66.0) | 176(27.2) |
| | 남 | 736(100) | 93(12.6) | 495(67.3) | 148(20.1)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8(11.3) | 49(69.0) | 14(19.7) |
| | 공주시 | 125(100) | 15(12.0) | 78(62.4) | 32(25.6) |
| | 보령시 | 73(100) | 3(4.1) | 59(80.8) | 11(15.1) |
| | 아산시 | 43(100) | 5(11.6) | 14(32.6) | 24(55.8) |
| | 서산시 | 116(100) | 9(7.8) | 84(72.4) | 23(19.8) |
| | 논산시 | 144(100) | 14(9.7) | 93(64.6) | 37(25.7) |
| | 계룡시 | 50(100) | 4(8.0) | 35(70.0) | 11(22.0) |
| | 당진시 | 53(100) | 1(1.9) | 27(50.9) | 25(47.2) |
| | 금산군 | 103(100) | 8(7.8) | 78(75.7) | 17(16.5) |
| | 부여군 | 139(100) | 11(7.9) | 102(73.4) | 26(18.7) |
| | 서천군 | 79(100) | 10(12.7) | 42(53.2) | 27(34.2) |
| | 청양군 | 85(100) | 11(12.9) | 55(64.7) | 19(22.4) |
| | 홍성군 | 135(100) | 7(5.2) | 94(69.6) | 34(25.2) |
| | 예산군 | 116(100) | 15(12.9) | 84(72.4) | 17(14.7) |
| | 태안군 | 52(100) | 16(30.8) | 29(55.8) | 7(13.5) |

4)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의 교통안전 인식 정도

거주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비교적 '안전하다'(34%)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성(13.9%)보다 여성(16.4%)이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사회활동이 가장 많은 만30~39세(21%), 만20~29세(18.9%)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서천군(29.1%), 당진시(22.7%), 청양군(21.2%)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표 4-38〉 거주지역의 교통안전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매우 안전하다 | 안전하다 | 보통이다 | 불안하다 | 매우 불안하다 |
|-----|-----|------------|---------|-----------|-----------|-----------|---------|
| 전체 | | 1,384(100) | 45(3.3) | 425(30.7) | 706(51.0) | 189(13.7) | 19(1.4) |
| 성별 | 여 | 648(100) | 22(3.4) | 181(27.9) | 339(52.3) | 97(15.0) | 9(1.4) |
| | 남 | 736(100) | 23(3.1) | 244(33.2) | 367(49.9) | 92(12.5) | 10(1.4)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4(5.6) | 13(18.3) | 41(57.7) | 10(14.1) | 3(4.2) |
| | 공주시 | 125(100) | 4(3.2) | 47(37.6) | 54(43.2) | 20(16.0) | 0(0.0) |
| | 보령시 | 73(100) | 1(1.4) | 25(34.2) | 36(49.3) | 11(15.1) | 0(0.0) |
| | 아산시 | 43(100) | 2(4.7) | 9(20.9) | 27(62.8) | 5(11.6) | 0(0.0) |
| | 서산시 | 116(100) | 3(2.6) | 34(29.3) | 59(50.9) | 18(15.5) | 2(1.7) |
| | 논산시 | 144(100) | 6(4.2) | 43(29.9) | 78(54.2) | 15(10.4) | 2(1.4) |
| | 계룡시 | 50(100) | 4(8.0) | 24(48.0) | 20(40.0) | 2(4.0) | 0(0.0) |
| | 당진시 | 53(100) | 0(0.0) | 6(11.3) | 35(66.0) | 11(20.8) | 1(1.9) |
| | 금산군 | 103(100) | 1(1.0) | 37(35.9) | 48(46.6) | 15(14.6) | 2(1.9) |
| | 부여군 | 139(100) | 6(4.3) | 54(38.8) | 67(48.2) | 11(7.9) | 1(0.7) |
| | 서천군 | 79(100) | 0(0.0) | 17(21.5) | 39(49.4) | 22(27.8) | 1(1.3) |
| | 청양군 | 85(100) | 1(1.2) | 22(25.9) | 44(51.8) | 17(20.0) | 1(1.2) |
| | 홍성군 | 135(100) | 6(4.4) | 38(28.1) | 77(57.0) | 13(9.6) | 1(0.7) |
| | 예산군 | 116(100) | 3(2.6) | 44(37.9) | 53(45.7) | 12(10.3) | 4(3.4) |
| | 태안군 | 52(100) | 4(7.7) | 12(23.1) | 28(53.8) | 7(13.5) | 1(1.9) |

■ 거주지역 경찰의 교통활동 만족도

거주지역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57.6%)으로 불만족(14.1%)에 비해 만족(28.4%)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30.9%)의 경우 여성(25.6%)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30~39세, 만20~29세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마찬가지로 서천군(22.8%), 당진시(20.8%), 청양군(16.5%)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한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39〉 거주지역 경찰의 교통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 응답자수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불만족한다 | 매우 불만족 한다 |
|-------------|------------|------------|-----------|-----------|-----------|--------------|
| 전체 | 1,384(100) | 55(4.0) | 338(24.4) | 797(57.6) | 171(12.4) | 23(1.7) |
| 성 별 | 여 | 648(100) | 17(2.6) | 149(23.0) | 388(59.9) | 85(13.1) |
| | 남 | 736(100) | 38(5.2) | 189(25.7) | 409(55.6) | 86(11.7)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2(2.8) | 19(26.8) | 40(56.3) | 8(11.3) |
| | 공주시 | 125(100) | 8(6.4) | 41(32.8) | 56(44.8) | 19(15.2) |
| | 보령시 | 73(100) | 0(0.0) | 19(26.0) | 44(60.3) | 9(12.3) |
| | 아산시 | 43(100) | 0(0.0) | 6(14.0) | 31(72.1) | 5(11.6) |
| | 서산시 | 116(100) | 4(3.4) | 26(22.4) | 64(55.2) | 22(19.0) |
| | 논산시 | 144(100) | 3(2.1) | 31(21.5) | 96(66.7) | 11(7.6) |
| | 계룡시 | 50(100) | 1(2.0) | 18(36.0) | 27(54.0) | 3(6.0) |
| | 당진시 | 53(100) | 1(1.9) | 6(11.3) | 35(66.0) | 9(17.0) |
| | 금산군 | 103(100) | 3(2.9) | 29(28.2) | 57(55.3) | 10(9.7) |
| | 부여군 | 139(100) | 7(5.0) | 43(30.9) | 76(54.7) | 13(9.4) |
| | 서천군 | 79(100) | 4(5.1) | 11(13.9) | 46(58.2) | 17(21.5) |
| | 청양군 | 85(100) | 5(5.9) | 11(12.9) | 55(64.7) | 13(15.3) |
| | 홍성군 | 135(100) | 6(4.4) | 34(25.2) | 78(57.8) | 15(11.1) |
| | 예산군 | 116(100) | 7(6.0) | 33(28.4) | 61(52.6) | 12(10.3) |
| | 태안군 | 52(100) | 4(7.7) | 11(21.2) | 31(59.6) | 5(9.6) |

■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주로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의 이륜차 법규 위반’(37.2%),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26.3%), ‘신호기,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2.5%)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교통단속 활동 및 장비 부족’(13.5%)도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부여군, 청양군은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30.2%), 태안군은 ‘신호기,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32.7%)이 가장 중요한 위협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4-40〉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도민의 교통 법규 위반 | 신호기, 횡단 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 부족 | 교통단속 활동 및 장비 부족 |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의 이륜차 법규 위반 | 기타 |
|-------------|-----|------------|-----------------|--------------------------------------|-----------------------|-----------------------------------|---------|
| 전체 | | 1,384(100) | 364(26.3) | 311(22.5) | 158(11.4) | 515(37.2) | 36(2.6) |
| 성별 | 여 | 648(100) | 177(27.3) | 129(19.9) | 59(9.1) | 268(41.4) | 15(2.3) |
| | 남 | 736(100) | 187(25.4) | 182(24.7) | 99(13.5) | 247(33.6) | 21(2.9)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14(19.7) | 12(16.9) | 9(12.7) | 35(49.3) | 1(1.4) |
| | 공주시 | 125(100) | 32(25.6) | 29(23.2) | 6(4.8) | 56(44.8) | 2(1.6) |
| | 보령시 | 73(100) | 17(23.3) | 18(24.7) | 9(12.3) | 28(38.4) | 1(1.4) |
| | 아산시 | 43(100) | 9(20.9) | 13(30.2) | 6(14.0) | 15(34.9) | 0(0.0) |
| | 서산시 | 116(100) | 28(24.1) | 25(21.6) | 10(8.6) | 52(44.8) | 1(0.9) |
| | 논산시 | 144(100) | 27(18.8) | 37(25.7) | 7(4.9) | 69(47.9) | 4(2.8) |
| | 계룡시 | 50(100) | 17(34.0) | 7(14.0) | 3(6.0) | 22(44.0) | 1(2.0) |
| | 당진시 | 53(100) | 12(22.6) | 7(13.2) | 6(11.3) | 28(52.8) | 0(0.0) |
| | 금산군 | 103(100) | 39(37.9) | 19(18.4) | 10(9.7) | 32(31.1) | 3(2.9) |
| | 부여군 | 139(100) | 42(30.2) | 38(27.3) | 24(17.3) | 31(22.3) | 4(2.9) |
| | 서천군 | 79(100) | 21(26.6) | 16(20.3) | 15(19.0) | 23(29.1) | 4(5.1) |
| | 청양군 | 85(100) | 27(31.8) | 14(16.5) | 16(18.8) | 26(30.6) | 2(2.4) |
| | 홍성군 | 135(100) | 43(31.9) | 27(20.0) | 12(8.9) | 48(35.6) | 5(3.7) |
| | 예산군 | 116(100) | 25(21.6) | 32(27.6) | 19(16.4) | 35(30.2) | 5(4.3) |
| | 태안군 | 52(100) | 11(21.2) | 17(32.7) | 6(11.5) | 15(28.8) | 3(5.8) |

■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

앞서 공통적으로 도민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교통법규 위반사례로 음주운전(34.3%), 과속·신호위반(18.8%), 보복·난폭운전(17.6%) 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음주운전(36.3%), 남성은 보복·난폭운전(19.2%)에 대해 더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공주시·보령시·논산시 등은 음주운전, 아산시·서산시 등은 과속·신호위반, 계룡시 등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위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위협요인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지역수요 맞춤형의 교통활동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1〉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음주운전 | 보복·난폭 운전 | 불법 주정차 | 과속· 신호위반 | 보행자 무단횡단 | 기타 |
|-------------|-----|------------|-----------|-------------|-----------|-------------|-------------|---------|
| 전체 | | 1,384(100) | 475(34.3) | 243(17.6) | 229(16.5) | 260(18.8) | 165(11.9) | 12(0.9) |
| 성 별 | 여 | 648(100) | 235(36.3) | 102(15.7) | 109(16.8) | 117(18.1) | 79(12.2) | 6(0.9) |
| | 남 | 736(100) | 240(32.6) | 141(19.2) | 120(16.3) | 143(19.4) | 86(11.7) | 6(0.8)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28(39.4) | 17(23.9) | 10(14.1) | 12(16.9) | 4(5.6) | 0(0.0) |
| | 공주시 | 125(100) | 42(33.6) | 27(21.6) | 19(15.2) | 23(18.4) | 9(7.2) | 5(4.0) |
| | 보령시 | 73(100) | 28(38.4) | 14(19.2) | 12(16.4) | 10(13.7) | 9(12.3) | 0(0.0) |
| | 아산시 | 43(100) | 7(16.3) | 10(23.3) | 7(16.3) | 18(41.9) | 1(2.3) | 0(0.0) |
| | 서산시 | 116(100) | 30(25.9) | 18(15.5) | 15(12.9) | 33(28.4) | 18(15.5) | 2(1.7) |
| | 논산시 | 144(100) | 40(27.8) | 33(22.9) | 38(26.4) | 17(11.8) | 16(11.1) | 0(0.0) |
| | 계룡시 | 50(100) | 9(18.0) | 13(26.0) | 16(32.0) | 8(16.0) | 3(6.0) | 1(2.0) |
| | 당진시 | 53(100) | 20(37.7) | 9(17.0) | 11(20.8) | 8(15.1) | 5(9.4) | 0(0.0) |
| | 금산군 | 103(100) | 35(34.0) | 16(15.5) | 16(15.5) | 16(15.5) | 19(18.4) | 1(1.0) |
| | 부여군 | 139(100) | 43(30.9) | 26(18.7) | 20(14.4) | 29(20.9) | 21(15.1) | 0(0.0) |
| | 서천군 | 79(100) | 27(34.2) | 13(16.5) | 17(21.5) | 11(13.9) | 10(12.7) | 1(1.3) |
| | 청양군 | 85(100) | 38(44.7) | 11(12.9) | 10(11.8) | 16(18.8) | 9(10.6) | 1(1.2) |
| | 홍성군 | 135(100) | 63(46.7) | 18(13.3) | 18(13.3) | 24(17.8) | 12(8.9) | 0(0.0) |
| | 예산군 | 116(100) | 43(37.1) | 14(12.1) | 13(11.2) | 27(23.3) | 19(16.4) | 0(0.0) |
| | 태안군 | 52(100) | 22(42.3) | 4(7.7) | 7(13.5) | 8(15.4) | 10(19.2) | 1(1.9) |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41.1%), ‘교통안전시설 개선’(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의 단속·모니터링 강화에 더해 인프라의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성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남성은 ‘교통안전 예방 활동’(14.1%)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천안시 ‘교통안전 예방 활동’, 아산시·계룡시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 등 지역별로 다양한 자치경찰 활동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단위: 명(%))

| 구분 | 응답자수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 교통안전 시설개선 (신호체계 개선, 야간에 눈에 잘 띄는 횡단보도 확대 등) | 교통안전 예방 활동 (출·퇴근 시간대 교통 관리 등) |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많은 곳 등) | 교통약자 보호 강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련시설 정비 등)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
| 전체 | 1,384(100) | 569(41.1) | 373(27.0) | 160(11.6) | 127(9.2) | 90(6.5) | 65(4.7) |
| 성 별 | 여 | 648(100) | 283(43.7) | 180(27.8) | 56(8.6) | 54(8.3) | 44(6.8) |
| | 남 | 736(100) | 286(38.9) | 193(26.2) | 104(14.1) | 73(9.9) | 46(6.3)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34(47.9) | 14(19.7) | 15(21.1) | 1(1.4) | 7(9.9) |
| | 공주시 | 125(100) | 54(43.2) | 33(26.4) | 10(8.0) | 12(9.6) | 6(4.8) |
| | 보령시 | 73(100) | 33(45.2) | 20(27.4) | 6(8.2) | 6(8.2) | 5(6.8) |
| | 아산시 | 43(100) | 15(34.9) | 14(32.6) | 5(11.6) | 6(14.0) | 3(7.0) |
| | 서산시 | 116(100) | 35(30.2) | 41(35.3) | 18(15.5) | 12(10.3) | 7(6.0) |
| | 논산시 | 144(100) | 46(31.9) | 41(28.5) | 20(13.9) | 14(9.7) | 10(6.9) |
| | 계룡시 | 50(100) | 18(36.0) | 11(22.0) | 7(14.0) | 7(14.0) | 4(8.0) |
| | 당진시 | 53(100) | 23(43.4) | 13(24.5) | 5(9.4) | 3(5.7) | 4(7.5) |
| | 금산군 | 103(100) | 49(47.6) | 28(27.2) | 12(11.7) | 7(6.8) | 7(6.8) |
| | 부여군 | 139(100) | 56(40.3) | 32(23.0) | 16(11.5) | 18(12.9) | 12(8.6) |
| | 서천군 | 79(100) | 23(29.1) | 30(38.0) | 10(12.7) | 6(7.6) | 6(7.6) |
| | 청양군 | 85(100) | 44(51.8) | 17(20.0) | 8(9.4) | 5(5.9) | 7(8.2) |
| | 홍성군 | 135(100) | 68(50.4) | 34(25.2) | 12(8.9) | 9(6.7) | 7(5.2) |
| | 예산군 | 116(100) | 45(38.8) | 36(31.0) | 8(6.9) | 15(12.9) | 4(3.4) |
| | 태안군 | 52(100) | 26(50.0) | 9(17.3) | 8(15.4) | 6(11.5) | 1(1.9) |

■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으로는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31.3%),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31.1%)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교통안전 홍보·교육·캠페인’(10.7%)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천안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강화’(43.7%), 계룡시 ‘교통안전 홍보·교육·캠페인’(22%), 아산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11.6%) 등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표 4-43〉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단위: 명(%))

| 구분 | 응답자수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내 단속강화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지정 확대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 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 | 교통안전 홍보·교육·캠페인 | 기타 |
|-------------|------------|---------------------|--------------------|------------------------|-----------------------------------|----------------|----------|
| 전체 | 1,384(100) | 318(23.0) | 64(4.6) | 431(31.1) | 433(31.3) | 129(9.3) | 9(0.7) |
| 성 별 | 여 | 648(100) | 144(22.2) | 29(4.5) | 201(31.0) | 221(34.1) | 50(7.7) |
| | 남 | 736(100) | 174(23.6) | 35(4.8) | 230(31.3) | 212(28.8) | 79(10.7)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31(43.7) | 7(9.9) | 12(16.9) | 19(26.8) | 2(2.8) |
| | 공주시 | 125(100) | 28(22.4) | 4(3.2) | 30(24.0) | 50(40.0) | 13(10.4) |
| | 보령시 | 73(100) | 21(28.8) | 1(1.4) | 25(34.2) | 20(27.4) | 6(8.2) |
| | 아산시 | 43(100) | 9(20.9) | 5(11.6) | 17(39.5) | 9(20.9) | 3(7.0) |
| | 서산시 | 116(100) | 19(16.4) | 3(2.6) | 45(38.8) | 40(34.5) | 7(6.0) |
| | 논산시 | 144(100) | 33(22.9) | 5(3.5) | 48(33.3) | 43(29.9) | 14(9.7) |
| | 계룡시 | 50(100) | 8(16.0) | 0(0.0) | 14(28.0) | 17(34.0) | 11(22.0) |
| | 당진시 | 53(100) | 10(18.9) | 0(0.0) | 19(35.8) | 22(41.5) | 2(3.8) |
| | 금산군 | 103(100) | 30(29.1) | 3(2.9) | 28(27.2) | 32(31.1) | 10(9.7) |
| | 부여군 | 139(100) | 28(20.1) | 10(7.2) | 56(40.3) | 36(25.9) | 8(5.8) |
| | 서천군 | 79(100) | 14(17.7) | 3(3.8) | 28(35.4) | 21(26.6) | 11(13.9) |
| | 청양군 | 85(100) | 16(18.8) | 4(4.7) | 28(32.9) | 30(35.3) | 7(8.2) |
| | 홍성군 | 135(100) | 33(24.4) | 7(5.2) | 39(28.9) | 43(31.9) | 12(8.9) |
| | 예산군 | 116(100) | 26(22.4) | 10(8.6) | 32(27.6) | 31(26.7) | 16(13.8) |
| | 태안군 | 52(100) | 12(23.1) | 2(3.8) | 10(19.2) | 20(38.5) | 7(13.5) |

5)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인식

■ 거주지역 사회적약자의 안전수준 인식 정도

거주지역 사회적약자의 안전수준에 대해 도민들은 비교적 ‘안전’(31.7%)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여성(15.8%)의 경우 남성(10.4%)에 비해 불안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연령별로는 만30~39세(17.6%), 만40~49세(14.4%)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당진시(24.6%), 아산시(20.9%), 천안시(16.9%) 등 주로 도시지역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서천군(21.6%)의 경우 다른 농어촌 지역에 비해 안전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표 4-44〉 거주지역 사회적약자의 안전수준 인식 정도

(단위: 명(%))

| 구분 | 응답자수 | 매우 안전하다 | 안전하다 | 보통이다 | 불안하다 | 매우 불안하다 |
|-----|------------|------------|-----------|-----------|-----------|------------|
| 전체 | 1,384(100) | 55(4.0) | 383(27.7) | 767(55.4) | 168(12.1) | 11(0.8) |
| 성별 | 여 | 648(100) | 18(2.8) | 153(23.6) | 375(57.9) | 95(14.7) |
| | 남 | 736(100) | 37(5.0) | 230(31.3) | 392(53.3) | 73(9.9)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2(2.8) | 22(31.0) | 35(49.3) | 12(16.9) |
| | 공주시 | 125(100) | 9(7.2) | 39(31.2) | 67(53.6) | 10(8.0) |
| | 보령시 | 73(100) | 0(0.0) | 22(30.1) | 43(58.9) | 8(11.0) |
| | 아산시 | 43(100) | 2(4.7) | 10(23.3) | 22(51.2) | 8(18.6) |
| | 서산시 | 116(100) | 1(0.9) | 25(21.6) | 74(63.8) | 14(12.1) |
| | 논산시 | 144(100) | 7(4.9) | 38(26.4) | 81(56.3) | 16(11.1) |
| | 계룡시 | 50(100) | 2(4.0) | 17(34.0) | 27(54.0) | 4(8.0) |
| | 당진시 | 53(100) | 0(0.0) | 7(13.2) | 33(62.3) | 11(20.8) |
| | 금산군 | 103(100) | 5(4.9) | 32(31.1) | 55(53.4) | 11(10.7) |
| | 부여군 | 139(100) | 8(5.8) | 31(22.3) | 84(60.4) | 15(10.8) |
| | 서천군 | 79(100) | 1(1.3) | 15(19.0) | 46(58.2) | 16(20.3) |
| | 청양군 | 85(100) | 3(3.5) | 26(30.6) | 48(56.5) | 8(9.4) |
| | 홍성군 | 135(100) | 10(7.4) | 40(29.6) | 73(54.1) | 11(8.1) |
| | 예산군 | 116(100) | 3(2.6) | 41(35.3) | 54(46.6) | 17(14.7) |
| | 태안군 | 52(100) | 2(3.8) | 18(34.6) | 25(48.1) | 7(13.5) |

■ 거주지역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거주지역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한다'(28.3%)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여성(21.9%)은 남성(34%)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사회적약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 만30~39세, 만40~49세에서 경찰의 보호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산시(27.9%), 당진시(26.4%)에서 경찰의 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인 서천군(19%), 논산시(18.8%), 태안군(15.4%)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4-45〉 거주지역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 응답자수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불만족한다 | 매우 불만족한다 |
|-----|------------|----------|-----------|-----------|-----------|----------|
| 전체 | 1,384(100) | 46(3.3) | 346(25.0) | 813(58.7) | 163(11.8) | 16(1.2) |
| 성별 | 여 | 648(100) | 16(2.5) | 126(19.4) | 406(62.7) | 90(13.9) |
| | 남 | 736(100) | 30(4.1) | 220(29.9) | 407(55.3) | 73(9.9)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6(8.5) | 18(25.4) | 34(47.9) | 11(15.5) |
| | 공주시 | 125(100) | 6(4.8) | 44(35.2) | 68(54.4) | 6(4.8) |
| | 보령시 | 73(100) | 0(0.0) | 18(24.7) | 51(69.9) | 4(5.5) |
| | 아산시 | 43(100) | 2(4.7) | 5(11.6) | 24(55.8) | 11(25.6) |
| | 서산시 | 116(100) | 0(0.0) | 24(20.7) | 71(61.2) | 19(16.4) |
| | 논산시 | 144(100) | 4(2.8) | 30(20.8) | 83(57.6) | 25(17.4) |
| | 계룡시 | 50(100) | 2(4.0) | 12(24.0) | 29(58.0) | 6(12.0) |
| | 당진시 | 53(100) | 0(0.0) | 7(13.2) | 32(60.4) | 12(22.6) |
| | 금산군 | 103(100) | 2(1.9) | 31(30.1) | 63(61.2) | 7(6.8) |
| | 부여군 | 139(100) | 6(4.3) | 40(28.8) | 80(57.6) | 12(8.6) |
| | 서천군 | 79(100) | 0(0.0) | 15(19.0) | 49(62.0) | 15(19.0) |
| | 청양군 | 85(100) | 3(3.5) | 16(18.8) | 60(70.6) | 6(7.1) |
| | 홍성군 | 135(100) | 10(7.4) | 31(23.0) | 79(58.5) | 13(9.6) |
| | 예산군 | 116(100) | 3(2.6) | 39(33.6) | 64(55.2) | 8(6.9) |
| | 태안군 | 52(100) | 2(3.8) | 16(30.8) | 26(50.0) | 8(15.4) |

■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47.7%), ‘성범죄’(31.6%), ‘가정폭력’(26.7%), ‘아동학대’(25.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범죄(38.3%), 가정폭력(30.4%), 아동학대(29.3%) 등을 주요한 범죄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만 20세~만 39세는 ‘성범죄’, 만 40세 이상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할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시 ‘성범죄’(39.4%), 아산시 ‘아동학대’(41.9%), 보령시 ‘가정폭력’(41.1%), 금산군 ‘노인학대’(25.2%) 등 지역적 여건과 사회적 이슈 노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6〉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아동학대 | 성범죄 | 가정폭력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 노인학대 | 장애인 대상 범죄 |
|-------------|-----|------------------|---------------|---------------|---------------|---------------------|---------------|-----------------|
| 전체 | | 1,384 (154.6) | 350 (25.3) | 438 (31.6) | 370 (26.7) | 660 (47.7) | 225 (16.3) | 97 (4.5) |
| 성별 | 여 | 648 (161.1) | 190 (29.3) | 248 (38.3) | 197 (30.4) | 290 (44.8) | 74 (11.4) | 45 (6.9) |
| | 남 | 736 (148.9) | 160 (21.7) | 190 (25.8) | 173 (23.5) | 370 (50.3) | 151 (20.5) | 52 (7.1) |
| 거 주 지 | 천안시 | 71 (139.4) | 20 (28.2) | 28 (39.4) | 14 (19.7) | 26 (36.6) | 11 (15.5) | 0 (0.0) |
| | 공주시 | 125 (147.2) | 28 (22.4) | 43 (34.4) | 32 (25.6) | 62 (49.6) | 13 (10.4) | 6 (4.8) |
| | 보령시 | 73 (174.0) | 25 (34.2) | 27 (37.0) | 30 (41.1) | 33 (45.2) | 7 (9.6) | 5 (6.8) |
| | 아산시 | 43 (162.8) | 18 (41.9) | 15 (34.9) | 14 (32.6) | 12 (27.9) | 9 (20.9) | 2 (4.7) |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아동학대 | 성범죄 | 가정폭력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 노인학대 | 장애인 대상 범죄 |
|-------------|-----|----------------|--------------|--------------|--------------|---------------------|--------------|-----------------|
| 거 주 지 | 서산시 | 116 (156.0) | 28 (24.1) | 38 (32.8) | 36 (31.0) | 54 (46.6) | 15 (12.9) | 10 (8.6) |
| | 논산시 | 144 (154.2) | 34 (23.6) | 41 (28.5) | 29 (20.1) | 87 (60.4) | 25 (17.4) | 6 (4.2) |
| | 계룡시 | 50 (158.0) | 10 (20.0) | 12 (24.0) | 10 (20.0) | 33 (66.0) | 9 (18.0) | 5 (10.0) |
| | 당진시 | 53 (152.8) | 13 (24.5) | 17 (32.1) | 12 (22.6) | 29 (54.7) | 7 (13.2) | 3 (5.7) |
| | 금산군 | 103 (150.5) | 19 (18.4) | 25 (24.3) | 20 (19.4) | 53 (51.5) | 26 (25.2) | 12 (11.7) |
| | 부여군 | 139 (174.8) | 38 (27.3) | 58 (41.7) | 47 (33.8) | 50 (36.0) | 31 (22.3) | 19 (13.7) |
| | 서천군 | 79 (164.6) | 26 (32.9) | 26 (32.9) | 25 (31.6) | 33 (41.8) | 13 (16.5) | 7 (8.9) |
| | 청양군 | 85 (149.4) | 19 (22.4) | 22 (25.9) | 31 (36.5) | 39 (45.9) | 10 (11.8) | 6 (7.1) |
| | 홍성군 | 135 (152.6) | 40 (29.6) | 36 (26.7) | 31 (23.0) | 63 (46.7) | 25 (18.5) | 11 (8.1) |
| | 예산군 | 116 (143.1) | 22 (19.0) | 34 (29.3) | 29 (25.0) | 61 (52.6) | 16 (13.8) | 4 (3.4) |
| | 태안군 | 52 (134.6) | 10 (19.2) | 16 (30.8) | 10 (19.2) | 25 (48.1) | 8 (15.4) | 1 (1.9) |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활동

사회적약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는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신속한 수사’(41.3%),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25.4%)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남성의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18.8%)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불법촬영 안심구역 설치 등 정책 추진’,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교정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표 4-47〉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활동

(단위: 명(%))

| 구분 | 응답자수 |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신속한 수사 | 불법 촬영 안심 구역 설치 등 정책 추진 |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교정프로그램 운영 | 아동보호 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기타 |
|-------------|------------|----------------------------|------------------------|-----------------------------------|-----------------------|----------------------------|-------------------------|---------|
| 전체 | 1,384(100) | 572(41.3) | 103(7.4) | 352(25.4) | 201(14.5) | 100(7.2) | 50(3.6) | 6(0.4) |
| 성 별 | 여 | 648(100) | 291(44.9) | 50(7.7) | 186(28.7) | 63(9.7) | 35(5.4) | 21(3.2) |
| | 남 | 736(100) | 281(38.2) | 53(7.2) | 166(22.6) | 138(18.8) | 65(8.8) | 29(3.9) |
| 거 주 지 | 천안시 | 71(100) | 31(43.7) | 5(7.0) | 26(36.6) | 5(7.0) | 2(2.8) | 0(0.0) |
| | 공주시 | 125(100) | 47(37.6) | 11(8.8) | 35(28.0) | 20(16.0) | 9(7.2) | 3(2.4) |
| | 보령시 | 73(100) | 31(42.5) | 7(9.6) | 21(28.8) | 9(12.3) | 2(2.7) | 1(1.4) |
| | 아산시 | 43(100) | 11(25.6) | 1(2.3) | 12(27.9) | 8(18.6) | 5(11.6) | 1(2.3) |
| | 서산시 | 116(100) | 48(41.4) | 9(7.8) | 34(29.3) | 12(10.3) | 10(8.6) | 2(1.7) |
| | 논산시 | 144(100) | 62(43.1) | 10(6.9) | 32(22.2) | 22(15.3) | 13(9.0) | 3(2.1) |
| | 계룡시 | 50(100) | 20(40.0) | 3(6.0) | 9(18.0) | 6(12.0) | 8(16.0) | 4(8.0) |
| | 당진시 | 53(100) | 21(39.6) | 7(13.2) | 15(28.3) | 4(7.5) | 4(7.5) | 2(3.8) |
| | 금산군 | 103(100) | 45(43.7) | 6(5.8) | 27(26.2) | 15(14.6) | 9(8.7) | 1(1.0) |
| | 부여군 | 139(100) | 50(36.0) | 11(7.9) | 40(28.8) | 26(18.7) | 9(6.5) | 3(2.2) |
| | 서천군 | 79(100) | 31(39.2) | 8(10.1) | 20(25.3) | 8(10.1) | 6(7.6) | 6(7.6) |
| | 청양군 | 85(100) | 41(48.2) | 4(4.7) | 19(22.4) | 13(15.3) | 5(5.9) | 3(3.5) |
| | 홍성군 | 135(100) | 71(52.6) | 7(5.2) | 31(23.0) | 16(11.9) | 6(4.4) | 4(3.0) |
| | 예산군 | 116(100) | 39(33.6) | 12(10.3) | 21(18.1) | 28(24.1) | 10(8.6) | 5(4.3) |
| | 태안군 | 52(100) | 24(46.2) | 2(3.8) | 10(19.2) | 9(17.3) | 2(3.8) | 5(9.6) |

■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필요한 지원책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29.9%),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25.1%), ‘심리상담 지원’(16.8%)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31.6%)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만20세~만39세는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33~38%), 만50세 이상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31~36%)을 중요한 지원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홍성군·아산시 ‘심리상담 지원’, 천안시·논산시 ‘법률상담 지원’, 청양군 ‘금전 등 물질적 지원’ 등 정책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수요 맞춤형의 자치경찰제 활동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4-48〉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장 필요한 지원책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법률상담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금전 등 물질적 지원 |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 |
|-----|-----|------------|-----------|-----------|-------------|-------------------|-------------|
| 전체 | | 1,384(100) | 194(14.0) | 233(16.8) | 195(14.1) | 414(29.9) | 348(25.1) |
| 성별 | 여 | 648(100) | 73(11.3) | 105(16.2) | 84(13.0) | 181(27.9) | 205(31.6) |
| | 남 | 736(100) | 121(16.4) | 128(17.4) | 111(15.1) | 233(31.7) | 143(19.4)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17(23.9) | 10(14.1) | 2(2.8) | 27(38.0) | 15(21.1) |
| | 공주시 | 125(100) | 18(14.4) | 23(18.4) | 8(6.4) | 51(40.8) | 25(20.0) |
| | 보령시 | 73(100) | 9(12.3) | 7(9.6) | 12(16.4) | 25(34.2) | 20(27.4) |
| | 아산시 | 43(100) | 5(11.6) | 15(34.9) | 13(30.2) | 8(18.6) | 2(4.7) |
| | 서산시 | 116(100) | 12(10.3) | 18(15.5) | 21(18.1) | 30(25.9) | 35(30.2) |
| | 논산시 | 144(100) | 31(21.5) | 20(13.9) | 17(11.8) | 37(25.7) | 39(27.1) |
| | 계룡시 | 50(100) | 3(6.0) | 12(24.0) | 7(14.0) | 14(28.0) | 14(28.0) |
| | 당진시 | 53(100) | 7(13.2) | 8(15.1) | 11(20.8) | 13(24.5) | 14(26.4) |
| | 금산군 | 103(100) | 18(17.5) | 16(15.5) | 10(9.7) | 36(35.0) | 23(22.3) |
| | 부여군 | 139(100) | 13(9.4) | 23(16.5) | 20(14.4) | 44(31.7) | 39(28.1) |
| | 서천군 | 79(100) | 12(15.2) | 13(16.5) | 7(8.9) | 19(24.1) | 28(35.4) |
| | 청양군 | 85(100) | 9(10.6) | 14(16.5) | 20(23.5) | 21(24.7) | 21(24.7) |
| | 홍성군 | 135(100) | 16(11.9) | 33(24.4) | 21(15.6) | 30(22.2) | 35(25.9) |
| | 예산군 | 116(100) | 15(12.9) | 17(14.7) | 17(14.7) | 39(33.6) | 28(24.1) |
| | 태안군 | 52(100) | 9(17.3) | 4(7.7) | 9(17.3) | 20(38.5) | 10(19.2) |

■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

향후 3년간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는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50.4%)과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활동’(38.7%)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만 70세 이상은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도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도민 체감 증대와 만족감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표 4-49〉 향후 3년간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치경찰 분야
(단위: 명(%))

| 구분 | | 응답자수 |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 활동 | 사회적 약자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활동 | 교통안전 활동 |
|-----|-----|------------|--------------------|---|-----------|
| 전체 | | 1,384(100) | 698(50.4) | 536(38.7) | 150(10.8) |
| 성별 | 여 | 648(100) | 307(47.4) | 277(42.7) | 64(9.9) |
| | 남 | 736(100) | 391(53.1) | 259(35.2) | 86(11.7) |
| 거주지 | 천안시 | 71(100) | 40(56.3) | 23(32.4) | 8(11.3) |
| | 공주시 | 125(100) | 61(48.8) | 59(47.2) | 5(4.0) |
| | 보령시 | 73(100) | 33(45.2) | 33(45.2) | 7(9.6) |
| | 아산시 | 43(100) | 21(48.8) | 18(41.9) | 4(9.3) |
| | 서산시 | 116(100) | 58(50.0) | 44(37.9) | 14(12.1) |
| | 논산시 | 144(100) | 69(47.9) | 59(41.0) | 16(11.1) |
| | 계룡시 | 50(100) | 27(54.0) | 17(34.0) | 6(12.0) |
| | 당진시 | 53(100) | 31(58.5) | 17(32.1) | 5(9.4) |
| | 금산군 | 103(100) | 61(59.2) | 35(34.0) | 7(6.8) |
| | 부여군 | 139(100) | 63(45.3) | 60(43.2) | 16(11.5) |
| | 서천군 | 79(100) | 38(48.1) | 24(30.4) | 17(21.5) |
| | 청양군 | 85(100) | 44(51.8) | 29(34.1) | 12(14.1) |
| | 홍성군 | 135(100) | 66(48.9) | 53(39.3) | 16(11.9) |
| | 예산군 | 116(100) | 59(50.9) | 45(38.8) | 12(10.3) |
| | 태안군 | 52(100) | 27(51.9) | 20(38.5) | 5(9.6) |

6) 종합

(1)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도민인식 대폭 강화 필요

충남도민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수준(47.7%)'이며, 이로 인해 정책적 효능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안다'는 경우가 5.7%로 남성의 12.6%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 치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28.7%)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도민 인식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계층별(성별, 연령별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참여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계층별(성별, 연령별 등) 맞춤형 인식개선 필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안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의 불안감과 경찰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령별로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20~40대와 타 연령층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달리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안전보호 등의 정책수요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 따른 다양한 인식구조와 정책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효과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3)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주민수요 대응형 자치경찰제 운영

지역별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지역(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등)에서 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경찰 활동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안전에 위협을 받는 범죄 종류²⁰⁾, 위협을 느끼는 장소²¹⁾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정책수요도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치경찰의 활동은 지역마다 ‘선택과 집중’의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주민수요에 기반하지 않는 활동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적 효능감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인 지역맞춤형의 치안·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자치경찰제로 고도화가 필요하다.

20) 서산시(34.5%), 계룡시(28%), 당진시(45.3%), 홍성군(29.6%) 등은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 천안시(36.6%), 공주시(36.8%), 아산시(48.8%), 금산군(45.6%) 등은 ‘절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1) 대다수의 지역에서 ‘유흥·번화가’와 ‘주거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계룡시(36%), 공주시(24.8%), 서천군(19%) 등은 ‘공원지역’에서 위협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치경찰 관련 연구 및 언론 분석

1) 개요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대한 성과와 한계, 향후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일간지 11개와 지역일간지 6개,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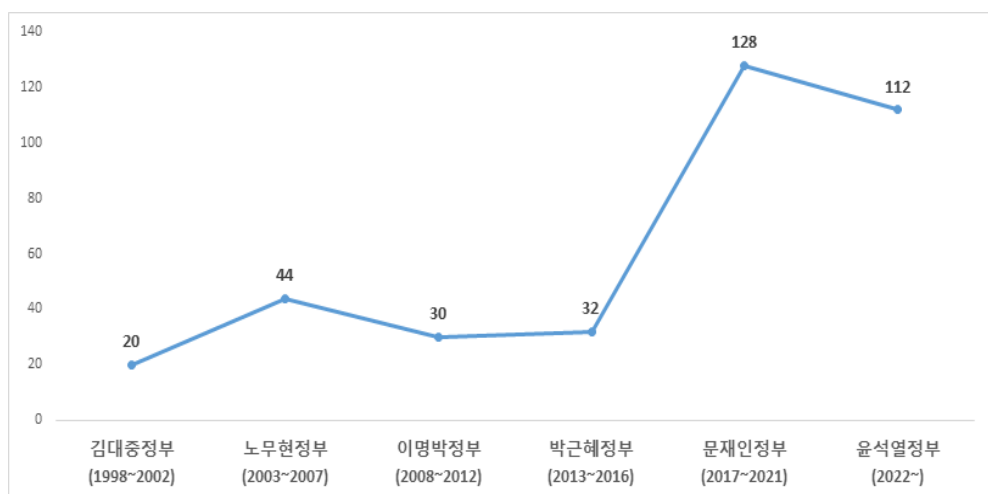
국내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 지방분권의 언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관계망, 이슈트렌드 등 각종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빅카인즈(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전국일간지 11개²²⁾와 지역일간지 6개에 대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지방분권 관련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술지 색인(KCI),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를 활용하여 ‘자치경찰 성과’, ‘자치경찰 한계’, ‘자치경찰 과제’에 대하여 검색하였다. 각각의 키워드에 대하여 수집된 연구논문은 164건, 476건, 340건이 수집되었다. 또한 자치경찰 관련 언론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빅카인즈를 통해 ‘자

22) 빅카인즈에서 분류한 전국일간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내일신문으로 총 11개임

*빅카인즈에서 분류한 지방일간지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일보, 충남일보, 충청투데이로 총 6개임

치경찰 성과’, ‘자치경찰 한계’, ‘자치경찰 과제’를 검색한 결과, 각각의 키워드 관련 기사가 644건, 350건, 739건이 수집되었다. 빅카인즈의 시각화 분석을 활용하여, 선정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4-11] 시기별 자치경찰 연구 추이

자료: 자치경찰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20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자치경찰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을 정리해보면,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 도입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던바 자치경찰 관련 연구가 128건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KCI 등재 혹은 KCI 우수등재 학술연구 중 연구방법으로는 실태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연구 주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과 모델이 가장 많았다(장재성, 2022).

〈표 4-50〉 추출된 키워드 빈도(전국일간지)

| 순위 | 단어 | 빈도 수 | 순위 | 단어 | 빈도 수 |
|----|-------|------|----|----------|------|
| 1 | 위원장 | 621 | 11 | 간담회 | 73 |
| 2 | 제주 | 472 | 12 | 이원화 | 307 |
| 3 | 행정안전부 | 100 | 13 | 지구대 | 243 |
| 4 | 전면 시행 | 104 | 14 | 치안서비스 | 181 |
| 5 | 위원회 | 1867 | 15 | 시범 운영 | 36 |
| 6 | 생활안전 | 237 | 16 | 치안행정 | 125 |
| 7 | 부산시 | 158 | 17 | 파출소 | 224 |
| 8 | 지방분권 | 82 | 18 | 치안정책 | 101 |
| 9 | 지자체 | 332 | 19 | 경남 | 150 |
| 10 | 시민들 | 148 | 20 | 어린이 보호구역 | 45 |

자료: 빅카인즈(bigkinds.or.kr)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자치경찰 관련 전국일간지는 자치경찰의 시행이후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임명이나 자치경찰 전면시행 등에 대하여 관심사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밖에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던 제주나 관련된 지방분권, 운영방식인 이원화 모델 등에 대하여도 언론의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1〉 추출된 키워드 빈도(지역일간지)

| 순위 | 단어 | 빈도 | 순위 | 단어 | 빈도 |
|----|---------|-----|----|-------|----|
| 1 | 자치경찰 | 359 | 11 | 주취자 | 78 |
| 2 | 위원장 | 245 | 12 | 간담회 | 78 |
| 3 | 자치경찰위원회 | 242 | 13 | 사무 | 71 |
| 4 | 치안 | 239 | 14 | 도민 | 68 |
| 5 | 충남 | 219 | 15 | 치안협의체 | 31 |
| 6 | 교통 | 202 | 16 | 업무협약 | 28 |
| 7 | 안전 | 182 | 17 | 생활안전 | 28 |
| 8 | 지역 | 151 | 18 | 정기회의 | 28 |
| 9 | 정책 | 143 | 19 | 정착 | 27 |
| 10 | 개최 | 91 | 20 | 어린이 | 24 |

자치경찰 관련 지방일간지는 자치경찰제 시행직후 언론보도 비중이 높고,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2월, 2022년 8월에 일시 증가하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시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사나 동향관련보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교통 등과 같이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대하여 언론의 관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치경찰 관련 연구

(1) 자치경찰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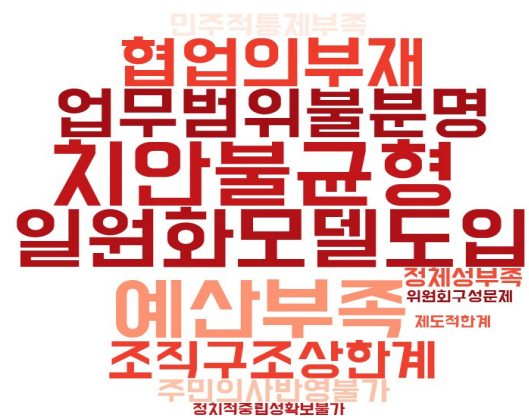


[그림 4-12] 자치경찰의 성과_연구

자치경찰 관련 연구에서 자치경찰의 성과에 대해 검색한 결과,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맞춤 치안”, “시민신뢰도 상승”, “현장소통 강화”와 같은 단어의 빈도수가 높았다. 또한 지역 내에서 주도적으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동체치안활성화”, “지역문제 주도적 해결” 등과 같

은 키워드도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촘촘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공백 방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공정한 치안행정 등과 같은 단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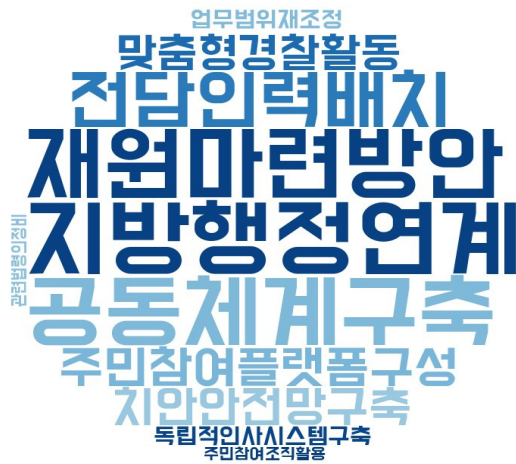
(2) 자치경찰의 한계



[그림 4-13] 자치경찰의 한계_연구

자치경찰 관련 연구에서 자치경찰의 한계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예산부족과 일원화 모델의 도입이었다. 국가경찰과 별개의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이원화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현재 일원화 모델 형태로 제도화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과 인사권문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야기 하였다. 예산과 관련하여서, 현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서 자체재원으로만 운영된다면 지자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치안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3)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



[그림 4-14]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_연구

자치경찰 관련 연구에서 향후 자치경찰의 과제는 ‘재원마련방안’, ‘지방행정 연계’, ‘공동체계구축’ 등의 단어들의 빈도수가 높았다. 특히 재원, 재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는데, 이는 자치경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많이 지적되었고, 지역에 특화된 치안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경찰교부세 신설 등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행정과의 원활한 연계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플랫폼이나 주민참여조직 등 공동체계구축에 대한 키워드들도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치경찰 관련 언론

(1) 자치경찰의 성과

| | |
|--|---|
|  |  |
| 전국일간지 | 지역일간지 |

[그림 4-15] 자치경찰의 성과_언론

자치경찰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일간지와 지역일간지로 구분하여 검색해 본 결과, 전국일간지와 지역일간지 공통적으로 “지역맞춤치안”, “생활밀착형정책” 등과 같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전국일간지의 경우, “경찰권 분산”,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 등의 포괄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많았으며, 지역일간지의 경우, 충남에서 실제로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혹은 “체감안전도 상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아동학대 신고 감소” 등의 키워드가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치경찰의 한계

| | |
|-------|-------|
| | |
| 전국일간지 | 지역일간지 |

[그림 4-16] 자치경찰의 한계_언론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에 대하여 검색해 본 결과, 전국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서 주로 보이는 키워드가 차이를 보였던 성과와는 다르게 한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현재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역일간지에서도 충남 자치경찰의 한계만을 지적하기 보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었다. 대체적으로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서 도출되는 자치경찰 한계의 키워드는 “예산부족”, “인력부족”, “권한부족” 이었다. 또한 일원화 체계로 인해 기형적인 구조로 자치경찰의 업무가 불분명하며, 역할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3)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

| | |
|---|--|
|  |  |
| 전국일간지 | 지역일간지 |

[그림 4-17]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_언론

자치경찰제도의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색해 본 결과, 전국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서 모두 인사권, 예산권 등과 같은 권한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한 인력과 전담부서가 부족하여 “인력배치” 및 “인력 및 전담부서배치”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또한, 아직 제도와 관련법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정”, “제도개선”과 같은 단어도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업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무명확화”, “주민참여현실화”, “현장소통강화” 등의 단어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종합

자치경찰 관련 연구와 언론에서 공통적으로 자치경찰의 성과는 지역맞춤치안, 주민밀착정책 등의 키워드로 종합해보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지역언론에서는 특정 성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주로 많이 보였다. 충남 자치경찰에서 1호 시책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내세웠던 만큼,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교통사고사망자 감소” 등의 명확한 성과가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한계에 대해서 학술연구와 언론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모두 권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일원화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향후 과제는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단어가 많이 보였고, 학술연구에서는 지방행정과의 연계나 주민 참여 강화 등과 같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치안시스템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로 많이 검색되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인사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충남 자치경찰 운영 전략과 과제

1.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
 - 1) 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예방관리 체감화
 - 2) 첨단기술 활용과 정보 호환을 통한 취약성 개선 역량 고도화
 - 3)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구체화
2. 예방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 1)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확대 재편
 - 2) 범죄 취약요인 발굴 및 대응 지원
 - 3)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안전취약계층 치안복지 책임성 강화
 - 1) 인권친화적 보호지원 체계 수립
 - 2) 신중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4. 실증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1) 과학적 관리를 통한 위험분석 서비스 제공
 - 2) 사고유발 원인요소 집중 단속
 - 3) 사고 발생 공간기반 교통안전 행동 개선
5. 탈권위적 조직운영과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 1)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활성화
 - 2) 기관간 협력의 실질적 이행 관리체계 구축

1.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

법에 규정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영역은 자치경찰 정책 수립과 운영, 자치경찰 통제, 국가경찰과의 협의 및 조정 항목으로 구분된다(박재희 외, 2021).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법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모델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상수로 두고, 지역의 치안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사업 수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치경찰 모델과의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협력 외에 지역이 구현할 수 있는 대안적 논의의 기본방향은 주민참여 및 지방행정과 연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할 것이다.

1) 환경·시설 개선을 통한 예방관리 체감화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불안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2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장 주된 불안요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범죄이다.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의 특성에 맞는 예방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자연적 접근통제는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기본적인 감시디자인 개

념이다. 접근통제 전략은 조직적으로는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기계적으로는 잠금장치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적으로는 공간을 변화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접근통제를 통한 전략은 범죄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범죄자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경비초소에 불이 환하게 켜있거나 건물 창문에 창살같은 물리적인 막음장치가 있어 범죄자로 하여금 이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심어주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로고조명이나 여성안심귀갓길, 모형 CCTV, 도로페인팅을 통해 여성안심귀갓길 표시, 경찰관서의 홀로그램 간판 등 많은 장치로 자연적 접근통제를 구현하고 있다.

둘째, 자연적 감시는 조직적으로는 경찰의 순찰활동, 기계적으로는 조명설치 및 조도확보, 자연적으로는 창문시설의 설치를 들 수 있다. 자연적 접근통제 방식에서 진보하여 감시까지 가능하게 하는 전략방향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이 직접 순찰을 통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면 범죄자가 쉽게 범의를 갖기 어렵다. 기계적 감시방법으로서는 일반 조명의 설치보다는 CCTV 설치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영역성 강화 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감시의 두 가지 전략을 서로 호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골목길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물리적 안전장치인 CCTV나 로고조명을 추가하여 해당 공간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범죄 예방에서 장소는 범죄자 개인의 성향보다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범죄자의 대상선택과 실행에서의 물리적 공간구조나 시설특성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범죄 행위의 억제를 위해서는 일상화

동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한 방어적 기능에도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이상의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 활성화 및 유지관리의 5대 원리를 지역 특색에 맞게 적용하여 실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대부분은 방법 카메라, 조명, 담장 도색 등 특정 시설 및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법은 일반적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10~30%의 발생 감소를 가져온다고 알려진다(박유리 외, 2020). 다만, 이러한 기존의 범죄 예방 환경설계가 범죄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되었다기 보다는 지역이나 건축물의 공간환경에서 범죄취약성을 일반화 하고 예산 투입에 있어 가시성과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개별 취약성에 기초한 종합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노출된다.

따라서 기존 범죄 예방진단 카드 외 범죄 위험 장소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지역, 건축물의 독립적 범죄 위험도를 측정하여 범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대신 높은 지역의 범죄 위험도 분석에 집중하여 범죄 취약 장소의 선별 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시설 설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각종 공간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높은 인구전출률, 낮은 인구밀도, 노후화된 건축물, 높은 공·폐가 비율, 높은 고령화율, 적은 유동인구 등 범죄 취약요소에 대해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선택하여 사업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의 발굴이 중요하며, 시군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경찰 시책의 차별성 구현이 가능하다. 해안 관광 중심 지역인 태안, 보령 지역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의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위험 지역 안내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이 추진 가능하며, 청양, 부여 등 농업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계절별 주민 중심 자율방범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을 통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형·체험형 예방사업 도출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은 직접적인 참여효과 외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활동 및 참여자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주민 전체의 연령과 성별, 직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식개선 노력과 병행될 수 있는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제공과 방향이 일치한다. 개인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전교육을 실시함을 의미한다.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요구되는 각 단계의 인권감수성, 사고예방을 위한 지식과 법규 준수를 위한 소양교육을 포함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포괄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 및 사고예방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2) 첨단기술 활용과 정보 호환을 통한 취약성 개선 역량 고도화

사고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유발 원인은 운전자 등 당사자의 과실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으나, 그 밖에도 도로 설계상의 과실이나 신호체계의 오류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또한 운전자 과실의 경우에도 과실을 유발하는 외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생산·소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처리 능력에 대한 욕구와 실제 기기의 성능 향상이 상호 상승하는

작용을 보여 정보 유형이 매우 다양해 지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유경상 외, 2016). 교통 등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사무 유형 중 상당수가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통행실태나 이동 패턴, 위험요인의 집적분포를 조사하는 활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정교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어려웠던 부문에 대한 전문적 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정책과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편의 증진 등 사회적 편익의 증가를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통, 범죄 부문의 정책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제한적인 공개 또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개되는 혹은 공유되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되어 제공되며, 경찰 기관 자체적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 원자료(Raw Data)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원자료 형태를 직접 확인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 하에 있다. 그러나 치안행정 분야는 민간보다는 공공의 역할이 더 크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행정당국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의 마련과 주민의 수요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사건의 발생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주로 과거의 정보라는 특성이 있으며, 뉴스가 제공하는 사건의 정보들은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수시간 혹은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서 정보의 효용성이 감소한다. 교통정보는 정보 유효시간의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고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향후 사고정보의 축적을 통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한다. 치안 관련 정보는 반복된

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적합하다. 특히 교통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인 1990년대 이전부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교통 분야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활발한 요인은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과 공유의 용이성에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를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예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책 활용 측면에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관간 공유체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교통정보 및 범죄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외에도 이를 분석해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들이 데이터를 취합·저장·관리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분절된 이용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기관 간 정보의 통합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교통분야는 단순히 교통 수단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각 데이터들 속에는 시간과 공간 정보가 내재해 있다. 즉, 시간과 관련된 빅데이터 혹은 공간과 관련된 빅데이터와 연계하면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ICT를 기반으로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은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인력의 투입이 아닌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예상되는 시점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지역 문제의 선제적 해결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교통, 범죄, 안전사고 영역으로 집중되는데, 핵심 원인인 사람의 흐름을 파악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구체화

지역별 자치경찰 활동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사무를 발굴하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와 자원의 공유 네트워크 자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한 활동 또는 지역의 치안 소요에 반응하기 위한 공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치안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기관단체, 일반주민)과의 참여 확대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한 민·관 공동의 활동 영역 확보가 핵심적인 전략이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지역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대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치안행정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치안수요 흐름에 대한 이해와 반영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정책사업의 우선 추진이 필요하며,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기술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안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체감 만족도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주민 간의 관계가 통치가 아닌 협치로 전환되는 등의 논의는 학계와 정부의 변화 일부로서 인식될 뿐 치안행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주제로 받아들여져 왔다(원소연, 2018). 특히 사회 내 여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수평적 다층조직체계에 대한 개념인 거버넌스는 대체로 강력

한 주체에 의해 일원화된 통치가 아닌 여러 주체들의 다원적이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기제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치안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초래된 문제 해결 전략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계층적 관료제가 수행하는 이해관계 조정 방식의 한계와 서비스 공급 및 전달의 비효율성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공공재 등 다수 이해관계가 얽힌 공공문제를 경찰권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직의 참여를 통한 다조직 간 상호작용 및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 자치경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역할의 상당부분 변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기존의 체계처럼 특정 단일 조직에 의한 지휘·지도체계를 형성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정치적 위치나 조직문화와 무관하게 치안행정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 내 조직과 기관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치안행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성공적 구축과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내부 조직만의 폐쇄적 네트워크 형성보다 외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중재자 또는 촉진자를 활용하여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고, 나아가 공동의 목표에 대해 참여하는 조직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서로 다른 조직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 노력이 요구된다.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동네 치안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는 자치 실현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며, 여기서 나타나는 효능감이 치안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

2. 예방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1)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확대 재편

(1) 지역 안전시설 설치여건 진단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다수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사업에 활용되는 시설 및 기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생활안전시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가로등, CCTV,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안심벨 등 다양한 범죄예방 시설은 설치 시점에서 적합한 기준이 현대 범죄 및 생활안전 위협 요소의 발생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방범 시설의 설치와 적용에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건축주와 거주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설치된 가로등의 조도 및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도 조정에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자치경찰에서 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설치에 있어서 가로의 폭, 주거지와 거리, 영향범위, 중첩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계획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는데 필지 인근 가로에 조명이 있는 경우 야간 112 신고발생 확률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공중화장실 이용시 불법촬영이나 각종 범죄발생 우려로 인한 주민 불안감 고조되고, 이러한 불법 영상물이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파급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방주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청소년 범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기를 악용한 불법촬영 범죄 및 범죄 기회의 사전 차단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법 카메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한 시설로는 ‘안심거울’ 사례가 있는데, 화장실 출입구에 거울(반사경)을 부착해 보행자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사이 공간을 차단해 불법 촬영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 위치와 범죄 발생 가능성 및 취약성 진단을 통해 설치장소의 재조정 및 공중화장실에 안심장치 설치 및 운영의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구감소 영향으로 상권과 재개발 등 사람의 이동은 공가에서 폐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관리자 없는 시설로 낙인됨으로서 인적이 드물고 CCTV등 방범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각종 범죄나 청소년 비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 특히 노숙인들이 머물다 불을 낼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주민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공가·폐가는 개인소유로 직접적 처분 및 관리의 한계가 있으나, 해당 지점에 대한 ‘방치’로 인식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공·폐가 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불안 요인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지자체 건축담당 부서에서 관리되는 공가·폐가에 대한 정보를 자치경찰과 공유하여 해당 지점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공·폐가는 개인의 사유시

설이라는 특성이 있어 공적 관리영향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유자 파악을 통해 자율적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예방과 두려움 감소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

정보화로 인하여 과거에 잘 알려지지 않던 사건도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5대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력 강화와 CCTV증설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응용한 방법서비스가 민간을 통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연구와 현장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범죄의 발생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범죄 기회의 제거를 통해 사전 차단하는 발생 억제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CPTED 개념은 도시·건축 분야와의 공조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구체화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구조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범죄 다발 시설과 지역에 대한 지정을 통해 이를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지역의 경우,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와 같이 환경설계가 용이한 지역에 비해 거주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일반 주거지에 대해 시설 설치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영향에 의한 폭행 등 범죄가 다발하는 상업지역에 대한 세부분석이 요구된다.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거주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경

찰활동으로 순찰 강화와 범죄 예방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의 장소와 범죄 발생 장소 간에는 일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일상적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조치와 범죄 다발지역의 범죄지도를 작성하여 주민들이 위험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범죄 예방보다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설계 방안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범죄 장소와의 시설 차별화를 통해 치안행정의 효율과 심리적 안정감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야간 자체발광하는 축광석 설치 및 야간 조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 표지병, 태양광 안심 등을 설치하여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억제하고 비상벨 안내판, 귀갓길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CCTV설치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설치대수의 비율차이와 성능의 격차가 발생한다. 2022년 기준 충남도 내 설치된 방범용 CCTV 대수는 29,158대로 천안이 5,955대, 서산 3,063대, 아산 2,962대, 보령 2,656대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인구와 주상공 면적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관심도와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 이중 상당수가 노후하여 실질적 효과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능개선 및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스마트폴 장비의 도입 및 고정식 외 이동식 CCTV 설치 등 투입되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안전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장비의 첨단화 계획이 마련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시설 보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만족도의 경우, 여성이 21.9%, 남성이 34%로 성별

간 차이가 발생하며, 연령별로는 만 30세~49세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고, 연령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절도 등 일반 범죄의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에 비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보도되는 경우에 일상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효과도 생겨난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는 제도상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먼저 차량정보의 등록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신상정보 제출서의 진위 확인이 부실하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점검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차량정보 등록기준의 변경을 통해 명의 외에도 실제 운행 여부를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누락되는 차량이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신상정보 접수 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정확성 담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상정보 대상자에게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 수인의무를 부과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의무에 대한 미이행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보등록 대상자가 매년 1만여 명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에 비해 관리할 수 있는 수사관 증원이 부족한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노력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관리 인력 부족 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주거지 주변 CCTV를 보강하고, 보안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시설의 보완설치가 필요하다.

2) 범죄 취약요인의 발굴 및 대응 지원

(1) 산책로 순찰 강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한 대상을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인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범죄정보연구원의 조사 결과(2021)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대도시권에서 여름철 오후나 저녁시간에 발생하며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와 불특정다수에 전가하여 범죄를 합리화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공원이나 산책로, 안심귀갓길 등 도민 이용이 많은 장소에 집중적인 순찰 강화가 요구된다.

도민 인식조사 결과 거주 지역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가정 요구되는 경찰 활동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실질적인 순찰활동의 효과가 불안감 해소에 크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정복 경찰관의 순찰 빈도 강화나 노출된 공간에서 경찰관의 존재 및 가시성은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 기회를 억제 내지는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안전한 둘레길 및 산책로를 위해 치안인력을 확대하고 도보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도보 순찰 확대에 따른 경찰의 치안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간협력단체(지역 자율방범대 등)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악회’ 등 동호회와 연계하여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우리동네 산책로 안전지킴이)할 수 있으며,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과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칭) 우리동네 산책로 안전지킴이’로 선정된 산악회 회원은 평상시 등산을 하면서 범죄취약지역을 찾아내고, 범죄현장 및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목격 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죄예방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2) 청소년 위험탐지 활동

10대 청소년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도내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미성년 학령기 청소년은 학대 등 범죄 피해자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죄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자치경찰 시행 2년을 도과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하고, 제도변화가 가져오는 생활의 변화를 실감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제도변화가 치안정책의 변화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경찰 사무에 대한 생활밀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범죄 및 위험에 대한 신속한 탐지와 접근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치안행정에서는 참여 청소년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소통 채널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자치경찰 활동에 기여한 청소년에게는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적극참여자에게는 표창을 수여 활동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일선 중고등학교의 학생 동아리지원 방식으로 경찰 직업체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학교 순찰단 등 치안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실현에 대한 감수성을 증대할 수 있다.

3)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1)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캠프 운영

도내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9년 37.8%(2,723/1,028), 2020년 34.2%(2,640/902), 2021년 28.3%(2,432/689), 2022년 33.2%(3,207/1,064)로 코로나 19등 외부활동이 줄어든 시기를 제외하고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비대면수업, 방역정책의 강화 등으로 소년범의 현황과 재범률이 감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었지만, 2022년 방역정책이 완화되고 청소년들의 일상 활동이 활발해지며 소년범과 함께 재범률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충청남도 범죄소년 재범률 현황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 소년범 | 2,723 | 2,640 | 2,432 | 3,207 |
| 재범자 | 1,028 | 902 | 689 | 1,064 |
| 비율(%) | 37.8% | 34.2% | 28.3% | 33.2% |

※ 자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이러한 범죄소년 재범률의 추이는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족과 다수 범죄의 노출 등 미래 발생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재범화를 차단할 종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등 사회적 관심 증가는 물론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시급히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범죄,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에서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22년 기준 학교전담경찰관은 총 58명으로 도내에 737개 학교에 배치된다. 학교전담경찰관 대비 학교 수를 살펴보면, 학교전담경찰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5.3곳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표 5-2〉 2022년 충청남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현황

| 구분 | 계 | 서북 | 동남 | 서산 | 아산 | 논산 | 공주 | 보령 | 당진 | 홍성 | 예산 | 부여 | 서천 | 금산 | 청양 | 태안 |
|-------------------|-----------|----|----------|------|----|----|------|------|----|------|----------|------|------|-----|-----|------|
| 정원 | 58 | 7 | 5 | 4 | 6 | 6 | 5 | 3 | 4 | 3 | 2 | 3 | 3 | 2 | 2 | 3 |
| 현원 (휴직) | 50 (2) | 5 | 5 (1) | 3 | 4 | 3 | 5 | 2 | 5 | 2 | 2 (1) | 3 | 3 | 3 | 2 | 3 |
| 학교수 | 737 | 65 | 70 | 56 | 80 | 69 | 53 | 51 | 55 | 39 | 43 | 40 | 34 | 29 | 19 | 34 |
| 1인당 (휴직 제외) | 15.3 | 13 | 17.5 | 18.6 | 20 | 23 | 10.6 | 25.5 | 11 | 19.5 | 43 | 13.3 | 11.3 | 9.6 | 9.5 | 11.3 |

※ 자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가해 고위험 학생 선도를 위한 민·관·학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이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아 정체성 변화 및 심리적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 협동과제 활동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인식하게 하여 가해 청소년의 재발방지와 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민 법교육 활성화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분쟁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나 법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경찰이나 검찰 등 권력자와의 친소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치안행정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을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 전반의 체계적 법교육 부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죄의 통제 정책 역시 사후 처벌 위주에서 사전 예방의 강조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교육 프로그램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정보 서비스 활동의 하나로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법교육 프로그램은 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가능한 사이버 범죄 행위 및 범죄 피해 차단을 위한 교육, 비행청소년의 재범 억제를 위한 교육,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왔다. 2010년 이후부터는 소외계층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과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의 주된 업무는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며, 법질서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자치경찰과 연계된 주민 법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례는 없으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민의 준법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 처벌 대상으로 사회봉사 및 준법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형식적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의 체계적 운영, 기타 법교육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법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교육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군 중

심의 시민대상 법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자치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준법 교육 등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택시, 버스 등 직능단체와 연계한 운전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법교육 강좌를 개설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교육 대상이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연령, 학력 등 수요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대상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안전취약계층 치안복지 책임성 강화

1) 인권친화적 보호지원 체계 수립

(1)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 효과 홍보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실종아동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9,146명, 2021년 21,379명, 2022년 26,41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실종된 아동 중 27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으로 남아 있는 인원은 879명에 달한다.

〈표 5-3〉 18세 미만 실종아동 접수 현황

| 구분 | 18세 미만 아동 | |
|-------|-----------|-----|
| | 접수 | 미해제 |
| 2020년 | 19,146 | 6 |
| 2021년 | 21,379 | 5 |
| 2022년 | 26,416 | 27 |

※ 자료: 경찰청

아동의 실종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 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자 신속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2022년 474만 3283명(63.4%)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2) 실종·미귀가 발생상황 정보 제공

한해 평균 전국적으로 성인 6만 명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에는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성인에 대한 실종신고는 사례에 따라 대응에 한계를 나타낸다. 성인 실종자는 가출인으로 포집되는 경향이 많고, 112 신고를 통한 실종·미귀가자 신고는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후 상황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전개되어 신속성이 낮다는 비판 제기된다.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수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지역 중심의 실종·미귀가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운영중인 안전Dream 사이트를 활용하여,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역 중심으로 집적하여 도내 발송가능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을 위하여 민간협력단체(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 지자체 공

무원 등 상황 전파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히 위험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택시사업자와 연계한 상황 전파(엠버 정보 시스템) 외에 업무에서 이동성이 확보되는 직업군(도내 지역우체국, 물류 수송업 종사자) 및 지역 금융기관(지역단위 농협 등), 편의점 점주 등 주간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 접촉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창의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3) 관계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충남의 2022년 ‘중요범죄의 월별-사건종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절도 범죄 다음으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성폭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족, 친족 및 애인이라는 유대감을 악용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 못하는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계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 및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순으로 높게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감 및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의 제공을

확대하고, 기존 행정서비스로 제공되는 피해자 심리지원 및 법률지원 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관계성 범죄피해자의 보호 조력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험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안심방범키트(스마트폰 뒷면에 부착하는 핑거링 형태의 SOS 비상 버튼이 내장된 범죄 예방 안전용품, 주거침입 예방 장비인 음성인식 무선비상벨,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 센서, 경찰용 호루라기 등)의 제공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고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²³⁾, 이에 대한 전담 인력은 부족한 실정²⁴⁾이다. 경찰과 민간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보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의 ‘민간경호원 지원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성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이 출범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²⁵⁾하고 있다. 스톱킹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관계성 범죄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법률·의료 서비스 지원, 피해자 보호시

23) 스톱킹을 포함한 전체 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2018년 9,442건에서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 2021년 24,810건, 2022년 29,372건으로 매년 급증하여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던 대상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신고한 사건도 2019년 1,338건에서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 7,861건으로 4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연합뉴스, 2023년 09월 11일자 기사)

2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11010006404>
(2023년 09월 11일자 기사)

2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2457&ref=D>
(2023년 09월 13일자 기사)

설 및 이주비 지원,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일상회복 지원 등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경·관 합동 점검

도내 범죄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기타형사범이며, 명예관련 신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 발생의 상당수가 무시, 모멸감과 같은 인격적인 모독과 비하에 의한 감정적 원인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세, 비정형근로, 외국인·장애인·청소년 등 특정 종사자 사업장에 대해 경·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중심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보호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권 중심의 사업 목적 외에 산업안전 보호 측면의 부수적 효과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종 위험요인의 발굴 및 개선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최근 5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2022년 10,563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5-4〉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발생 현황

| 구분 | 발생 |
|-------|--------|
| 2018년 | 1,365 |
| 2019년 | 1,437 |
| 2020년 | 2,047 |
| 2021년 | 5,067 |
| 2022년 | 10,563 |

※ 자료: 조은희 의원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는 측면이 강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인 등과의 대면 접촉 및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범죄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원인 및 특징, 유형 등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유치원 및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청과 업무협력을 통하여 유치원 및 학교 관리자, 교직원, 도내 교육지원청 직원 및 관리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입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써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무교육, 기술지원 및 장비활용 고도화를 위한 보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찰청, 교육청, 도청,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에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2) 노인·장애인 학대예방 위원회 설치·운영

노인·장애인 학대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과소 보고되는 경향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학대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권력관계나 문화적·관습적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이다. 특히 노인학대 피해자의 70%가 여성이고, 여성 노인의 20%가 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서울연구원, 2019) 가해자의 대부분은 성인자녀이거나(70%) 남편인 경우도(10%)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대응과 사후지원, 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력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내 노인학대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전담할 노인·장애인 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성적, 재정적, 심리적 학대와 방치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학대 인식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복지담당부서, 가정폭력 신고센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여 학대 경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대의 징후를 감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적 개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1) 전(全)주기 빈틈없는 생활안전 교육

개인이 성장단계별 특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역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안전정보의 제공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안전도의 향상과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국민안전교육 외 각 성장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반영한 폭력 등 범죄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단계는 영유아 및 아동기로 영유아기는 의존적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아동기는 안전교육을 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0세~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기는 신체적 변화와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새로운 상황에 적응능력,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판단능력이 미숙하며 보호자의 교육을 신뢰하고 모방하는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6세~12세에 해당하는 아동기는 행동의 허용 기준을 배우며, 이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기준과 원칙을 어길 때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의존해오

던 안전교육을 학교라는 사회 집단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게 된다.

2단계는 안전교육 성숙기인 청소년기와 안전교육 독립기인 청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며 생물학적으로도 성숙하는 시기로 집단과 개인의 정체성이 발달하고 사건의 시작과 결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역량이 증가하여 소속 집단의 규범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신념을 갖고 행동할 수 있어 아동기 안전 개념이 성숙된다. 19세~29세 청년기는 가족 외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예의를 익히고 사회적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사회적 집단의 일원으로 독립하는 시기로서 사회적 책임과 수행에 대한 열정으로 안전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다.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스스로 실천하며 타인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기주도적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3단계인 성인기는 30세~64세에 해당하며 안전교육의 확대기, 성찰기에 해당한다. 30세~49세 시기는 확대기로 직업을 결정하며 결혼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로 독립된 안전수칙과 축적된 경험을 지역사회 및 가정으로 확대하여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다. 50세~64세 시기는 성찰기로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기로 미래를 위해 긍정적 유산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다음세대를 선도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 성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칭찬하는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단계는 노년기로 65세 이상 안전교육의 유지기라 할 수 있다. 자신은 물론 친구나 가족간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로 인지능력의 변화, 만성질환 등 일상생활과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안전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준비

하는 것 보다 기존의 안전지식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2) 위험 인지 및 회피 교육

여성 등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교육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위험 회피를 위한 상황별 대처 요령을 사전에 습득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가 요구되는데 도보, 자동차 승·하차, 건물 출입 등 층남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을 도출하고 각 사례별 위험 회피 방안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상별·연령별·이용장소별 등에 따른 특성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요령을 매뉴얼화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노인, 여성 대상 범죄피해 시 사건 처리절차 및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법, 보호 지원에 대한 안내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폭력과 학대, 스토킹 등을 범죄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실증기반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1) 과학적 관리를 통한 위험분석 서비스 제공

(1) 증거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

충남 각 시군의 도로연장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시군별 교통사고 발생이 도로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차량 도로통행량, 사고발생 지점 등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도로위험성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2022년 기준 도로연장이 7,641km로 15개 지자체 중 15번째로 길고, 기초지자체는 서산시(907km), 천안시(892km), 아산시(751km)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

〈표 5-5〉 충청남도 지자체별 도로연장

(단위:km)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국 | 110,714 | 111,314 | 112,977 | 113,405 | 114,314 |
| 충남 | 7,160 | 7,168 | 7,612 | 7,588 | 7,641 |
| 천안시 | 879 | 880 | 899 | 891 | 892 |
| 아산시 | 729 | 729 | 744 | 732 | 751 |
| 서산시 | 441 | 441 | 887 | 907 | 907 |
| 당진시 | 445 | 445 | 468 | 453 | 475 |
| 보령시 | 568 | 576 | 586 | 573 | 575 |
| 논산시 | 720 | 719 | 637 | 642 | 643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공주시 | 645 | 645 | 608 | 610 | 610 |
| 계룡시 | 126 | 126 | 133 | 138 | 138 |
| 금산군 | 353 | 350 | 351 | 348 | 348 |
| 부여군 | 505 | 505 | 518 | 511 | 511 |
| 서천군 | 364 | 364 | 369 | 369 | 368 |
| 예산군 | 389 | 389 | 403 | 391 | 391 |
| 청양군 | 363 | 363 | 363 | 361 | 364 |
| 태안군 | 310 | 310 | 320 | 317 | 317 |
| 홍성군 | 323 | 324 | 329 | 344 | 348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지자체 종합통계(교통안전현황분석) 재구성

2022년 충남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기타 단일로(3,316건), 교차로 내(2,659건), 교차로부근(1,222건)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산시는 교차로내 242건, 교차로부근 119건으로 전체 발생 교통사고 중 58.7%를 차지하고, 계룡시는 교차로내 19건, 교차로부근 10건으로 전체 47건 중 61.7%를 차지한다(논산시 52.1%, 서천군 54.7%, 홍성군 51.2%, 예산군 53.6%).

〈표 5-6〉 2022년 충남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 시 군 구 | 합계 | 터 널 안 | 교 량 위 | 고가 도로위 | 지하 차도 (도로)내 | 기타 단일로 | 교차 로내 | 교차로 횡단 보도내 | 교차로 부근 | 기타/ 불명 |
|-------------|-------|-------------|-------------|-----------|-------------------|-----------|----------|------------------|-----------|-----------|
| 합계 | 8,164 | 11 | 50 | 30 | 20 | 3,316 | 2,659 | 234 | 1,222 | 622 |
| 천안 | 2,937 | 5 | 9 | 14 | 14 | 1,234 | 851 | 79 | 506 | 225 |
| 아산 | 1,267 | 1 | 5 | 2 | 1 | 424 | 442 | 40 | 191 | 161 |
| 보령 | 331 | 1 | 2 | - | - | 151 | 107 | 15 | 40 | 15 |
| 공주 | 445 | 1 | 8 | 1 | - | 214 | 123 | 12 | 62 | 24 |
| 서산 | 615 | - | - | - | - | 174 | 242 | 19 | 119 | 61 |
| 금산 | 137 | 2 | 1 | 1 | - | 61 | 49 | 8 | 9 | 6 |

| 시 군 구 | 합계 | 터 널 안 | 교 량 위 | 고가 도로위 | 지하 차도 (도로)내 | 기타 단일로 | 교차 로내 | 교차로 횡단 보도내 | 교차로 부근 | 기타/ 불명 |
|-------------|-----|-------------|-------------|-----------|-------------------|-----------|----------|------------------|-----------|-----------|
| 태안 | 267 | - | 2 | - | - | 142 | 86 | 1 | 18 | 18 |
| 논산 | 347 | - | 5 | 3 | 1 | 113 | 127 | 19 | 54 | 25 |
| 부여 | 198 | - | 6 | 1 | 1 | 97 | 58 | 11 | 15 | 9 |
| 서천 | 274 | - | 2 | 1 | 1 | 107 | 101 | 3 | 49 | 10 |
| 청양 | 185 | - | 2 | 1 | - | 81 | 68 | 1 | 23 | 9 |
| 홍성 | 242 | - | - | 1 | - | 97 | 99 | 10 | 25 | 10 |
| 예산 | 343 | 1 | 3 | 2 | - | 136 | 126 | 1 | 58 | 16 |
| 당진 | 529 | - | 5 | 3 | 1 | 272 | 161 | 12 | 43 | 32 |
| 계룡 | 47 | - | - | - | 1 | 13 | 19 | 3 | 10 | 1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시·군·구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의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충남도 자체의 지방도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과 지자체·경찰·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합동 위험성평가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및 행정안전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충남 지방도별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합동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성 평가 대상 지방도의 선정 이후,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고 합동 위험성평가 및 분석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도로구조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시·군별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역 해소

상습정체구간 교통난은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낭비를 불러오는 현대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라 하겠다. 특히, 충청남도 도심지역, 신도시 개발지역, 베드타운 지역 등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구역 중 신호체계, 도로구조, 차선변경 등을 통해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구간 해소는 도로 신설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시·군별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도색 변경, 신호체계 불합리성 개선,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운영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구역 진단 및 원인분석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공공 및 민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이후 주민 의견수렴, 시범실시 지역 선정, 사업 시행, 개선 효과 검증 및 사업 확대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AI 기반 위치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례]

- A통신사는 교통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솔루션(T.Flow)을 개발하여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방안 제시
- 교통신호 최적화 솔루션 '티플로(T.Flow)'는 위치기반 이동통신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 정보를 이용하여 교통신호를 분석하고 최적의 신호체계를 제공
- 위치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는 통신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이동 상태 및 수단 등 위치 지능형 데이터를 제공
- 상습 정체구간인 교차로 15곳 구간에 신호체계 개선안을 만들어 교통개선 효과를 시험하여 실제 차량 통행시간이 13%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냄

[신호주기 조정으로 출퇴근 상습 정체구간 해소 사례]

- 대전경찰청은 대전시·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22년 6~9월 대전 지역 상습 교통정체 지점 10곳을 선정해 신호체계를 조정
- 신호주기를 조정한 결과,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장대네거리의 경우 1km당 평균 지체시간이 12분51초에서 10분46초로 약 2분5초(16.2%) 줄었고, 평균 통행속도(km/h)는 20.7km에서 22.5km로 8.7% 개선됨

[도로 기하구조·신호체계 조정을 통한 소통 개선 사례(경기남부 여주시)]

- 정체시간 단축, 통과속도 향상
 - 출근 시 통행속도 10.0%(22.0km/h→24.2km/h) 증가
 - 연간 운행비용 절감, 경제적 효과 21.8억 원

| 구 분 | 개선 전 | 개선 후 | 효 과 | 경제적 편익 |
|-------|------------------------|----------------------|------------------|-------------|
| 정체시간대 | 08:00 ~ 09:00 (1시간) | 08:30~09:00 (30분) | 30분 단축 | 연간 21.8억 |
| 통과 시간 | 8분 34초 | 7분 48초 | 46초 단축 | |
| 통과 속도 | 22.0km/h | 24.2km/h | 2.2km/h(10%↑) 향상 | |

▶ 좌회전 및 우회전 전용차로 추가 확보, 컬러레인 설치



(3)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취약구간 개선사업 고도화

도민 수요조사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활동강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시군별 최근 3년간 누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당진시 41명, 천안시 38명, 논산시 34명, 공주·서산시·예산군 각 31명, 보령시 28명으로 인구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할 때 군단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5-7〉 2020년~2022년 충남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합계 | 당진 | 천안 | 논산 | 공주 | 서산 | 예산 | 보령 | 아산 | 홍성 | 부여 | 서천 | 태안 | 청양 | 금산 | 계룡 |
|-----|----|----|----|----|----|----|----|----|----|----|----|----|----|----|----|
| 370 | 41 | 38 | 34 | 31 | 31 | 31 | 28 | 25 | 24 | 20 | 20 | 18 | 13 | 12 | 4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의 경우 최근 3년간 천안시 26명(17.9%), 서산·당진시 각 14명(각 9.7%), 아산시 12명(8.3%), 논산시 11명(7.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편차를 보이며, 이에 대한 시군별 원인분석이 상세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표 5-8〉 2020년~2022년 충남 노인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시군구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합계 | 비율(%) |
|-----|-------|-------|-------|-----|-------|
| 합계 | 52 | 46 | 47 | 145 | 100.0 |
| 천안시 | 10 | 8 | 8 | 26 | 17.9 |
| 아산시 | 4 | 5 | 3 | 12 | 8.3 |
| 보령시 | 3 | 3 | 4 | 10 | 6.9 |
| 공주시 | 1 | 2 | 3 | 6 | 4.1 |
| 서산시 | 7 | 4 | 3 | 14 | 9.7 |
| 금산군 | 3 | 0 | 1 | 4 | 2.8 |
| 태안군 | 2 | 1 | 3 | 6 | 4.1 |
| 논산시 | 3 | 5 | 3 | 11 | 7.6 |
| 부여군 | 2 | 5 | 3 | 10 | 6.9 |
| 서천군 | 2 | 1 | 5 | 8 | 5.5 |
| 청양군 | 2 | 2 | 0 | 4 | 2.8 |
| 홍성군 | 3 | 1 | 4 | 8 | 5.5 |
| 예산군 | 5 | 3 | 2 | 10 | 6.9 |
| 당진시 | 4 | 5 | 5 | 14 | 9.7 |
| 계룡시 | 1 | 1 | 0 | 2 | 1.4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노인 보행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최근 3년간 충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8명이고, 서산시 3명, 당진시 2명, 아산·논산시·태안군 각 1명으로 동일기간 중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총 284건이 발생하였고, 천안시 87건(30.6%), 아산시 56건(19.7%), 논산시 23건(8.1%)으로 3개 시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총 5명이고, 서산시 3명, 아산, 당진시에서 각 1명이었다.

〈표 5-9〉 2020년~2022년 충남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현황

| 시군구 | 2020 | | | 2021 | | | 2022 | | |
|-----|-------|-------|-------|-------|-------|-------|-------|-------|-------|
|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 천안시 | 21 | 0 | 22 | 32 | 0 | 33 | 34 | 0 | 36 |
| 아산시 | 13 | 1 | 13 | 19 | 0 | 19 | 24 | 0 | 27 |
| 보령시 | 10 | 0 | 10 | 3 | 0 | 3 | 8 | 0 | 8 |
| 공주시 | 5 | 0 | 5 | 6 | 0 | 6 | 6 | 0 | 7 |
| 서산시 | 5 | 2 | 3 | 5 | 0 | 5 | 10 | 1 | 9 |
| 금산군 | 2 | 0 | 2 | - | - | - | 3 | 0 | 7 |
| 태안군 | 1 | 0 | 1 | 1 | 0 | 1 | 5 | 0 | 5 |
| 논산시 | 9 | 0 | 9 | 8 | 0 | 8 | 6 | 0 | 6 |
| 부여군 | 2 | 0 | 2 | 1 | 0 | 1 | 3 | 0 | 3 |
| 서천군 | 2 | 0 | 2 | 1 | 0 | 1 | 5 | 0 | 5 |
| 청양군 | - | - | - | 1 | 0 | 1 | - | - | - |
| 홍성군 | 1 | 0 | 1 | 1 | 0 | 1 | 4 | 0 | 4 |
| 예산군 | 1 | 0 | 1 | 3 | 0 | 3 | 2 | 0 | 2 |
| 당진시 | 9 | 0 | 9 | 6 | 1 | 5 | 4 | 0 | 4 |
| 계룡시 | - | - | - | 1 | 0 | 1 | 1 | 0 | 2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별 어린이·노인 보행안전 취약구간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로환경 및 교통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도시권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요구된다.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예산 및 도, 시·군 자체 예산투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 시행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민·관·학 합동 현장답사 및 위험도 평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업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한다. 시군별 어린이·노인의 보행안전 위험지역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획일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장소별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고 공유·확산하여야 한다.

2) 사고유발 원인요소 집중 단속

(1) 지역별 전략적 음주운전 단속

도민 설문조사 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 중 음주운전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지목되었고, 지역별로는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등이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에 의한 신고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음주운전으로 음주 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단속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3년 충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총 2,920건이고, 천안시 968건(33.2%), 아산시 426건(14.6%), 당진시 279건(9.6%), 서산시 272건(9.3%)으로 4개 시 발생건수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였다.

〈표 5-10〉 최근 3년 충남 음주 교통사고 현황

| 시군구 | 2020 | 2021 | 2022 | 합계 |
|-----|-------|------|------|-------|
| 합계 | 1,108 | 915 | 897 | 2,920 |
| 천안시 | 351 | 319 | 298 | 968 |
| 아산시 | 157 | 134 | 135 | 426 |
| 보령시 | 57 | 39 | 28 | 124 |
| 공주시 | 69 | 49 | 51 | 169 |
| 서산시 | 121 | 82 | 69 | 272 |
| 금산군 | 13 | 10 | 9 | 32 |
| 태안군 | 30 | 32 | 28 | 90 |
| 논산시 | 48 | 39 | 44 | 131 |
| 부여군 | 16 | 13 | 25 | 54 |
| 서천군 | 30 | 17 | 23 | 70 |
| 청양군 | 16 | 15 | 14 | 45 |
| 홍성군 | 48 | 27 | 40 | 115 |
| 예산군 | 44 | 39 | 40 | 123 |
| 당진시 | 103 | 93 | 83 | 279 |
| 계룡시 | 5 | 7 | 10 | 22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음주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최근 3년 충남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50명이고, 서산시 11명(22%), 천안시 8명(16%), 당진시 6명(12%), 논산시·서천군 각 5명(10%)으로 5개 시·군 발생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표 5-11〉 최근 3년 충남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시군구 | 2020 | 2021 | 2022 | 합계 |
|-----|------|------|------|----|
| 합계 | 22 | 15 | 13 | 50 |
| 천안시 | 2 | 3 | 3 | 8 |
| 아산시 | 0 | 0 | 3 | 3 |
| 보령시 | 1 | 1 | 0 | 2 |
| 공주시 | 1 | 0 | 0 | 1 |
| 서산시 | 6 | 4 | 1 | 11 |
| 금산군 | 1 | 0 | 0 | 1 |
| 태안군 | 2 | 0 | 1 | 3 |
| 논산시 | 2 | 1 | 2 | 5 |
| 부여군 | 0 | 1 | 1 | 2 |
| 서천군 | 2 | 2 | 1 | 5 |
| 청양군 | 0 | 0 | 0 | 0 |
| 홍성군 | 0 | 1 | 0 | 1 |
| 예산군 | 1 | 1 | 0 | 2 |
| 당진시 | 4 | 1 | 1 | 6 |
| 계룡시 | 0 | 0 | 0 | 0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음주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음주 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고, 시군별 음주 교통사고 취약시간대를 선정하여 홍보 및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남 전체 시·군에 대한 음주운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①집중 단속 지역, ②취약시간대 집중 감시 지역, ③일반 예방 및 홍보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전략적 음주운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시군별 음주 교통사고의 발생시간대 및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집중 단속지역과 일반 예방·홍보 지역으로 구분하여 시군별로 전략적인 단속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한 가시적 홍보 효과를 높이고 집중단속 지역의 경우, 경찰서 및 지역경찰관서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월별 단속 실적과 단속 계획에 대해 집중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업체와 자영업자 대상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2) 분기별 교통사고 발생 주요 운전자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충남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 위협요인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지역수요 맞춤형 교통 활동으로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기준 충남의 교통사고(총 8,164건) 발생원인 운전자법규위반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4,755건, 58.2%), 신호위반(837건, 10.3%), 중앙선침범(499건, 6.1%), 안전거리미확보(486건, 6.0%), 교차로운행방법위반(485건, 5.9%), 직진우회전진행방해(335건, 4.1%), 보행자보호의무위반(309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군별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되는 주요 운전자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 및 예고를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교통안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표 5-12〉 2022년 운전자법규위반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시도 | 합계 | 과로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중앙침범 | 신호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일시 정지 위반 | 부당회 전 | 우선 권양보 불이행 | 진로 양보 불이행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교차로 운행방 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 무위반 | 차로 위반 (진로 변경) | 직진 우회전 진행방 해 | 철길 건널 목통과 방법 | 긴급 차피 양의 무위반 | 기타 |
|----|---------|----|---------------|---------------|-------|----------|-------------|-------------|----------|---------------|--------------|----------------|--------------------|-------------------|------------------------|-----------------------|-----------------------|-----------------------|-------|
| 합계 | 196,821 | 5 | 96 | 312 | 7,710 | 22,850 | 19,900 | 715 | 1,441 | 5 | 43 | 111,307 | 11,453 | 7,050 | 2,764 | 5,494 | 3 | 1 | 5,672 |
| 서울 | 33,698 | 1 | 17 | 12 | 750 | 3,783 | 4,447 | 38 | 252 | 1 | 2 | 19,833 | 1,081 | 1,218 | 422 | 533 | 1 | 1 | 1,306 |
| 부산 | 10,882 | - | 8 | 11 | 332 | 1,340 | 1,269 | 80 | 73 | - | 2 | 5,815 | 657 | 581 | 172 | 171 | - | - | 371 |
| 대구 | 11,102 | - | 2 | 7 | 260 | 999 | 1,368 | 41 | 108 | - | - | 6,427 | 622 | 404 | 192 | 251 | - | - | 421 |
| 인천 | 7,695 | - | 1 | 8 | 267 | 887 | 674 | 14 | 41 | 2 | 4 | 4,824 | 319 | 233 | 165 | 32 | - | - | 224 |
| 광주 | 7,122 | - | 2 | 9 | 230 | 743 | 929 | 7 | 78 | 1 | 1 | 3,966 | 512 | 203 | 176 | 129 | - | - | 136 |
| 대전 | 6,839 | - | 2 | 2 | 160 | 1,001 | 751 | 22 | 48 | - | 1 | 3,953 | 342 | 277 | 28 | 88 | - | - | 164 |
| 울산 | 3,660 | - | 3 | 3 | 167 | 478 | 453 | 9 | 22 | - | - | 1,882 | 191 | 156 | 51 | 145 | - | - | 100 |
| 세종 | 932 | - | 2 | 3 | 30 | 138 | 94 | 2 | 10 | - | - | 513 | 45 | 38 | 5 | 28 | - | - | 24 |
| 경기 | 52,964 | 1 | 22 | 62 | 1,983 | 7,025 | 5,724 | 251 | 430 | - | 8 | 29,063 | 3,579 | 1,583 | 756 | 1,054 | - | - | 1,423 |
| 강원 | 6,425 | 1 | 2 | 18 | 427 | 655 | 571 | 15 | 27 | 1 | 6 | 3,363 | 466 | 281 | 108 | 327 | - | - | 157 |
| 충북 | 7,644 | - | 7 | 19 | 375 | 870 | 730 | 15 | 71 | - | 5 | 4,023 | 643 | 221 | 107 | 371 | - | - | 187 |
| 충남 | 8,163 | - | 4 | 35 | 499 | 837 | 486 | 23 | 54 | - | 3 | 4,755 | 485 | 309 | 121 | 335 | - | - | 217 |
| 전북 | 5,679 | 1 | 3 | 13 | 371 | 868 | 292 | 21 | 70 | - | 3 | 2,972 | 228 | 320 | 74 | 287 | - | - | 156 |
| 전남 | 8,335 | - | 10 | 31 | 473 | 769 | 452 | 57 | 36 | - | 3 | 4,908 | 638 | 173 | 109 | 507 | - | - | 169 |
| 경북 | 11,035 | - | 2 | 42 | 670 | 936 | 608 | 76 | 47 | - | 1 | 6,679 | 726 | 350 | 127 | 503 | 2 | - | 266 |
| 경남 | 10,607 | 1 | 8 | 23 | 543 | 1,211 | 636 | 11 | 50 | - | 1 | 6,263 | 704 | 487 | 109 | 317 | - | - | 243 |
| 제주 | 4,039 | - | 1 | 14 | 173 | 310 | 416 | 33 | 24 | - | 3 | 2,068 | 215 | 216 | 42 | 416 | - | - | 108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시도, 시·군·구별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재구성

2022년 기준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 사고요인 행위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사고요인이 되는 행위 중 과속단속이 1,256,908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284,479건, 음주관련 7,530건, 난폭운전 2,806건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

인카메라를 통한 단속행위가 주로 신호와 과속 단속에 집중해 있고, 신호·과속 단속 건수의 급증도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추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주요 사고요인인 운전자법 규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요구된다.

〈표 5-13〉 사고요인행위 단속현황

(단위: 건)

| 구분 | 사고요인 행위 | | | | | | | |
|------|-----------|-------|-------|-------|--------|-----------|-----------|-------|
| | 계 | 음주면허 | | 무면허 | 중앙선 침범 | 신호 (무인포함) | 과속 (무인포함) | 난폭 |
| | | 정지 | 취소 | | | | | |
| 2019 | 1,129,909 | 3,219 | 5,795 | 3,198 | 2,646 | 139,083 | 972,459 | 3,509 |
| 2020 | 971,566 | 1,820 | 4,556 | 2,350 | 2,308 | 114,440 | 842,754 | 3,338 |
| 2021 | 1,096,635 | 1,502 | 5,413 | 2,203 | 2,086 | 121,273 | 961,107 | 3,051 |
| 2022 | 1,555,757 | 1,824 | 5,706 | 2,566 | 1,468 | 284,479 | 1,256,908 | 2,806 |

자료: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분기별 집중 단속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고와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 하고 집중 단속기간에는 경찰 유관단체와의 합동 단속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시적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위험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및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고위험 위반행위 근절 분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시군별 사고 발생 원인에 따른 연중 단속 계획을 수립 하고, 합동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및 홍보와 계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 다. 가시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단속은 물론 언론 홍보활동을 통한 예고, 계도 및 단속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사고 발생 공간기반 교통안전 행동 개선

(1)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맞춤형 체계적 교통안전 교육

2020년~2022년 충남 노인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에서 가장 빈번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14〉 2020년~2022년 충남 노인교통사고 발생 현황

| 시군구 | 2020 | | | 2021 | | | 2022 | | |
|-----|-------|-------|-------|-------|-------|-------|-------|-------|-------|
|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 합계 | 1,869 | 133 | 2,002 | 1,730 | 116 | 1,882 | 1,772 | 121 | 1,976 |
| 천안시 | 346 | 15 | 361 | 331 | 10 | 363 | 354 | 13 | 381 |
| 아산시 | 152 | 7 | 167 | 164 | 12 | 176 | 176 | 6 | 203 |
| 보령시 | 127 | 6 | 129 | 140 | 11 | 151 | 114 | 11 | 135 |
| 공주시 | 139 | 15 | 143 | 123 | 9 | 127 | 115 | 7 | 129 |
| 서산시 | 154 | 14 | 176 | 144 | 7 | 151 | 149 | 10 | 162 |
| 금산군 | 48 | 5 | 54 | 42 | 2 | 50 | 73 | 5 | 80 |
| 태안군 | 100 | 8 | 109 | 86 | 4 | 99 | 85 | 6 | 97 |
| 논산시 | 104 | 11 | 117 | 119 | 12 | 126 | 107 | 11 | 115 |
| 부여군 | 91 | 5 | 98 | 76 | 8 | 82 | 73 | 7 | 87 |
| 서천군 | 113 | 6 | 117 | 111 | 7 | 136 | 138 | 7 | 165 |
| 청양군 | 71 | 5 | 79 | 60 | 4 | 70 | 81 | 4 | 97 |
| 홍성군 | 96 | 8 | 95 | 74 | 2 | 81 | 60 | 14 | 50 |
| 예산군 | 136 | 11 | 153 | 104 | 10 | 109 | 126 | 10 | 149 |
| 당진시 | 177 | 15 | 189 | 145 | 16 | 150 | 111 | 10 | 113 |
| 계룡시 | 15 | 2 | 15 | 11 | 2 | 11 | 10 | 0 | 13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20년 1,869건(사망 133명), 2021년 1,730건(사망 116명), 2022년 1,772건(사망 121명)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은 총 1,165건이고, 천안시 388건, 아산시 201건, 당진시 93건, 서산시 84건, 공주시 77건이었다.

〈표 5-15〉 2020년~2022년 충남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 시군구 | 2020 | | | 2021 | | | 2022 | | |
|-----|-------|-------|-------|-------|-------|-------|-------|-------|-------|
|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사고[건] | 사망[명] | 부상[명] |
| 합계 | 372 | 4 | 473 | 382 | 3 | 479 | 411 | 1 | 534 |
| 천안시 | 115 | 0 | 150 | 138 | 0 | 174 | 135 | 0 | 165 |
| 아산시 | 58 | 1 | 74 | 66 | 0 | 70 | 77 | 0 | 94 |
| 보령시 | 21 | 0 | 23 | 11 | 0 | 13 | 18 | 0 | 22 |
| 공주시 | 26 | 0 | 34 | 24 | 0 | 33 | 27 | 0 | 37 |
| 서산시 | 30 | 2 | 33 | 26 | 0 | 34 | 28 | 1 | 49 |
| 금산군 | 3 | 0 | 3 | 4 | 0 | 5 | 5 | 0 | 9 |
| 태안군 | 19 | 0 | 30 | 17 | 1 | 24 | 19 | 0 | 21 |
| 논산시 | 21 | 1 | 29 | 20 | 0 | 24 | 24 | 0 | 32 |
| 부여군 | 10 | 0 | 12 | 5 | 0 | 7 | 9 | 0 | 11 |
| 서천군 | 5 | 0 | 5 | 6 | 0 | 8 | 11 | 0 | 13 |
| 청양군 | 3 | 0 | 4 | 8 | 0 | 11 | 4 | 0 | 6 |
| 홍성군 | 6 | 0 | 8 | 15 | 0 | 23 | 10 | 0 | 13 |
| 예산군 | 15 | 0 | 20 | 11 | 0 | 15 | 14 | 0 | 18 |
| 당진시 | 39 | 0 | 47 | 28 | 2 | 34 | 26 | 0 | 39 |
| 계룡시 | 1 | 0 | 1 | 3 | 0 | 4 | 4 | 0 | 5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신종 교통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22년 충남 전체 70건이 발생했고, 천안시(38건)와 아산시(11건)에서 전체 PM 교통사고의 70%가 발생하는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유사하게 2022년 이륜차 사고는 충남 전체 529건으로 천안시(196건), 아산시(63건), 논산시(43건), 공주시(39건), 서산시(34건), 예산군(34건) 순이고,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29명으로 천안시 8명, 논산시 4명, 당진시 3명, 아산·보령·공주·서산·홍성·예산이 각각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화물차 사고는 충남 전체 1,248건으로 천안시(310건), 아산시(181건), 서산시(91건), 공주시(99건), 당진시(79건) 순이고, 사고 사망자는 전체 50명으로 천안시 10명, 홍성군 8명, 논산시와 예산군이 각각 5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6〉 2022년 충남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구분 | | 합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이륜차 | 사륜 오토바이 (ATV) | 원동기 장치자 전거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 치(PM) | 건설 기계 | 농기계 | 기타 /불명 |
|----|----|-------|-------|-----|-------|-----|-----|---------------------|------------------|-----|---------------------|----------|-----|-----------|
| 합계 | 사고 | 8,164 | 5,459 | 339 | 1,248 | 61 | 529 | 25 | 116 | 90 | 70 | 109 | 37 | 81 |
| | 사망 | 230 | 106 | 13 | 50 | 4 | 29 | 2 | 7 | 6 | 0 | 6 | 7 | 0 |
| 천안 | 사고 | 2,937 | 2,071 | 144 | 310 | 17 | 196 | 3 | 50 | 33 | 38 | 26 | 4 | 45 |
| | 사망 | 47 | 22 | 4 | 10 | 1 | 8 | 0 | 0 | 1 | 0 | 1 | 0 | 0 |
| 아산 | 사고 | 1,267 | 878 | 55 | 181 | 14 | 63 | - | 9 | 8 | 11 | 32 | - | 16 |
| | 사망 | 21 | 12 | 3 | 3 | 0 | 2 | - | 1 | 0 | 0 | 0 | - | 0 |
| 보령 | 사고 | 331 | 224 | 12 | 61 | 1 | 20 | 2 | 2 | 6 | - | - | - | 3 |
| | 사망 | 20 | 9 | 1 | 4 | 1 | 2 | 0 | 1 | 2 | - | - | - | 0 |
| 공주 | 사고 | 445 | 278 | 20 | 79 | 2 | 39 | 2 | 9 | 7 | 4 | 3 | 2 | - |
| | 사망 | 13 | 5 | 1 | 2 | 1 | 2 | 1 | 0 | 0 | 0 | 1 | 0 | - |
| 서산 | 사고 | 615 | 427 | 27 | 91 | 6 | 34 | 1 | 8 | 4 | 2 | 7 | 4 | 4 |
| | 사망 | 13 | 8 | 0 | 1 | 1 | 2 | 0 | 0 | 0 | 0 | 0 | 1 | 0 |
| 금산 | 사고 | 137 | 86 | 5 | 25 | 1 | 10 | - | 2 | 3 | - | 4 | 1 | - |
| | 사망 | 6 | 4 | 0 | 1 | 0 | 1 | - | 0 | 0 | - | 0 | 0 | - |
| 태안 | 사고 | 267 | 165 | 8 | 54 | 2 | 15 | 8 | 1 | 2 | - | 5 | 3 | 4 |
| | 사망 | 8 | 3 | 0 | 1 | 0 | 0 | 0 | 0 | 0 | - | 3 | 1 | 0 |
| 논산 | 사고 | 347 | 200 | 11 | 66 | 1 | 43 | 1 | 10 | 7 | 4 | 1 | - | 3 |
| | 사망 | 18 | 8 | 0 | 5 | 0 | 4 | 0 | 0 | 1 | 0 | 0 | - | 0 |

| 구분 | 합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이륜차 | 사물 오토바이 (ATV) | 원동기 장치자 전거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 치(PM) | 건설 기계 | 농기계 | 기타 /불명 |
|----|----|-----|-----|-----|-----|-----|---------------------|------------------|-----|---------------------|----------|-----|-----------|
| 부여 | 사고 | 198 | 108 | 4 | 55 | - | 15 | 1 | 3 | 3 | 3 | 4 | 1 |
| | 사망 | 9 | 4 | 1 | 2 | - | 0 | 0 | 1 | 0 | 0 | 0 | 1 |
| 서천 | 사고 | 274 | 163 | 8 | 65 | 2 | 15 | 1 | 5 | 7 | - | 2 | 6 |
| | 사망 | 9 | 4 | 0 | 2 | 0 | 0 | 0 | 1 | 1 | - | 0 | 1 |
| 청양 | 사고 | 185 | 98 | 6 | 48 | 1 | 13 | - | 6 | 1 | 3 | 5 | 4 |
| | 사망 | 6 | 2 | 1 | 2 | 0 | 0 | - | 0 | 0 | 0 | 0 | 1 |
| 홍성 | 사고 | 242 | 149 | 9 | 60 | 1 | 15 | 3 | 1 | - | - | 1 | 2 |
| | 사망 | 20 | 9 | 0 | 8 | 0 | 2 | 1 | 0 | - | - | 0 | 0 |
| 예산 | 사고 | 343 | 199 | 10 | 70 | 1 | 34 | 2 | 8 | 7 | - | 5 | 5 |
| | 사망 | 18 | 6 | 0 | 5 | 0 | 2 | 0 | 2 | 1 | - | 1 | 1 |
| 당진 | 사고 | 529 | 379 | 15 | 79 | 12 | 15 | 1 | 2 | 2 | 4 | 13 | 5 |
| | 사망 | 20 | 10 | 2 | 3 | 0 | 3 | 0 | 1 | 0 | 0 | 0 | 1 |
| 계룡 | 사고 | 47 | 34 | 5 | 4 | - | 2 | - | - | - | 1 | 1 | - |
| | 사망 | 2 | 0 | 0 | 1 | - | 1 | - | - | - | 0 | 0 | -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차종별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2022년 충남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30명으로 천안시(47명), 아산시(21명), 홍성군·보령시·당진시(각 20명), 논산시·예산군(각 18명)으로 나타난다. 차종별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은 시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비해, 화물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에 의한 사고 발생의 경우 특정 시·군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교육’은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하고 이를 통한 효과성을 제고한 사례라 하겠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기준 충청남도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11건(사망자 1명, 부상자 534명)이고 사고발생은 천안시 135건, 아산시 77건, 서산시 28건, 공주시 27건, 당진시 26건, 논산시 24건 순이다. 따라서 1단계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천안, 아산을 집중 실시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2단계로 사고 빈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어린이가 직접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사각지대 등을 확인하는 체험교육 실시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과 관련 법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화물차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시·군별 운송업체 및 화물차 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노인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신체적으로 방어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의 보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노인의 경우, 행동반경이 제한적이고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일반 주민의 경각심 부족과 보호 목표의 공유 부재로 인하여 교통안전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도민 요구도 조사에서도 해당 지역의 보호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가시적인 사업추진으로 자치경찰의 민주성 및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통안전 홍보·교육 캠페인을 일회성이 아닌 예산 확보를 통한 전략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충남 스쿨존 사고의 법규위반률 보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12건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7〉 2022년 충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시군구 | 구분 | 합계 | 안전운전의 무불이행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차로위반 (진로변경) | 기타 | 신호위반 |
|-----|-------|----|---------------|---------------|----------------|----|------|
| 합계 | 사고[건] | 26 | 5 | 12 | 1 | 4 | 4 |
| | 사망[명] | 0 | 0 | 0 | 0 | 0 | 0 |
| | 부상[명] | 27 | 5 | 12 | 1 | 4 | 5 |
| 천안 | 사고[건] | 8 | 2 | 4 | - | 1 | 1 |
| | 사망[명] | 0 | 0 | 0 | - | 0 | 0 |
| | 부상[명] | 9 | 2 | 4 | - | 1 | 2 |
| 아산 | 사고[건] | 3 | - | 2 | - | - | 1 |
| | 사망[명] | 0 | - | 0 | - | - | 0 |
| | 부상[명] | 3 | - | 2 | - | - | 1 |
| 보령 | 사고[건] | 1 | - | 1 | - | - | - |
| | 사망[명] | 0 | - | 0 | - | - | - |
| | 부상[명] | 1 | - | 1 | - | - | - |
| 공주 | 사고[건] | 2 | 1 | - | - | 1 | - |
| | 사망[명] | 0 | 0 | - | - | 0 | - |
| | 부상[명] | 2 | 1 | - | - | 1 | - |
| 서산 | 사고[건] | 1 | 1 | - | - | - | - |
| | 사망[명] | 0 | 0 | - | - | - | - |
| | 부상[명] | 1 | 1 | - | - | - | - |
| 금산 | 사고[건] | - | - | - | - | - | - |
| | 사망[명] | - | - | - | - | - | - |
| | 부상[명] | - | - | - | - | - | - |

| 시군구 | 구분 | 합계 | 안전운전의 무불이행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차로위반 (진로변경) | 기타 | 신호위반 |
|-----|-------|----|---------------|---------------|----------------|----|------|
| 논산 | 사고[건] | 1 | 1 | - | - | - | - |
| | 사망[명] | 0 | 0 | - | - | - | - |
| | 부상[명] | 1 | 1 | - | - | - | - |
| 부여 | 사고[건] | 2 | - | - | - | 2 | - |
| | 사망[명] | 0 | - | - | - | 0 | - |
| | 부상[명] | 2 | - | - | - | 2 | - |
| 서천 | 사고[건] | 2 | - | 2 | - | - | - |
| | 사망[명] | 0 | - | 0 | - | - | - |
| | 부상[명] | 2 | - | 2 | - | - | - |
| 청양 | 사고[건] | 1 | - | - | 1 | - | - |
| | 사망[명] | 0 | - | - | 0 | - | - |
| | 부상[명] | 1 | - | - | 1 | - | - |
| 홍성 | 사고[건] | 1 | - | - | - | - | 1 |
| | 사망[명] | 0 | - | - | - | - | 0 |
| | 부상[명] | 1 | - | - | - | - | 1 |
| 예산 | 사고[건] | 1 | - | 1 | - | - | - |
| | 사망[명] | 0 | - | 0 | - | - | - |
| | 부상[명] | 1 | - | 1 | - | - | - |
| 당진 | 사고[건] | 3 | - | 2 | - | - | 1 |
| | 사망[명] | 0 | - | 0 | - | - | 0 |
| | 부상[명] | 3 | - | 2 | - | - | 1 |
| 계룡 | 사고[건] | - | - | - | - | - | - |
| | 사망[명] | - | - | - | - | - | - |
| | 부상[명] | - | - | - | - | - | - |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재구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홍보·교육 캠페인을 위한 유관 민간단체와의 상시 협업 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자체 예산 투입을 통해 연중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탈권위적 조직운영과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1) 시민참여형 공동치안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보하면, 참여 의지는 강화된다(이재완, 2014). 즉 주민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제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해 주민 참여와 경찰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방안으로써 자치경찰 제도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강조될 수 있다(김명수, 2017).

자치경찰제 시행 2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주요 정책 실행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여 그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실시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4%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 11.7% 보다는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제도 취지와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성별, 연령, 지역 및 직업군에 따라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취득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이 자치경찰제도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를 알리고 향후 공동체 치안활동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된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지역의 안전도에 대한 불안감은 높으나 치안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산시, 당진시에서는 공동체 치안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5.8%, 47.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성과 공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1) 주민 수요조사 실시

자치경찰제도가 맞춤형 치안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사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생활안전, 지역경비로 구분되는데,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기존 국가 경찰제도하의 주민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수혜자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면,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의 주민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치안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치안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등 시민의 의견을 범죄 예방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 사무 분야에서 주민의 요구하는 치안활동과 지역의 불안요인 및 해결방안, 기타 제안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읍면동 민원실, 각 부서별 사무실, 지구대, 파출소 등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하거나 홈페이지 게시, 문자 전송 등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응답자의 범위 확장과 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로 인하여 자치경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도 제

고와 활동 및 업무의 범위를 알리는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주민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신규 수요의 발굴과 중장기적으로는 자료의 축적을 통해 인식변화 및 요구수준의 변화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2) 주민참여 조직을 활용한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안전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치안 서비스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김지영·박재희, 2022).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치안 문제를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중심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주민참여 플랫폼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기존 주민참여조직들이 안전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자치경찰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지역의 경찰과 함께 지역 치안 정책을 기획하고 위협 요소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배양할 수 있다. 현재 치안 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플랫폼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마을공동체 단위 구성은 잘 되어 있으나, 치안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마을의 자치 역량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읍·면·동 근린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조직이자 다양한 주민조직에 대한 지원 기구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지 등이 가장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연계하는 사무의 발굴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모임과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읍·면·동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핵심적인 추진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 협의체, 아동·청소년 협의체, 마을 공동체 협의체, 자원봉사 단체 등 기존 주민참여 조직과의 연계방안의 고려도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단체,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지역별 주민자치조직, 치안실무협의회 등 주민참여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중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주민참여 조직이 자율방범 활동, 지역안전순찰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기반 협력사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등 정책 시행 전 과정에서 정보 전달과 어려움의 상호 공유도 가능하다.

(3)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자치경찰 정책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치안 활동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주민참여 조직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 내기위해 주민자치조직의 대표자를 포함한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체 등 주민참여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치안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주민참여조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 활동의 정기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우수 조직으로 평가된 경우 감사패, 상장, 유니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 참여 주민들의 소속감을 키워 지속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치안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 활동은 각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어르신 범죄 예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통장 회의 방문을 통해 자치경찰에서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치경찰 정책 공모사업, 주민자치조직 지원 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와 주민자치조직 간 협력 MOU 체결,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지원 마련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는 독립적 감찰관을 설치하여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내부적 통제 방안과 지역시민단체, 지역언론, 지방의회의 모니터링,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외부적 통제 방안 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 시책을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기관 간 협력의 실질적 이행 관리체계 구축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시각은 더 이상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대안적 정책 수단으로써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치안정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관 간 정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단위조직 사이의 칸막이가 존재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정보 단절과 분절적 정책결정이 치안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으나 협업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필요성 인식만으로는 기존의 관행적 틀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참여기관이 공동의 문제의식이나 목표를 공유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간 역량과 자원을 보완하여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안전이라는 가치를 산출 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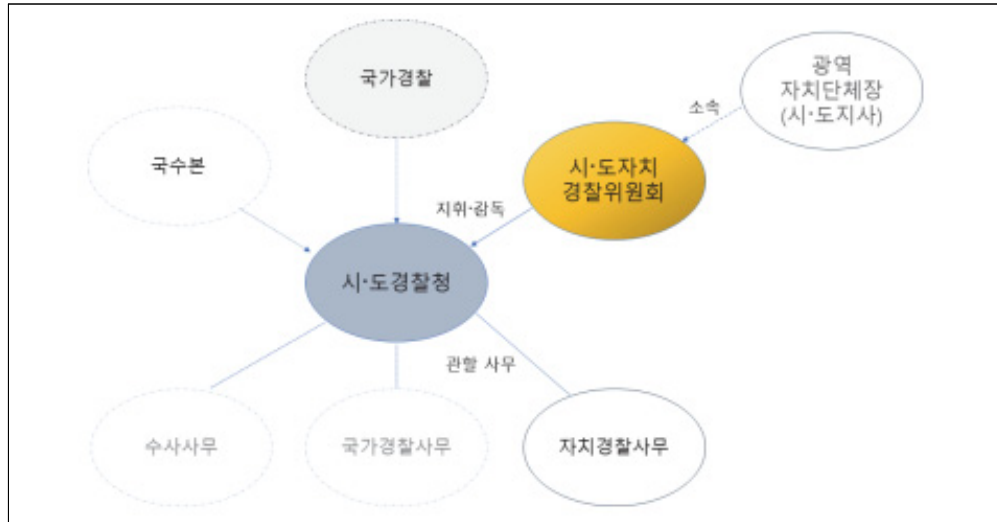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사무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제공과 직결되며 이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 도입의 초창기에는 국가경찰 중심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사무의 중복이 부득이 한 것이며,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경찰 사무 배분에서 오는 가외성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업무를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사무 간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활안전과 교통관리가 수사동이나 행사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대도시 및 도농복합지역과 달리 생활안전과 교통관리가 수사 활동이나 행사관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구 저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순찰,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범죄예방 진단 활동(55.3%), 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지원, 지역사회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12.6%)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는 법규위반(41.1%), 교통안전 시설개선(27.0%) 등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과 신속 수사(41.3%),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25.4%)를 필요한 사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및 도농복합지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간분포가 넓고 인구가 적으며 고령화가 심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경찰 사무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의 발굴이 중요하며, 주민의 거주지역 유형별로 자치경찰 시책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지역의 경우 농산물 도난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농협의 핫라인 구축이 고려될 수 있다. 각 지역별 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하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구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서로 업무를 떠넘긴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는 안전의 영역에서 치안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치안행정은 안전·복지·주거환경의 영역에서 지방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시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복지행정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무 추진이 필요하며, 안전 및 도시계획·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방행정 사무와 연계를 통하여 안전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등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5-1] 지자체장-자치경찰위원회-국가경찰의 관계

현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서는 기초지자체의 경찰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지 못하는 데 따른 체감형 사무의 단절이 발생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광역수준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는 각 시도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정착하는 단계에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등 주요한 정책 행위자들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과 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자치경찰제도상의 주민참여 조직은 광역 혹은 시군단위 치안협의회나 자치경찰 실무위원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는 자율방범대 조례가 시군구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으나 실제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국가경찰 사무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질적인 자치경찰 사무의 방향성을 국가차원이 아닌 보다 미시적인 공동체 단위 수준과 연계하여 지역의 치안과 안전 사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담당할 수 있도록 진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치안협의회 역할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 단위 치안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 지구대·파출소, 소방서, 시군청이 연계하는 충남 치안협의회로 확대하여 자치경찰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정착하는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지방행정 연계활용 업무 발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 주체로서 도 경찰청, 지자체, 민·관·학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보호를 위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치안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협력에 기반한 조례 개정 및 범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요구된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지자체의 예산 수립 및 사업 집행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방식을 활용한 안전도시 구축 사업에 자치경찰이 참여함으로써 치안 서비스의 보완적인 제공과 함께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는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 및 바닥 신호등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생활안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치경찰 시책은 유흥시설 점검, 불법풍속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여름철 해수욕장 범죄예방활동

동 및 다중운집 인원관리, 주택단지와 변화가의 순찰강화 및 범죄 방지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협력 등이 있다.

아동·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는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소외계층 복지와 치안 사각지대에서의 서비스 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아동보호 중간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고 시·도의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실무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중요하다. 해당 센터 실무자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업을 통한 신속 대응, 철저한 사후관리(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 출동 후 바로 분리 조치, 24시간 현장 대응팀 공동 운영)가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의료, 심리 등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해바라기 센터 설치, 안심귀가 서비스, 공중화장실 안심 벨 설치 운영 등의 시책이 필요하다. 어르신 보호와 관련하여 지역안전순찰과 연계를 통한 어르신 치안문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소외된 1인 가구 어르신들은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쉬우므로 지자체·민간협력단체·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어르신 보호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신질환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효과적 대응이 요청되며 고도화된 응급 지원인력의 확보를 위한 체계로서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절차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 내 교통안전 활동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계로 단속 위주의 적발에서 교통안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의 역할을 전환할 수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등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시설 및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도 경찰청과 도 교통건설과, 교육청 안전담당 부서와의 협업도 필요할 것이다.

(3) 사고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사무국 차원에서 경찰 활동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경찰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통계, 교통관리, 112 통합시스템상 정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자치경찰 정책 및 치안 서비스 제공 방향과 명확히 합치하며, 정책발굴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와 범죄는 무작위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핫스팟은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나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스팟이 대체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즉 경찰활동의 초점을 개인에 맞추게 되면 지역사회 인구 변화에 따라 전략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지만 장소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잦은 전략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기반의 치안행정 구현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이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가 아닌 경찰 본연의 업무 개념과 절차를 계승·발전하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절차(이동규, 2020)로서 자치경찰이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112 통합시스템의 관련정보는 경찰청 본청에서 자체관리하고 있어 이를 자치경찰위원회와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치안행정 서비스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주관적 수요 파악 못지않게 객관적 사고 발생과 신고 데이터의 활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고발생과 신고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다발지역을 찾아내고, 다양한 위험요인 자료와 상호 연계하여 사고원인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데이터 상에 감추어진 유용한 경향을 파악하여 사업추진방향의 설정과 예산 투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단위에서 통제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법적 허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충남 지역 내 사고 신고데이터와 발생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 협조를 도와 도경찰청 최고의사결정 수준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실무 단위의 데이터 활용 공동이용 체계를 명문화할 수 있다.

(4) 기관 간 협력사무 이행 협의체 구성

기존 행정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협력 사무의 발굴이 요구되나, 각 기관의 사무 범위 충돌 우려로 일선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질 개선과 행정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연계협력 사무의 발굴과 이행을 위한 기관간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이 요구된다.

도 관할 사무범위 내에서 운영가능한 자치경찰위원회와 도(시군)-경찰청(지구대·파출소)-의회(도·시군)이 연계하여 협력사무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의제를 발굴 및 제안하고, 협력사무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발굴가능한 사업은 교통 관련 택시불편, 버스 무정차, 불법주차, 차량 방치,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관리 및

단속, 노래방 주류보관, 유기견 동물학대, 쓰레기 투기 소각, 담배꽂초 투기, 동물 사체 처리 등 행정적 처분과 형사단속 범위가 중첩되어 개별 관리되는 분야로 생활민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 참여자 간 협업의 목적에 대한 공유와 합의에 기반하도록 기관 및 부서의 고유 목적사업과 부합되는 협업사업을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성과를 통해 보이고자 하는 비전이 명확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협업 추진단계에서는 참여자 간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고 조정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마련이 필요하다. 소통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양을 넘어 소통을 품질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소통방식과 채널을 마련하고 의사소통 매뉴얼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기관 간 신뢰 확보가 전제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협업 참여자 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권한, 역할의 명확성이 협업 속 분업을 원활히 진행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나 주관하는 기관과 협조하는 기관의 담당자들 간 협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차이로 인해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기관장의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각 기관이 주도적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6 장

결론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1. 결론 및 정책제언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지역분산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융합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치안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지방경찰청의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버려 상당한 권한을 경찰청에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별도 경찰기관 설치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인력 이관 없이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실적인 업무수행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영역은 자치경찰의 정책수립과 통제, 국가경찰과의 조정 등으로 구성되나 자치경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의 모습은 국가직 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로 인식되어 사도의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약 51% 이상의 사무를 기준으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재분류함으로써 지구대·파출소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지역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권한의 측면에서도 지역 주민 대표인 시도지사 권한의 과도한 제약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시도지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형식적 임용권에 따른 지휘·감독권의 한계가 나타났다. 국가 재정지원 범위와 규모 등이 불명확하고 사무이양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국고보조금 형식의 국비 지원은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의 제한으로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자치경찰제의 운영 모델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의 모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그리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로 정리될 수 있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요구된다. 환경·시설의 개선 측면에서 각 공간의 특성에 대응한 예방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적 접근통제 및 감시와 영역성의 강화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첨단기술 및 정보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며 세부적인 정책의 마련과 주민의 수요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정책활용을 향상시키고 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곁에서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경찰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치안수요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반영을 통해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선정방식을 다각화 하여 지역주민을 통한 참여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단위에서의 치안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협력에 기반한 범죄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조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시 된다. 무엇보다 국가경찰의 시설·인력·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일원화에서 이원화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충남자치경찰제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구상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제약과 한계로 나타난 부분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무엇보다 제도적 측면의 한계로서 현재의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사항은 제도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밀접한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과 과제들의 제시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제약적 상황을 넘어 이원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논의와 보완연구가 필요시 된다.

데이터의 한계로 정리된 자료와 데이터들은 경찰청을 통해 자료를 획득 할 수 밖에 없었으나 경찰과 관련한 데이터의 구체적 공개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는 내부자료로 통계적 공신력을 확인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현실적으로 협의에 의해 공개가능한 부분만의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어 지역의 현황과 여건을 통한 특성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 등을 통한 충남의 현실을 비교하지 못한 것은 향후 제도의 운영과정에 보다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식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인식조사를 통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제의 낮은 이해수준에서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문제와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그 핵심을 벗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인식도의 변화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연구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경찰법연구 3.1 (2005): 62-91.
- 고인종, 강영훈.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Crisisonomy 11.1 (2015): 227-245.
- 고현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국가법연구 14.3 (2018): 79-101.
- 권오성, 우하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안전 거버넌스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22)
- 기정훈. “도시의 인구특성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27.1 (2015): 107-124.
- 김기갑.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9.1 (2019): 133-166.
- 김기갑. “일원화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조사.” 한국경찰연구 19.4 (2020): 3-20.
- 김광주. “고객지향행정을 위한 도시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 3.4 (2000): 50-62.
- 김남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법적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8.3 (2018): 3-37.
- 김만수, 라광현. “자치경찰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형사정책 상의 혁신에 대한 시사점.” 치안정책연구 36.3 (2022): 41-68.
- 김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공공정책연구 31.1 (2014):

253-284.

김순은, “자치경찰제 출범의 의의와 향후과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전문가 기고’, 2021. 2. 5.

김영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 (2017): 107-116.

김영식.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을 기대하며.” 월간 공공정책 201.- (2022): 16-18.

김원중.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청의 변화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9.3 (2009): 101-126.

김원중.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안)에 관한 지방자치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8.1 (2018): 343-364.

김원중. “일원제 자치경찰제도 도입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0.3 (2020): 311-336.

김원중.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3 (2021): 325-353.

김지영, 박재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초기 운영의 쟁점 분석.” 지방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한국지방행정학회. (2022)

김학경, 심희섭. “광역단위 지방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영국경찰의 예산조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2 (2017): 111-119.

남재성.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국가경찰관들의 인식.” 경찰학논총 5.2 (2010): 379-417. 서울지역 경찰관을 중심으로.

류지태. “국가배상법 제6조의 해석 -대상판결: 대판 1994. 1. 11, 92다 29528; 1994. 12. 9, 94다38137; 1995. 2. 24, 94다57671 판결-.” 판례연구

- 9.- (1998): 81-105.
- 박병욱, 이상훈. “자치경찰시대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 : 자치경찰의 조직, 권한, 임무(사무)의 측면에서.” 경찰법연구 19.2 (2021): 35-80.
- 박재희.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 박준휘, 안성훈, 박준희, 고가영, 이형근, 최성락, 강용길, 유주성, 장일식.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677.
- 박준휘.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개선 방안.” 월간 공공정책 201.- (2022): 11-15.
- 박현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의 일선 경찰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일선 경찰관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6.1 (2007): 35-78.
- 배득중. “한국행정의 수요측면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6.- (1996): 233-253.
- 배미란.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주로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4.2 (2021): 123-153.
- 설계경.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73.2 (2016): 291-311.
- 성수영, 김상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2019): 573-580.
- 신현기, 이상열, 남재성, 양재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7).
- 안영진,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재고”, 『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2014.

- 양영철. “지방자치 거버넌스 : 참여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실패에 관한 연구-정책참여자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8.2 (2008): 365-399.
- 오세덕, “행정수요의 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30.1 (1995): 213-228.
- 유경상 외. “빅데이터와 교통정책의 연계 방향.”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2016)
- 윤재풍. “치안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토지행정학회논문집 6.1 (1997): 137-164.
- 이규호. “지역맞춤형 실질적 자치경찰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법학연구 88. (2022): 149-166.
- 이상훈. (2022),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2. 3. 30: 50-69.
- 장민규, 류준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경찰관들의 인식 연구.” 치안정책연구 34.4 (2020): 341-374.
- 정영아, 김윤지.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에 반응하는가?: 2020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분야별 예산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1 (2022): 1-22.
- 정용문. “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 확대신고 수사권도 부여.” 세계도시동향. 서울연구원. (2019)
- 조강원.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0.5 (2003): 35-73.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 행정판례연구 22.2 (2017): 305-350.


- 조성호,이행준, 조승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행정수요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지역정책연구 31.2 (2020): 177-220.
- 진영호, “지방행정 행정수요 파악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최우용. “분권화시대의 지방의회 관련법제의 개정방안.” 공법학연구. 5.2 (2004): 493-518.
- 최승원, “자치체경찰의 도입을 위한 몇가지 검토”, 『공법연구』 제25권 제3호, 1997.
- 최철호.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14.3 (2014): 447-466.
- 하민지, 2019.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주요 쟁점. G-Brief 제33호.
- 하민지, 최진화. “경상남도 공무원 직무역량 진단을 통한 교육훈련 방향 연구.”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1): 1-113.
- 한민경, 박원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 115.- (2018): 271-304.
- 황문규. “현 시점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과 과제.” 한국경찰연구 17.3 (2018): 249-280.
- 황문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경찰법연구 17.1 (2019): 95-119.
- 황문규. “자치경찰조직과 인사: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중심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 105-130 .
- Thurman, Q. C. & Reisig, M. D. 1996. Community-Oriented Research in an Era of Community-Oriented Polici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9(5): 570-586.

- McEwen, T., Spence, D., Wolff, R., Wartell, J. & Webster, B. 2003.
Call Management and Community Policing.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 Bennett, R. R. 2004. Calling for Service : Mobilization of the Police
Across Sociocultural Environments.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5(1): 25-41.
- Klinger, D. A. & Bridges, G. S. 1997. Measurement Error in Calls-
for-service as an Indicator of Crime. Criminology. 35(4): 705-726.
- Sherman, L. W., Gartin, P. R. & Buerger, M. E. 1989. Hot Spots of
Predatory Crime, Criminology. 27(1): 27-55.
- Bayley, D. H. 1985. Patterns of Policing. New Brunswick., N. J. :
Rutgers University Press.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록

1. 도민 치안체감도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도민 치안체감도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생활안전,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치안체감도 향상요인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예산 배분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 주셔서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작성되고 오직 통계분석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서 보호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연구책임: 충 남 연 구 원 사회통합연구실 고승희

041)840-1231, kosh@cni.re.kr

1. 응답자 일반

1-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 ② 남

1-2. 귀하의 연령은?

- ① 만19세 이하 ② 만20-29세 ③ 만30-39세 ④ 만40-49세
⑤ 만50-59세 ⑥ 만60-69세 ⑦ 만70세 이상

1-3. 귀하의 학력은?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⑥ 기타()

1-4. 귀하의 직업은?

- ① 회사원 ② 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 ⑤ 공무원 ⑥ 농림축산어업
⑦ 무직 ⑧ 기타

1-5. 귀하의 거주시군은?

-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1-6 귀하의 거주지역 특성은?

- ① 도시중심지역 ② 도시주변지역 ③ 농촌지역 ④ 어촌지역
⑤ 산촌지역 ⑥ 섬지역 ⑦ 공장밀집지역 ⑧ 기타지역

1-7. 귀하께서 충남에 거주한 기간은?

- ① 0년-4년 ② 5년-9년 ③ 10년-19년
④ 20년-29년 ⑤ 30년 이상

※ 다음 각 문항 중 평소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하나의 답을 골라 ✓표 하여 주십시오.

2.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2-1.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안다. ⑤ 매우 잘안다.

2-2.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지역의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생활안전

생활안전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이 추진해야 할 지역순찰 및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3-1.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3-2.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생활안전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3-3.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떤 범죄로부터 가장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폭력 ② 절도 ③ 살인 ④ 성폭력 ⑤ 기타()

3-4. 현재 거주지역에서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필수응답)

- ① 주거지역(일반 주택가, 아파트 단지, 원룸·다세대 주택 밀집지 등)
② 교육지역(학교 주변, 학원가 등)
③ 상업지역(대형 백화점·마트, 주요 쇼핑지역, 귀금속 상가 등)
④ 유흥·번화가(주점·음식점 밀집지역 등)
⑤ 교통시설 주변(버스정류장 인근, 주차장, 지하도 등)
⑥ 공업지역(공장 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⑦ 공원지역(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
⑧ 관광지역(우리 지역 내 주요 관광지, 국립·도립·시립·군립공원 등)
⑨ 외국인 밀집지역

3-5. 현재 거주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찰관의 순찰 강화
- ②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CCTV, 비상벨,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등)
- ③ 주민참여 치안활동(범죄 취약지 합동순찰, 순찰장소 선정 참여 등)
- ④ 범죄예방 홍보·교육 강화(최근 발생하는 범죄유형과 예방법 등)
- ⑤ 생활안전 위협시설 지도 단속
- ⑥ 기타()

3-6. 현재 거주지역 생활안전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범죄예방진단
-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③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조지원,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 ④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 ⑤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 ⑥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3-7.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 순찰 등 공동체 치안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여건이 되면 참여하겠다. ③ 관심없다.

4. 교통안전

교통안전은 지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지도·지원,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자치경찰이 추진해야 할 교통안전 활동을 의미합니다.

4-1. 현재 거주지역의 교통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4-2.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교통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4-3. 교통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
② 신호기, 횡단보도 미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
③ 교통단속 활동 및 장비 부족
④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의 이륜차 법규 위반
⑤ 기타 ()

4-4. 도민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음주운전
② 보복·난폭운전
③ 불법 주정차
④ 과속·신호위반
⑤ 보행자 무단횡단
⑥ 기타 ()

4-5.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 위반 단속(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② 교통안전시설 개선(신호체계 개선, 야간에 눈에 잘 띄는 횡단보도 확대 등)
③ 교통안전 예방 활동(출·퇴근 시간대 교통관리 등)
④ 교통안전 교육·홍보·캠페인(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많은 곳 등)
⑤ 교통약자 보호 강화(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관련시설 정비 등)
⑥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4-6.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강화
- ②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 ③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 개선
- ④ 어린이 등하굣길, 노인시설 주변 보행로 등 안전 활동 강화
- ⑤ 교통안전 홍보·교육·캠페인
- ⑥ 기타 ()

5. 사회적 약자보호

사회적약자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치경찰이 이들에 대해 한 보호 및 학대, 폭력, 성폭력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1.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불안하다. ⑤ 매우 불안하다.

5-2.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5-3.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 필수응답)

- ① 아동학대 ② 성범죄 ③ 가정폭력 ④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 ⑤ 노인학대 ⑥ 장애인 대상 범죄

- ①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신속한 수사
- ② 불법촬영 안심구역 설치 등 정책 추진
- ③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④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⑤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교정프로그램 운영
- ⑥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⑦ 기타 ()

- ① 법률상담 지원
- ② 심리상담 지원
- ③ 금전 등 물질적 지원
- ④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 ⑤ 가해자로부터 보호조치

- ①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 ② 사회적 약자(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활동
- ③ 교통안전 활동

| |
|--|
| |
|--|

265

집필자

연구책임자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이흥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혜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목소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김양현 신라대학교 교수
김영식 서원대학교 교수
이상훈 경성대학교 교수
조 성 원광대학교 교수

전략연구 2023-06

주민수요에 부응한 충남자치경찰의 전략과 과제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041-840-1114(대표)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ISBN 978-89-6124-654-5

© 2023.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